# 국제개발협력

2007년 제3호

한국국제협력단

# ‖목 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I. ODA 논단

1. 항공권연대기여금의 해외 사례 ····· 7
윤나미 / KOICA 정책연구원

2. KOICA 환경사업 평가와 발전방안 ····· 17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리 : 이택근 / KOICA 사업평가실

## II. 개발협력 동향

### 1. 국내동향

ㅇ 국제개발협력학회 창립 ····· 47
ㅇ 한국의 ODA 철학 및 기본 정책문서 정책 토론회 ····· 49
ㅇ 한국 ODA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 52

### 2. 국제동향

⑴ OECD/DAC

ㅇ 원조 증액 및 배분에 관한 DAC 특별회의 ····· 54
ㅇ 제2차 OECD 개발원조 정책대화 개최 결과 ····· 58
ㅇ 개발원조위(DAC) 개발 평가 네트워크 회의 결과 ····· 64

⑵ UN

ㅇ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대화 총회 개최 결과 ····· 69
ㅇ UN MDGs 중간보고 대회 결과(필리핀) ····· 76
ㅇ UN ESCAP과 개발협력 ····· 79

⑶ 수원국 원조동향

ㅇ 라오스 원조동향 ····· 86
ㅇ 스리랑카 원조동향 ····· 92

# ‖목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Ⅲ. ODA 관련 국제회의


1. 제3차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 총회 ····· 99

○ 개요 ····· 99
○ 연설문 ····· 100
반기문 / UN 사무총장
송민순 / 외교통상부장관
○ 발표 자료 ····· 104
– Major Achievements and Reflections on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2. 제2차 OECD 개발원조 정책대화 ····· 117

○ 개요 ····· 117
○ Issues Paper ····· 118

3. ODA 국제 워크숍 ····· 136

○ 개요 ····· 136
○ 발표 자료 ····· 137
– Strategies on Raising Public Awareness in South Korea: How to build public and political support for development assistance


## Ⅳ. KOICA 업데이트


1. 2007년 세계빈곤퇴치를 위한 "1017 화이트밴드 콘서트" ····· 159
○ 개요 ····· 159
○ 연설문 ····· 160
신장범 / KOICA 총재

2. KOICA – 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 모의국제연합 제31차 총회 ····· 161
: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향한 공적개발원조(ODA)

# I. ODA 논단

1. 항공권연대기여금의 해외 사례
윤나미 / KOICA 정책연구원

2. KOICA 환경사업 평가와 발전방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리 : 이택근 / KOICA 사업평가실

# 항공권연대기여금의 해외 사례

윤 나 미 / KOICA 정책연구원

## I. 항공권연대기여금의 배경

### 1. 혁신적개발재원에 대한 논의의 발전

개발협력의 역할은 개도국으로 하여금 빈곤과 성장 사이에 존재하는 악순환고리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조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며 특히 혁신적 추가 개발재원이 요구되고 있다.

2000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천년개발선언"이 채택되고, 2001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천년개발목표(MDGs)가 채택되었다. 이 후 국제사회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재원조달 없이는 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가적인 개발재원의 조건은 예측 가능하여야 하고, 안정적인 재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ODA는 역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ODA의 변화(volatility)는 개도국의 GNP 변화의 4배만큼이나 컸다. 이것은 공여국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항상 변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이유에서인데, ODA의 변동(fluctuation 또는 volatility)은 결국 원조의 불예측성을 가져와 원조의 효과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2002년 몬테레이에서 열린 개발재원회의에서는 ODA 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여국은 GNI 대비 0.7% 목표달성과 추가적 자원제공을 약속하였고, 2004년 브라질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최빈국의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혁신적 개발재원 발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어 2005년 9월 뉴욕선언서가 채택되면서, 혁신적 개발재원의 하나로 항공권연대기금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각국의 동참을 권고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47개국 중 28개국 국가가 동 선언을 지지하는 등 개도국의 기대와 참여도 컸다.

이후, 항공권연대기금 외에도 세금회피(Tax Haven) 및 자본도피(Capital Flight) 방지, 국제금융거래세를 통한 개발재원 (Currency Transaction Development Levy), 개도국 출신 이주자의 송금비용 절감 (Migrants Remittances), 무기거래세, 기후 ·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개발재원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 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 2. 왜 항공권인가?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은 세계화로 인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화는 국제적인 항공운송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이용객의 증가가 주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으며, 국가간 교류확대의 주된 수단이 각국의 항공산업이었다. 이 점에서 국제항공산업은 세계화에 기여한 최대 요인인 동시에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항공권에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혁신적 개발재원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인 안정성 및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전세계 항공산업은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8% 성장하였으며, 향후 2015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연간 5%의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비교적 적은 금액의 부과로 항공산업 및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산업 및 관광산업이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한 몫을 하였다. 덧붙여, 항공권을 발매할 때 가격에 항공안전비용 등 일정 비용을 추가하여 부과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매우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개도국의 빈곤지속은 국제적 정세불안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에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된 테러가 20세기를 전후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공여행 및 항공산업은 국제적 테러의 일차적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대응도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이면서도 빈곤퇴치를 통한 국제정세안정화라는 범세계적 공통목표에 가장 근접한 집단으로서 항공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데에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 II. 우리나라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도입

ODA 규모가 비교적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ODA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전략적이어야 하고, 우리 원조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동시에, 2006년 3월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고, 최빈개도국의 질병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동 기여금의 도입이 논의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5년 9월 유엔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빈곤과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약속하고, 2006년 1-2월 6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우리나라 항공권연대기여금의 명칭이다.

곧이어, 2006년 3월,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발표 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도입 의지를 표명하고 2007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2007년 9월,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에 따라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연간 재원은 항공편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출발하는 승객에게 1,000원을 부여함으로써 생성되며, 동 시행령은 기여금에 대한 자세한 운영관리기준, 기여금 부과 및 징수업무의 대행, 기여금계정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 설립을 명시해 놓았다.

## III. 항공권연대기여금 해외 사례

엄밀히 말해, 항공권에 부과되는 모든 기여금이 항공권연대기여금(Solidarity Levy)은 아니나, 여기서는 개발재원으로서 항공권에 부여되는 기금의 사례를 다루도록 한다.

### 1. 프랑스

#### 가. Civil Aviation Tax

■ 프랑스는 시락 대통령의 강한 정치적 의지로 항공권연대기금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현재 이 혁신적 개발재원 메커니즘에 대해 리더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존 프랑스를 출발하는 국내/국제선에 차등 부과되던 Civil Aviation Tax를 2006년 7월 증액하고, 그 증액세입을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 개도국의 질병퇴치에 사용하기로 했다.

- 프랑스의 Civil Aviation Tax는 1999년 1월에 항공교통에 대한 안전 및 평등화(Safety and Security and the Equalization Tax for Air Transport)세를 대체하게 되었다.
- Civil Aviation Tax는 프랑스를 출발하는 모든 민간기에 대해 공공 항공교통회사(Air

Transport Companies)에 의해 지불된다.

■ 과세기준은 프랑스를 출발하는 모든 승객의 수와 화물 · 우편물의 용적 톤수(tonnage)이고, 세금 비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 승무원 등 비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인원, 예를 들어 항공사 팀 직원, 경찰 및 보안요원, 화물운임 요원 등
- 2살 미만의 유아
- 경유로 공항에 한시적으로 머무른 후 출발시점에 제시한 같은 항공기편으로 환승(transit)하는 승객, 화물, 우편물
- 기술적 사고 및 기후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불가피하게 착륙된 비행기에 다시 탑승하는 승객 및 탑재되는 화물 및 우편물
- 긴급환자이송 항공기와 항공운송허가관련 법에 명시된 지역 항공기는 세금징수에서 제외

■ 매달 항공사들은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에 의해 제공된 신고서(declaration form)를 그 전달의 승객, 화물, 우편물 데이터와 함께 작성한다.

- 작성된 신고서는 세금지불액(tax payment)과 함께 "Air Control and Operations Special Budget (BACEA)"의 세금징수원에게 보내지고, GRETA라고 불리는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에 의해 세금 신고와 지불이 처리된다.
-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별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항공기 종류별로 제공되는 수용량을 토대로 세금이 부과된다. 수용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항공기의 총 좌석수
  - 환승하는 탑승객의 총 좌석수 및 승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동시에 실은 항공기에 한하여 화물 및 우편물 수송에 제공되는 최대 적재량
  - 화물기의 총 화물 적재량

■ 민간항공총괄이사회(General Civil Aviation Directorate, DGAC)가 공항에 의해 제공된 항공교통량 데이터에 근거해 신고서를 관리한다.

- 세금징수율은 2003년 98.66%에서 2004년에는 99.45%, 2005년에는 99.48%, 2006년에는 99.50%이며, 2010년까지 99.7%의 징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신고서의 결함 및 관련 처벌사항은 기업에 통지되며, 기업은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제

〈표 1〉 프랑스의 Civil Aviation Tax 과세분류 및 시기별 추이

| 년도별 및 과세분류 | 1999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유럽경제지역(EEA)으로 출국하는 승객 | FRF22,90(€3,49) | €3,92 | €4,48 | €3,92 |
| 그 외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승객 | FRF38,90(€5,93) | €6,66 | €7,60 | €7,04 |
| 목적지에 상관없이 출발하는 화물 및 우편물 용적 톤수 | FRF6,00(€0,91) | €1,02 | €1,17 | €1,17 |

출하여야 한다. 최종 조사결과에 대한 심사 후, 민간항공사의 사장은 연체액과 함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영장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추가부담을 지불해야 한다.

■ 이렇게 징수된 세입은 BACEA와 공항에 사용되는 일반 국가예산으로 할당된다. 할당비율은 매년 정해지는 예산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2006년에는 BACEA에 43.7%가, 일반예산으로는 56.3%가 할당된다.

〈표 2〉 년간 Civil Aviation Tax 세입

(단위: 백만유로)

| 세입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총계 | 249.7 | 261.4 | 270.6 | 332.0 | 346.9 |

## 나. 연대기금 (Solidarity Levy)

■ 연대기금은 기존의 Civil Aviation Tax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Civil Aviation Tax와 똑같은 부과대상과 같은 세금 징수 방법 및 관리 프로세스를 공유함으로서, 추가적인 관리 및 행정비용을 제거하였다.

■ 다만, 좌석등급에 따라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고, 유럽경제국가내와 그 외 국가로 출국하는 비행에 대한 차이가 더욱 커졌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 이 세금은 승객의 최종목적지에 의해 결정되므로, 24시간 이내 환승기로 환승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표 3〉 프랑스 Solidarity Levy의 부과금액

| 목적지 및 좌석등급구분 | Economy 등급 | Business/First |
|---|---|---|
| 등급유럽경제국가 내 | €1 | €10 |
| 유럽경제국가 외 | €4 | €40 |

■ 항공사들은 매달 민간항공총괄이사회(General Civil Aviation Directorate, DGAC)에 그 전달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연대기금 지불액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프랑스에는 대략 300개의 회사가 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 민간항공총괄이사회는 연대기금을 위한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였으며, 2006년 6월에 각 항공사에 이 기금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서한과 함께 보내진다.

– 2007년 비행에 관해서, 항공사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더욱 간단한 신고서 양식이 제공될 예정이고, 전자신고를 위한 준비가 2007년 말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 매달 10일에 연대기금이 모아지며, 이 기금은 연대개발기금(Solidarity Development Fund)로 보내져 프랑스개발청(French Development Agency, AfD)이 관리하게 된다.

– 이 연대기금의 90% 이상이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재정지원에 할당되며 나머지는 IFFIm에 할당된다.

– UNITAID에 대한 지원은 부처간 조정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가 이 기금을 운영함과 동시에 결정하며, 이 조정위원회는

프랑스 외교부와 재정경제부가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 프랑스 개발청(AfD)은 이 기금을 UNITAID의 신탁이사회(Fiduciary Trustee)로 WHO에 의해 보내며, 보내는 시기는 UNITAID의 이사회와 부처간 조정위원회와 합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 2008년 9월에 이 혁신적 개발재원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정이다.

■ 프랑스는 연대기금으로 발생한 개발재원은 OECD/DAC의 ODA로 계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2006년 OECD/DAC 통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혁신적 개발재원이 전통적 ODA를 대체되어서는 안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 연대기금(Solidarity Fund)의 영향

■ 프랑스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연대기금가 항공업계에 측정가능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프랑스에 운행하는 가장 큰 항공사인 에어프랑스는 2006년 9월, 프랑스를 출국하는 비행 수가 그 전해에 비해 5.9% 증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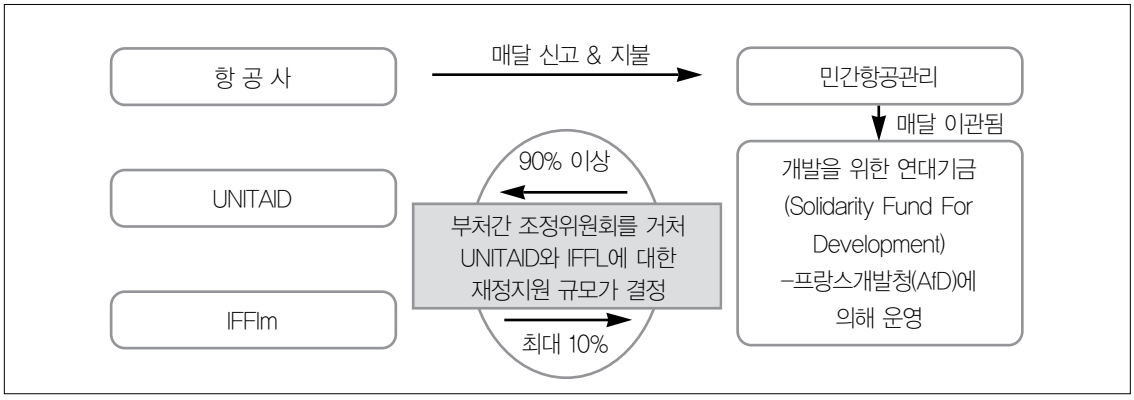
■ 프랑스는 관광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백만의 일자리와 GDP의 6.5%를 구성함), 2006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외국인의 프랑스 방문도 2.7% 증가했다.

## 2. 영국

### 가. Air Passenger Duty

■ 영국은 Air Passenger Duty가 이미 존재한다. 2007년 2월, 영국 재무장관은(당시 고든 브라운) 기 존재하던 Air Passenger Duty를 두배 인상한다고 결정하고 발표했다. 인상은 항공업계

〈그림 1〉 프랑스 연대기금 운영절차



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맞추지(Meet)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이 인상은 환경보호 뿐 아니라 경제적 · 사회적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공지했다.

■ Air Passenger Duty는 영국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든 항공권에 부과된다. 세금은 비행거리 및 좌석등급에 따라 차등 과세됨. 총 세입은 연간 2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영국 Air Passenger Duty의 과세금액

| 비행거리 및 좌석등급 | Economy 등급 | Business/First등급 |
|---|---|---|
| 국내선 · 유럽내 | £10 | £20 |
| 유럽 외 국제선 | £40 | £80 |

■ 특이한 점은, 이 Air Passenger Duty가 항공여행을 하는 개인(passengers)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airlines)에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이 세금을 항공사가 부담할 것인지 개인 승객들에게 부담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결정권이 있다. 물론, 대다수의 항공사들은 승객에게 부과하고 있다.

■ 몇몇 항공사들은 이 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으나, 높은 세율의 세금을 거두는데 특별히 과도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영국 공항들 또한 단순히 세금의 증가로 항공여행자 수가 줄 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 모든 항공사(영국에 지사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는 모든 승객이 영국을 출국하기 전 세금을 걷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항공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승객 중 일부는 이 세금을 내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많은 항공사들이 그들의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세금에 대해 홍보하기도 하고, 승객의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공항에서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구현되었다.

## 나. UNITAID 재정 지원

■ 영국은 Air Passenger Duty의 재원을 UNITAID에 직접 공여하지는 않으나, UNITAID에 향후 20년간 예산 지원을 하기로 천명하였다. 프랑스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영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된다.

- 영국은 2007년에 2.6천만 달러를 UNITAID에 기여하고, 2008년에는 4천만 달러를, 2009년에는 7천만 달러를 기여하기로 공약했다.

■ 그러나 실상, 영국의 UNITAID 장기 재정지원 서약은 프랑스의 항공권연대기금 중 10%를 국제금융백신기구(IFFIm)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패키지딜(package deal)처럼 영국이 프랑스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프랑스는 영국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로 합의된 것이다.

■ 영국은 Air Passenger Duty의 일부를 국제금융백신기구(IFFIm)에 지원하고 있으나, 이 재원은 Spending Review 프로세스를 통해 국제개발부(DFID)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3. 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이미 존재하는 항공기 연료사용에 대한 세금(일명 이산화탄소세, CO2 Tax) 중 일부를 UNITAID에 할당한다. 노르웨이의 CO2 Tax는 국내선의 연료사용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의회(Parliament)에서 매년 책정된다.

- 국내선 여객기 항공유에 부과하는 이산화탄소세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07년간 CO2 Tax 총세입은 2.1천만 달러, 2006-2007년간 CO2 Tax의 총 세입은 220NOK (약 4천만달러)로 예상되며, 이 중 UNITAID에 2.5천만 달러를 기여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2008년-2009년에는 연간 2.2천만 달러를 UNITAID에 기여하기로 공약했다.

- 노르웨이는 현재 이 CO2 Tax의 목적에 대해 유일하게 UNITAID에 대한 재정적 기여만을 명시해 놓고 있다. CO2 Tax의 잔여분(UNITAID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뺀 나머지)에 대한 특별한 사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노르웨이의 UNITAID에 대한 재정적 기여는 ODA로 계상되었다.

■ 노르웨이는 이미 GNI대비 ODA비율을 0.7%로 맞춘지 오래되었으며, 2007년에는 노르웨이의 ODA는 GNI 대비 0.97%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혁신적 개발재원에 대해 왕성한 리더십을 보이며 적극 참여하고 있다.

■ 노르웨이는 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재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고, 많은 국가들이 항공권연대기금에 참여하는 바, 노르웨이 정부도 이 기금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 또한,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혁신적 개발재원 3차 총회에서 노르웨이는 조세회피(Tax havens)와 자본유출(capital flights)에 대한 Task Force를 주관하겠다고 천명하고, 이 분야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4. 칠레

■ 라고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공약함으로서 시행이 추진되었다. 칠레를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하며, 기존 공항세(관광진흥기금 2달러)에 추가로 모든 국제선 항공권에 2달러를 부과한다. 즉, 기존 공항세를 상한 조정한 것이다. 세입은 년간 총 5백만 달러 이상이 예상된다.

■ 현재 이 기금은 모두 국제의약품구매기구

(UNITAID)에 기탁하며, 2-3년 후에는 라틴 아메리카 빈곤퇴치에도 이 기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 약 6백만 달러를 UNITAID에 기여했다. UNITAID에 대한 재정기여공약(contract) 상에는 2008년, 2009년 모두 3백5십만 달러씩을 UNITAID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다.

■ 직접 영향을 받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항공권연대기여금 출연을 위한 공상세 인상 조치에 기꺼이 협조하겠다는 의견이 주류이다. 다만, 칠레 항공산업협회, 관광업체 등의 반대에 대해 정부는 민간항공업계가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임을 들어 긍정적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정부관계자, 특별실무그룹, 찬반 NGO 대표들이 참가하는 비공개 워크샵을 개최하고 정부홈페이지에 홍보코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5. 브라질

■ 룰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도입 공약이 있었고, 2004년부터 혁신적 개발재원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브라질 출발의 모든 국제선 항공권이며, 국제선 항공료에 2달러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 년간 세입은 1천~1.2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세입은 HIV/AIDS, 결핵 및 전염병 퇴치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이중 대부분을 UNITAID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이미 2007년에 1천만 달러를 기여하고, 2008년 및 2009년에도 각각 1천만 달러를 기여할 것임을 공약한 바 있다.

〈표 5〉 항공권연대기여금 해외사례 요약

| 국가 | 국내선 | | | 국제선 | | | 예상세입 |
|---|---|---|---|---|---|---|---|
| | Eco. | Biz. | First | Eco. | Biz. | First | |
| 브라질 | - | - | - | $2 | $2 | $2 | $10-12백만 |
| 칠레 | - | - | - | $2 | $2 | $2 | $5백만 |
| 사이프러스 | €1 | €1 | €1 | €1 | €1 | €1 | €1백만 |
| 코트아부와르 | - | - | - | €3 | €7 | €14 | $1.5백만 |
| 프랑스 | €1 | €10 | €10 | €4 | €40 | €40 | €1.6-1.8억 |
| 가봉 | - | €2 | €2 | - | €2 | €2 | |
| 요르단 | $1.1 | $1.1 | $1.1 | $1.1 | $1.1 | $1.1 | $1백만 |
| 마다가스카르 | - | - | - | €1 | €2 | €2 | |
| 모리스 | - | - | - | €1 | €2 | €2 | $1백만 |
| 니제르 | €0.76 | €3 | €3 | €3.8 | €15 | €15 | |

### 6. 요르단

- 압둘라 국왕의 지침에 따라 법안 의회 계류중임. 요르단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하며, 모든 승객 대상으로 1디나 (약 US$1.4)를 부과한다. 조속 추진하라는 국왕의 지침으로 2006년 4월 관련법안 각료회의를 통과했다. 재무부 산하 특별기금에 적립하여 수시로 유엔 관련기구와 협의하여 지출을 결정한다.

- 국왕의 특별지시가 있었고, 해외여행을 하는 부유층에서 소액을 부과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분도 있어, 국내적으로 반대의견이 별로 없으며, 별도의 홍보계획도 없다.

## IV.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항공권연대기여금은 지역별로 참여국가의 차이가 확연하다. 리더십은 서유럽 및 북유럽국가가 갖으며, 라틴 아메리카의 브라질 및 칠레가 주도적으로 시행중이다.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진행중이고, 북미(미국,캐나다) 및 일본은 참여의지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항공권연대기여금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의 많은 경우는 전통적 방법의 ODA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항공권연대기여금의 부여대상 및 목적이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치적 이유로 참가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편, 항공권연대기여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기존에 존재하는 세금이나 세금 방식에 추가로 증액하는 경우로 새로운 세금을 운영하기 위한 추가비용 및 관리요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항공권연대기여금의 탄생 및 운영이 UNITAID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자금을 유연하게(flexible)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프랑스, 우리나라:예정)도 있다. UNITAID 뿐 아니라 개도국의 질병퇴치 및 빈곤퇴치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동 기여금은 구식민지 국가가 다수인 아프리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려되었다. 또한, 항공권연대기금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정부는 부정적 항공업계에 대해 항공운임의 낮은 가격탄력성 등으로 문제없음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브라질, 칠레 등 관광업계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도 항공권연대기금이 항공업계 및 관광업계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연대기금이 항공업계나 관광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 KOICA 환경사업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정리: 이 택 근** / KOICA사업평가실

## Ⅰ. 평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아젠다 21」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인류사회의 발전이념으로 부각되면서 환경보전은 전지구적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악화일로에 있는 환경문제 해결 방안 등을 포함한 「WSSD이행계획」의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빈곤퇴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각국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2002년 UN 「밀레니엄 개발선언」의 「밀레니엄 개발목표」의 하나로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채택하여 환경보전의 세계적 규범을 제시하고 각국의 참여와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처럼 환경보전은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지구차원의 과제로 부상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구차원의 환경보전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통하여 환경분야 프로젝트를 전개해 왔다. 2000년대 들어 환경분야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양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환경분야 무상원조 사업은 환경보전과 경제 · 사회발전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환경악화가 대부분 개도국의 빈곤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속발전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환경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중요성과 수요는 점증하는 추세이다. KOICA에서도 2000년대 들어 지구환경보전의 국제적 노력

에 부응하여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2005년 기준, 전체 사업비의 13%, 2006년 기준, 전체 사업비의 16.1%),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포함한 환경 분야의 해외협력사업은 수원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보전, 환경산업의 해외진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의 환경정책과 환경산업의 필요, 환경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내수요와 수원국의 수요를 결합하여 양국에 상호이익이 되는 "win- win" 전략에 기초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존의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은 국내 환경 분야의 정책적, 산업적 수요 및 여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였다.

또한 환경 분야 사업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수원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기술전수 또는 물자를 공여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관련 정책과 제도의 경험을 전수하고 수원국의 환경관리능력을 개발하는 영역으로 확장될 점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환경 분야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과정, 절차 및 내용, 사업의 성과, 확산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환경 분야 사업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환경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Ⅱ. 평가 목적

본 평가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 수행한 환경 분야 프로젝트 사업이 수원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이 수원국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환경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전방향과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평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목적을 두고 있다.

- 환경 분야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와 목표달성도 확인, 사업수행계획 타당성 평가, 집행전략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 중장기 환경 분야 전략 및 비교우위 분야의 협력사업화 방안 수립

– 사업평가결과 및 자료에 근거한 환경 분야 전략개발
– 사업타당성, 집행효율성, 성과효과성,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수립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경험전수를 위한 환경 분야 협력사업 모델 개발

■ 환경 분야 프로젝트 수행 가이드라인 제시
– 선진원조국 환경 분야 사업현황 및 사업선정 기준조사
– 환경 분야 사업추진절차 가이드라인 제시

## Ⅲ. 평가 방법

### 1. 평가 대상

본 평가는 지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수행해온 3개국 5개 환경 분야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한 · 중 황사 관측망 구축사업
–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5개 지역)
– 중국 밀운저수지 보호림조성사업
– 베트남 산업오염방지 지원사업
– 미얀마 중부지역 산림녹화사업

### 2. 평가 방법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통일된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관련 문헌조사, 설문조사, 현지조사 및 국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다. 평가 지표는 UN 등 국제기구, KOICA의 자율평가지침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성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조림분야 등 환경 분야 프로젝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 사업선정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합리성
– 사업 추진의 효율성
– 사업 추진의 효과성
– 사업 성과의 파급효과
– 사업 추진의 지속성
– 사업의 참여도

#### 가. 문헌 및 문서조사

– 2001~2005년 기간 중 실시한 환경 분야 5개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절차, 내용 및 성과 검토
– 환경 분야 등 협력사업평가 문헌 검토
– OECD 회원국의 해외 협력사업 동향 조사

#### 나. 설문지 조사

1) 조사의 목적

KOICA에서 진행한 환경분야 프로젝트 수혜국의 관련기관의 담당자 및 참여자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한 인식을 조사 · 분석하여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 도출의 근거로 삼고

자 한다.

2) 설문 대상

본 조사는 수혜국 관련기관의 프로젝트 담당자 및 참여자, 그리고 연수 참가자에 대하여 구분없이 실시한다.

3) 설문지 종류 및 내용

설문지 종류는 해당 프로젝트 평가에 관한 설문지와 관련 연수교육 평가에 관한 설문지의 2가지 종류의 설문지로 구성된다. 설문대상의 일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한 심층적인 직접인터뷰 및 관찰을 통해 설문을 보완한다.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에 관한 설문지 | 연수교육에 관한 설문지 |
|---|---|
| 실시현황에 대한 평가<br>만족정도<br>사회적 효과에 대한 평가 | 실시현황에 대한 평가<br>연수교육의 만족정도<br>KOICA에 대한 평가<br>사회적 효과에 대한 평가 |

## 다. 현지 조사

1) 조사대상 국가 : 중국, 베트남

2) 조사대상 지역

2001년에서 2005년에 수행된 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북경밀운수원지, 서부조림사업(내몽고 통료, 감숙성 백운시, 귀양시 3곳), 황사관측소(대련시, 통료시 2곳), 베트남 산업오염방지사업 등 7곳 및 중국 임업국, 중국기상국, 북경시 임업국 등 사업주관 정부부처

3) 조사방법

- 현지 조사대상국의 사업주관 정부관계자 면담
- 사업현장 방문 현장관찰 및 사업담당자 인터뷰
- 준비된 체크 리스트와 질문지에 따라 조사

4) 조사 내용

-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에 대한 현장관찰
- 프로젝트 성과 및 관련 기자재의 유지관리 및 활용 실태
- 프로젝트 사업 담당자 및 연수자의 사업에 대한 인식, 만족도 및 개선점에 대한 의견 수렴

## 라. 국내 전문가 인터뷰 조사

1) 조사 대상

- 프로젝트에 참가한 담당자 및 전문가
- 환경 분야 해외협력 관련 전문가

2) 조사 내용

- 프로젝트 성과,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인식
- 프로젝트 추진과정 및 절차의 문제점
- 향후 프로젝트 발전방향 및 추진방안

# Ⅳ. 평가 결과

## 1. 환경분야 사업 평가

1999년 이후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공적개발사업은 KOICA의 주관아래 주로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양자간 협력사업(bilateral cooperation)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사업초기에 환경 분야의 사업은 주로 연수생초청과 전문가 파견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들어 프로젝트 사업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환경 분야 프로젝트 사업은 주로 아시아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지원금이 지난 7년 동안 전체 환경 분야 프로젝트 사업의 65%(1999~2005년 누적)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 프로젝트 사업평가 결과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분야 협력사업은 대부분 프로젝트형 사업인바,향후 수원국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제도 및 자원의 재분배 등으로 사업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원국의 환경정책은 빈곤탈피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개발, 이용 및 관리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환경분야 협력사업은 개발분야의 협력사업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프로젝트 사업 추진시, 정책대화를 실시하여,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들이 사업 선정, 계획, 추진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발협력사업에 연구기관, 기업, NGOs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ODA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 나. 연수생 초청사업 평가

5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연수생 초청 사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수생 초청 사업을 평가한 결과, 연수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은 대체적으로 적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수내용의 난이도 적정성”, “연수기간 및 시간 배분의 적정성”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연수생의 실력에 비하여 강의 수준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연수교육과정을 난이도를 기준으로 여러 단계로 나누고 연수내용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연수생의 실력을 고려하여 연수 기간 및 시간의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강사진의 전문성”, “강사진의 강의 실력”, “동기유발 및 참여 유도”에 대한 평가는 높게 나와 강사진의 교수 기법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제공된 교육장 시설 및 이용환경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나타났으며, 연수생 초청 사업을 통하여 수원국 국민의 행복 또는 국가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원대상 환경분야의 진흥/육성에

대한 기여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 Ⅴ.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발전 방향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사업성과는 저개발국 또는 개도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혜국의 환경보전과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 그리고 공여국의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와 공헌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성과의 극대화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확대발전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특히 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무상원조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이는 특히 OECD/DAC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비교 검토하여 환경 분야 공적개발사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는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SWOT을 토대로 사업의 비전과 목표, 수행 원칙, 추진 전략, 주요사업, 실행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SWOT 분석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유상원조사업과 KOICA의 무상원조사업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1991년 KOICA의 출범이후 무상원조로 추진되어온 환경 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만 SWOT 분석을 진행한다. 공적개발원조의 국내외 여건 변화, 국내 공적개발원조 역량,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력의 현황 등에 근거하여 협력사업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및 위협(Threat)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SWOT 분석결과는 협력사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및 주요 협력사업의 도출에 활용될 것이다. SWOT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강점(Strength) 요인]

-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며 공적개발원조사업의 대상인 개도국 및 저개발국과의 사회경제적 교류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환경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 2000년대 들어 환경 분야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 지난 15년간 KOICA에 의해 무상원조사업이 실시되면서 상당한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 개도국과 저개발국에 전파하여 적용할 수 있

는 빈곤극복과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룩한 우리나라만의 성공적인 환경보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 환경기술 분야에서 후발주자의 개도국과 저개발국이 필요한 선진적인 오염처리기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환경보전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표 1〉 환경 분야 협력사업 비전과 추진전략

| SWOT 분석 | | | |
|---|---|---|---|
| 비 전 | 건강하고 안전한 지구환경 구현 | | |
| 목 표 | MDGs 실현을 통한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기여<br>환경선진국가 이미지 형성 및 신뢰관계 구축<br>개도국과 저개발국의 지속가능발전 유도<br>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 | |
| 추진원칙 | 주인의식(Ownership)<br>능력배양(Capacity Building)<br>성과중심 (Results-Oriented)<br>실현가능성 (Real Possibility)<br>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및 전파 (dissemination)<br>참여 (Participation) 및 파트너십 (Partnership) | | |
| 추진전략 | 추진전략지역별 / 국별 협력사업 수행<br>통합적 접근을 통한 복합효과 추구<br>참여주체의 다양화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br>국제환경협력 및 국내환경산업의 수요와 연계 강화 | | |
| 대상 지역 및 국가 | A 그룹(핵심협력) | 동북아, 동남아 |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
| | B 그룹<br>(전략협력) | 서남아, 중동,<br>중앙아시아,<br>아프리카,<br>남아메리카 | 파키스탄, 이란, 코스타리카,<br>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br>이집트, 나이지리아, 케냐,<br>탄자니아, 페루 |
| 중점협력 분야 | 지역별 /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 및 주요사업 | | |
| 추진체계 | 실행기반 구축 | | |

[약점(Weakness) 요인]

- OECD/DAC의 여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공적개발원조의 원조재원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 환경 분야의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무상원조 사업간 유기적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분절적으로 수행되어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 사업추진방식에 있어서 프로젝트형 사업을 분산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지구, 지역 및 주요국가의 주요 환경현안 및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력의 중점사업과 수요와 연계가 부족하며, 환경산업 등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과 환경NGO의 해외활동을 위한 지원역할이 사실상 부재하다.

-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사업내용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추진체계상 환경 분야 협력사업 고유의 기획, 사후관리 및 평가가 미흡하다.

[기회(Opportunity) 요인]

- 새천년개발목표(MDGs)로서 '지속가능한 환경확보'가 명시되는 등 환경 분야 원조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국내적으로도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환경 분야 협력사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다.

- 지구 및 지역차원의 환경협력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의 위상이 강화되고 다자간 양자간 환경협력사업이 다양한 차원에서 활성화되면서 원조사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와 경제적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환경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중국, 동남아시아 등 후발개도국의 환경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들 국가에서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도입으로 친환경적 개발이 진행되면서 수원국의 빈곤과 질병퇴치, 자원의 이용과 관리 분야에서 환경 분야와 개발 분야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업추진을 요청받고 있다.

[위협(Threats) 요인]

-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공적개발원조의 국내 경제적 토대가 약화되고 있으며, 국민적 지지와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노령화사회 대처,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 분야와 남북협력의 진전에 따른 남북관계 분야에서 재정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적개발원조의 재정축소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의 위상과 개도국 및 저개발국과의 교역이익에 부응하는 국제적 책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기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물자 및 기자재 공여위주의 프로젝트형 사업에서 탈피하여 협력사업의 방식과 유형의 전환이 필요하다.

- 환경 분야가 개발사업 분야로 다루어지면서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환경 분야 원조사업의 시장에서 선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 2.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기본 구상

### 가.비전과 목표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의 수행과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비전과 목표는 첫째,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와 국제협력사업에서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위상정립을 통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의 정책방향과 목표와 일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여건 및 이익에 부합하는 한국형 환경분야 협력 프로그램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위상과 그에 따른 역할은 무엇인가. 환언하자면 환경 분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 분야 협력사업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지구환경보전을 국제적 활동의 주요사업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즉 환경 분야 협력사업은 환경오염의 악화, 생태환경의 파괴, 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구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치에 걸 맞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의 책무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제사회의 환경현안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 환경선진국가로서

의 국제적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구, 지역 차원의 환경보전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환경 분야에서 선진화된 국가이미지는 단지 환경 분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품교역, 투자, 교육, 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 직간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또한 지구환경문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신뢰받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MDGs와 같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국제사회에 널리 거양하고 홍보함으로서 이러한 이미지 형성과 신뢰관계 구축을 도모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빈곤과 질병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여 이들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뒷받침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교역확대 및 에너지와 원자재를 확보하는 등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파급효과를 얻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이들 수원국은 환경, 빈곤, 경제의 문제가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분야 협력사업과 경제 분야에서의 개발과 협력사업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위상을 가지고 있다. 환경시장은 주로 관련정책의 시행에 의해 창출되기 때문에 정책의존성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다. KOICA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을 통해 수원국에게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발 지원하여 환경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사업은 협력사업의 결과물로 창출된 수원국의 환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위상과 역할에 대한 설정으로부터 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 분야 무상원조사업의 장기 비전은 '건강하고 안전한 지구환경 구현' 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환경 분야 무상원조사업의 목표로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환경선진국가 이미지 형성 및 신뢰관계 구축,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지속가능발전 유도,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4가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수행 원칙

KOICA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고려 또는 준수해야할 6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주인 의식(Ownership) : 수원국의 환경보전의 궁극적인 책임은 수원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기관 및 국민들에게 있으므로 원조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보장하고 배양하는 것을 사업수행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수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원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함으로서 수원국의 자발적인 적극성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수원국 스스로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이 없이는 수원국의 환경보전에 원조사업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성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환경 분야 원조사업의 계획 및 이행과정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기본원칙으로 준수될 필요가 있다.

■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 원조사업의 성과는 수원국의 관련 주체의 실행력과 관리능력에 의해 원조사업의 집행과 성과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환경보전능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환경 분야 원조사업이 수원국의 환경보전과 환경정책 발전에 미치는 기여효과는 주인의식과 같은 주관적 요인뿐만 아니라 수원국 국내의 제도, 정책, 기술수준, 관리능력, 인적자원 등 객관적인 요인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성과중심(Results-Oriented) : 원조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원조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얻고자 하는 원조성과에 근거하여 원조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 분야의 원조사업은 수원국내의 환경보전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성과달성에 중심을 두고 목표, 목표 달성수단, 효율적인 실행관리체계 및 사업수행의 주체별 역할과 책임소재 등 원조사업의 수행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실현가능성(Real Possibility) : 원조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는 사업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 가운데 하나이다. 수원국의 여건은 원조사업의 실행과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원국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원국의 환경보전 정책과 우선사업에 적합한 차별화된 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의 준수를 통해 제한된 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수원국의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여 원조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전파(dissemination) : 환경보전사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 없이는 확보된 성과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상호 밀

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또는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환경 분야 원조사업은 사업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전파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참 여 (Participation) 및 파 트 너 십 (Partnership) : 환경보전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기업, 해당지역 주민, NGOs 등 이해당사자들의 공동의 참여와 합리적인 역할분담에 기초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주민의 참여 여부는 환경보전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경 분야 원조사업은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파트너십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다.추진 전략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추진 전략은 UN MDGs의 실현하고 OECD/DAC 및 각국의 환경과 개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OECD/DAC에서 강조하고 있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원조 원칙, 빈곤과 환경의 상관성, 수원국의 능력배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여타 개발사업과의 상생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KOICA가 수행해 온 기존의 협력사업의 평가를 통해 도출된 미비점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협력사업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별/국별 협력사업 수행]**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사업별 사업수행 방식을 지역별/국별 원조프로그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방식과 유형을 다변화해야 한다. 기존의 사업은 KOICA에서 수립한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수원국가의 수요와 사업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근거한 지역별/국별 프로그램(Regional/ Country Program)에 기초하여 추진되기 보다는 외교적 결정 또는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된 면이 있다.

한편 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 분야의 협력사업은 다른 분야와 유사하게 특정 문제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형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진전된 후속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물론 프로젝트 사업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수원국의 유사한 프로젝트에 전파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해당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및 자원의 재분배의 영역으로 발전되기는 쉽지 않다.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의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실상 조림 후 식재의 활착상태만을 사업성과의 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에 따른 주민의 인식변화와 자원이용방식

의 전환, 소득증대, 지방정부의 조치와 예산투입과 같은 서부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인식, 제도 및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그 효과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환경 분야 협력사업은 기존의 특정문제 중심의 사업별 프로젝트형 위주에서 탈피하여 지역별/국별 사업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방식과 유형의 다변화로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수원국의 환경보전은 결국 수원국 자신이 해야 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제도와 정책에서의 연구개발, 관리 및 집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국가와 사회의 기반조성과 능력배양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 사업을 통해 개발된 인적자원에 의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환경기초시설 건설과 같은 프로젝트형 사업 영역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방식과 유형의 다변화는 중장기 지역별/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특히 보다 구체적으로 중점협력대상 개도국 또는 저발전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와 부문의 여건에 근거한 차별화된 프로그램(Community/ Sectoral-based Program)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적 접근을 통한 복합효과 추구]**

환경문제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개발과 이용의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실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환경실태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환경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사막화 문제는 사막화 지역주민들이 생존을 위한 개발과 이용이라는 인위적인 요인과 기후변화 등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인위적인 요인의 제거수단으로 초원과 경지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며, 경제활동의 내용과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원국의 환경정책은 빈곤탈피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개발, 이용 및 관리방안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

환경문제의 이러한 본질적 특성 때문에 환경 분야의 협력사업은 개발 분야의 협력사업과 긴밀히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막화방지 협력사업은 초원 생태관광개발 등과 같은 개발 분야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Integrated approach)함으로서 사막화 방지와 주민의 생존과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복합효과(multi effects)를 가져올 수 있다. 보건의료와 농업 등 여타 관련 분야의 협력사업도 환경 분야와 긴밀한 연계하여 통합추진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음용수 수자원 수질과 하천수질의 보전은 주민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 분야 협력사업과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면 음용수 및 하천의 수질은 보전하고 주민들의 건강도 지키는 복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산림, 경지, 초원,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협력 사업은 또한 농업의 생

산성 증대와 지속가능성 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을 통한 복합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개발 분야의 협력사업 가운데 지역사회의 관리능력개발 프로그램도 관리능력개발과 환경보전의 두 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산림, 수자원, 경지, 초원,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원은 개도국 농촌, 어촌 및 산촌 지역사회의 주요한 생존자원으로서 이러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자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자연자원의 관리효율을 제고함으로서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동시에 자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주체의 다양화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환경 분야 협력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 위주로 수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연구기관, 기업, NGOs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업과 주민의 참여가 관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주체의 다양화는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주체의 다양화는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협력사업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부, 기업, NGOs 등 협력주체의 다양한 참여에 기초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참여주체 사이에 유기적인 공공-민간의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구축하여 협력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환경협력 및 국내환경산업의 수요와 연계 강화]**

KOCIA의 황사공동관측망 구축사업을 비롯한 환경 분야 협력사업은 환경부 등 우리나라 관련부처 및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제환경협력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된 온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기존의 협력사업은 관련부처와 KOICA간에 국제환경협력의 수요와 KOICA 사업의 연계 전략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긴급한 수요에 부응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따라서 기존의 협력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연적 요소를 탈피하여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지구, 지역, 국가간 차원의 다자간/양자간 환경협력의 수요와 KOICA의 지역별/국가별 특성화 협력프로그램을 보다 긴밀한 연계한 추진전략의 수립을 통해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수요와 연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원국의 환경관리제도와 환경시설의 건설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사업을 KOICA가 국내 관련기관 및 기업을 통해 지원해줌으로서 국내기업의 수원국 환경시장진출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KOICA와 국내 관련기관 및 기업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 2. 지역별/국별 협력 방안

### 가. 대상 지역 및 국가 선정

미국, 일본, 독일 등 OEDC/DAC 주요 국가는 국별 원조 프로그램에 의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ICA에서 수행해온 환경 분야 협력사업은 개발협력사업 가운데 프로젝트형 사업으로서 수원국의 참여하에 수원국의 당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 원조계획 하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데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대상인 환경문제는 여타 분야의 문제와는 달리 국가간 범위를 넘어서 지역 또는 지구차원의 문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적 범위에서 국가간에 기후, 지리 등 자연적 환경과 경제, 문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그런 연유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환경문제가 지역별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지역 환경문제가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 분야의 국별 협력사업계획은 지역의 환경문제 특성과 환경 분야 협력수요를 고려한 바탕위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별/국별로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과 국가를 선정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KOICA의 원조재원은 선진국에 비해 소규모이며, 따라서 원조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수원국과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진행 현황 및 여건, 정책의지 및 수요에 근거하여 중점 협력 지역과 국가를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분야를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선정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KOICA 무상원조 대상국가 가운데 중점협력 대상 지역과 국가로 선정될 수 있는 잠재적 요건을 갖춘 지역과 국가군을 추려낸다. 다음으로 잠재적 요건을 갖춘 지역과 국가군에서 대상으로 협력사업의 내용과 수원국의 협력의지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협력 대상 지역 및 국가를 선정한다.

먼저 잠재적 대상 지역과 국가는 우리나라 환경협력 현황 및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6가지 선정기준에 따라 6개 국가그룹으로 나누어 대상 국가를 선정하였다.

첫째, KOICA 특별협력국 그룹. KOICA에서 정한 무상원조 대상국가 127개국 가운데 주요 원조 대상국가인 20개 특별협력국을 선정하였다. KOICA 전체적인 주요 원조사업 대상 지역과 국가군을 환경 분야 중점협력 대상 지역 및 국가의 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직접 환경영향국 그룹. 황사 등 우리나라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국가를 선정하였다.

셋째, 환경협정 협력국 그룹. 우리나라와 양자간 협력협정 또는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협력을 추진해 왔거나 협력의사가 상호 확인된 국가를 선정하였다.

넷째, 환경사업 진출국 그룹.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주요 진출국 또는 환경부 등이 진출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국가를 선정하였다.

다섯째, 통합접근 협력국 그룹. 환경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 농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KOICA가 원조사업을 수행해온 국가를 선정하였다.

여섯째, 경제/자원 수요국 그룹. 경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국가, 그리고 에너지 등 자원의 주요 수입 또는 개발대상 국가를 선정하였다.

한편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KOICA 무상원조 대상국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유럽, 북미 및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특성과 상호영향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지역을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KOICA의 잠재적인 환경 분야 협력사업 대상 지역과 국가는 〈표 2〉와 같이 총 8개 지역에 걸쳐 38개국이 선정되었다. 지역별로 잠재적 대상 지역과 국가수를 살펴보면 동남아시아가 잠재적 대상국이 가장 많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서남아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OICA의 무상원조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의 공적개발원조 규모와 환경 분야 협력사업이 점하는 비중을 살펴볼 때, 위의 38개 국가 모두를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망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다.

따라서 〈표 2〉에서 열거한 38개 잠재적 대상 지역과 국가 가운데에서 중점적인 협력대상 지역과 국가를 1차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할 ▲ A 그룹 : 핵심협력 지역 및 국가, 지역별 거점 확보 및 여타 사업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 B 그룹 : 전략협력 지역 및 국가 등 2가지 그룹으로 분류 선정하여 지역별/국가별 중점협력 분야와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중점 협력대상 지역 및 국가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지역과 국가는 〈표 5-4〉와 같다.

**[A 그룹 : 핵심협력 지역 및 국가]**

■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및 국가

■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상생(win-win)"의 환

경보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 및 국가

■ 환경보전 정책, 제도 및 관리능력 개발, 환경기술개발, 환경시장 창출을 통한 국내 환경산업 진출 등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수요가 많은 지역 및 국가

역 및 국가

■ 의료보건, 농업, 에너지 등 여타 분야와 연계 협력이 필요한 지역 및 국가

■ 교역/자원 등 경제 분야 필요에 따라 협력이 요구되는 지역 및 국가

**[B 그룹 : 전략협력 지역 및 국가]**

■ 환경협력의 지역 전략거점으로 육성해야할 지

〈표 2〉 38개 잠재적 대상 지역과 국가

| 분류 | KOICA 특별협력국 | 직 접 환경영향국 | 환경협정 협력국 | 통합접근 협력국 | 환경산업 진출국 | 경제 / 자원 수요국 |
|---|---|---|---|---|---|---|
| 동북아 | 중국, 몽골 | 중국, 몽골 | 중국, 몽골 | 중국, 몽골 | 중국 | 중국 |
| 동남아 | 베트남, 태국, 필리핀,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 - | 아세안 (베트남과는 개별 협정 체결함) |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 아세안 |
| 서남아 |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 - | 파키스탄 | 파키스탄, 네팔 | 파키스탄 | |
| 중앙아시아 | 우즈베크스탄 | - | na | na | na | 카자흐스탄 |
| 아프리카 |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이집트 | - | 이집트, 수단, 부룬디, 케냐 | 이집트,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 케냐 | 나이지리아 |
| 중동 | 이라크 | - | 요르단, 이란, 쿠웨이트 | na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 사우디아라비아 |
| 남아메리카 | 페루, 파라과이 | - | 코스타리카 |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페루, 콜롬비아 | 코스타리카 | |
| 동유럽 | 우크라이나 | - | na |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 na | na |

〈표 3〉 환경 분야 협력사업 중점 지역 및 국가(총 10개국)

| 그룹 분류 | 지 역 | 국 가 |
|---|---|---|
| A 그룹<br>(핵심협력 지역/국가) | 동북아, 동남아 | 중국, 몽골, 베트남,<br>캄보디아, 인도네시아 (5개국) |
| B 그룹<br>(전략협력 지역/국가) | 서남아, 중동, 중앙아시아,<br>아프리카, 남아메리카 | 파키스탄, 이란, 코스타리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br>이집트, 나이지리아, 케냐, 탄자니아, 페루 (10개국) |

## 나. 지역별 중점협력 분야 및 국가별 주요사업

### 1) 동북아시아 중점협력 분야

동북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오염물질의 국가간 이동과 같은 역내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지역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몽골에서 발원하여 장거리 이동하는 국가간 대기오염물질인 황사와 산성강하물의 피해와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상의 진행된 대형개발사업과 육상기원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해역의 생태환경변화와 해양오염에 직면해 있다. 현재 동북아 각국의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한 지역 환경 현안은 〈표 4〉와 같다.

〈표 4〉 동북아 지역 차원의 주요 환경 현안

| 대기 분야 | 해양 분야 | 기타 분야 |
|---|---|---|
| 에너지기원 국가간 이동 대기오염, 황사, 산성비 | 육상 · 선박 및 해상기원 폐수 유입, 폐기물 투기, 해양생태계 (염도, 온도) 변화 | 사막화, 산림파괴, 전자폐기물 이동오염, 국경하천 오염사고 및 수생태계 파괴 |

이러한 황사 등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각국의 정부, 연구기관, 원조기관, NGOs, 기업 등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 지역협력을 전개해 왔다. KOICA에서 수행해 온 중국서부조림사업,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사업 등도 동북아의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환경협력의 채널과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에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공통인식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다.

최근 지난 10여 간의 협력성과를 토대로 동북아지역 환경상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의 주요국가인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국가를 중심으로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 발맞추어 동북아지역에서 KOICA가 수행해야 할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중점은 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피해를 저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환경정책의 강화로 중국에 환경시장이 급성장하여 중국발 '개도국 환경특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11차 5년

(2006~2010년)의 환경계획에서 환경보전핵심 전략으로 자원순환경제를 표방하는 등 환경관련 계획과 정책을 크게 강화하고 있어 중국의 환경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도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대중국 환경협력사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두 차례의 한중 양국 정상회담(1998, 2003)에서 양국간 "환경산업 협력강화"에 합의하였고, 양국간 환경장관 회담을 통해 환경산업협력 약정체결을 체결하고 4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양국간의 합의에 따라 중국 북경시에 「한중환경산업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환경산업전시회에 참가하고 지방도시에서 우리나라 환경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환경 분야 공동기술개발사업, 환경전문가 초청연수, EDCF 시범사업 발굴 등 협력사업을 실시하여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환경산업계의 사업과 연계하여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KOICA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이 요청되고 있다. 개도국의 환경정책의 설계 및 실행, 환경설비를 지원하는 양자간 협력사업은 개도국 또는 저개발국 내에 새로운 환경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공공기관 또는 업체의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의 ODA 무상원조를 통한 환경 분야의 교육훈련, 정책지원 등 다양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수행으로 수원국 내에 이들 선진국의 환경기술과 설비 수요를 창출함으로서 자국의 환경기업체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지역에서 KOICA가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두 번째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중점분야는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과 적극 연계하여 국내 환경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자원 개발과 이용,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와 환경 분야간의 통합적인 협력사업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건조, 반건조 지대인 몽골의 남부 지역과 중국의 서북부지역은 기후적인 요인과 열악한 생태환경 등 요인과 비합리적인 수자원 개발 및 이용과 인구과부하 등 요인으로 인하여 수자원 고갈, 생태환경파괴,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자원 문제와 빈곤 및 생태환경문제는 긴밀한 내적 연관 고리를 갖고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자원 개발과 이용은 이들 지역의 빈곤문제와 생태환경 파괴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반면에 이들 지역은 풍력, 태양광 및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적 자원이 풍부하다. 취사, 난방 등 분야에서 기존의 관목 등 연료를 대신하여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여 이용하게 되면 연료채취 등 행위가 감소됨으로써 생태환경압력이 줄어들고 환경보전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보전과 수자원 및 에너지 개발 이용의 목적을 통합한 방식의 사업을

KOICA가 동북아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세 번째 분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동북아의 세 가지 중점협력 분야와 관련된 국가별 주요 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

**[중국]**

■ 동북아 환경현안 대응 분야
- 황사 관측정보공유 및 예경보 체계 구축 및 국가간 일원화 사업
- 황사 발원지 토양생태환경 관측 및 데이터 이용체계 구축사업
- 사막화방지 조림기술단지 조성사업

■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중규모 도시지역 환경계획수립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EDCF차관사업과 연계)
- 오염배출자동측정시스템(TMS) 구축 및 관련 제도 구축 사업

■ 통합적 협력 분야
- 친환경 초원관광 관리제도 구축 및 능력배양 사업

**[몽골]**

■ 동북아 환경현안 대응 분야
- 황사 관측소 설치 및 데이터 전송관리 능력배양 사업
- 사막화방지 초지복원기술단지 조성사업

■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대도시지역 환경계획수립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EDCF차관사업과 연계)

■ 통합적 협력 분야
- 지하수자원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계획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계획 수립 사업

### 2)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KOCIA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중점방향과 국가별 주요사업은 동남아의 사회경제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주요 환경현안, 우리나라와의 환경협력 현황, 환경시장 여건 및 진출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협력사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관계. 주지하다시피 동남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주요 성장지역에 속한다. 동남아시아는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아세안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5.55%의 실질 GDP성장률을 기록하였다.[1] 하지만 평균 1인당 GDP는

1) 외교통상부(2004), 아세안 경제통계(2004. 10),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1,266달러로 소득수준은 아직 빈곤층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5번째 교역국으로 2004년도에 한 · 아세안 교역액이 464억 7백 4십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대 아세안 투자액도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누적투자액이 125억 달러에 달하는 등 교역과 투자 등 면에서 주요한 경제파트너이다.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경제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제안정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 동남아 금융위기 시기에 이러한 관계를 이미 체험한 바 있듯이 동남아시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에서 KOICA 환경 분야 협력사업은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제고하여 동남아 수원국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와의 안정적인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동남아지역의 주요 환경현안. 앞에서 언급했듯이 급속한 경제성장은 동남아국가들의 환경상황을 악화시켜 왔다. 동남아국가들의 주요 환경현안인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상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무분별한 산림벌채, 이동경작을 위한 인공방화, 과도한 관광개발로 인한 육지와 연안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은 동남아국가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문화재를 포함한 경관자원, 생물다양성 등 생태자원이 과도한 관광개발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다음으로 동남아 국가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제개발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대도시 주변의 수질오염은 생활과 산업폐수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수질오염은 농업과 농촌지역에 분산된 중소산업체의 폐수에 기인한다. 그리고 동남지역의 대기오염문제를 살펴

**〈표 5〉 동남아 국가의 주요 환경 현안**

| 구분 | 주요 환경 현안 |
|---|---|
| 현안산림황폐화 / 생물다양성 감소 | 산불, 하천유역지역의 산림황폐화, 해변 홍수림 유실, 산림벌채, 이동경작, 산림 생태계 퇴화 |
| 도시대기오염 | 자동차 혼잡 및 배기, 먼지오염 |
| 계절적 스모그 / 연기 | 산불로 인한 월경성 대기 오염 |
| 토양퇴화 | 토양유실, 토양오염, 토양생산력저하 |
| 수질오염 | 수질오염, 수인성질병, 지하수오염, 산업오염, 하천유역관리, 유기물질오염 |
| 도시화 / 폐기물 관리 | 이주, 고형폐기물 오염, 위해물질/위해폐기물 |
| 해안 / 해양환경 퇴화 | 과도한 어업활동, 해안 홍수림 파괴, 산호초 파괴, 오일유출, 과도한 관광 |
| 자연재해 | 홍수 |

자료 : UNEP(2000), "Key Environmental Issues for South East Asia"

보면 가장 주요한 대기오염원은 모터사이클을 포함한 자동차와 발전소이다. 또한 일부 대도시에서는 유연연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무연연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국가와 농촌 및 중소도시에서는 아직도 유연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인체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상수도 보급률이 매우 낮아 상당수 주민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종 환경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심각한 환경현안에 대응하여 동남아 국가들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실천프로그램의 부재, 사업재원의 부족, 인적 · 기술적 측면에서 관리능력의 미비, 개발부처와 지방정부의 성장드라이브 정책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도시와 농촌지역의 환경악화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러한 동남아 지역의 환경현안 및 각국의 환경정책 실태에 근거했을 때, KOICA는 동남아의 핵심협력국과 전략협력국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국가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국가별 주요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전파, 관리시스템 및 기술능력 배양 등 분야에 협력사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동남아의 환경시장 현황 및 진출여건. 환경시장에서도 동남아 지역은 중국과 함께 이른바 '아시아 환경특수'를 창출하면서 세계 환경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2000년의 147억 달러에서 약 85.7% 확대되어 2010년에는 273억 달러 규모의 환경시장이 형성되어 세계 환경시장의 4%를 점할 것으로 예측된다. 성장률에 있어서도 중국, 중 · 동부 유럽, 인도 등과 함께 6% 이상의 고도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하수도 분야에서 2000년의 78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46억 달러로 87.2%, 폐기물 분야는 48억 달러에서 85억 달러로 77.1%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하수도와 폐기물 분야에서 105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액 126억 달러의 절대다수인 83.3%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설비, 관리운영 등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환경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정기술 및 에너지관리/재생에너지 분야는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비해, 2010년 약 3배에서 6배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수요는 동남아 국가의 경제발전의 수요와 선진국이 교토의정서 이행과 수요가 결합하여 청정개발기제(CDM)를 통해 선진국이 청정기술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동남아 국가와의 환경협력과정에서 형성될 것이다.

현재 선진국과 세계적인 환경기업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는 위와 같은 동남아 환경시장을 선점하려는 쟁탈전이 치열하다. 환경부와 국내 환경기업도 동남아 시장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과 함께 동남아시아 환경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해 베트남과의 환경협력약정체결, 한 · 베트남 환경협력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환경산업협력단 파견 및 환경산업설명회 개최 등의 사업을 전개해 왔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아세안 10개국 환경전문가를 국내에 초청하여 연수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KOICA에서도 이러한 관련 부처 등과 함께 국내 환경산업의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동남아 국가와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1차적 목적은 동남아 환경시장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기업이익을 도모하고 동남아 국가의 환경보전에 기여하는데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KOICA는 기존의 사업을 바탕으로 환경현안에 대한 국가별 지원프로그램과 결합하여 국내 환경산업의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보고인 동남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을 지원하는 협력사업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EDCF차관과의 유기적인 역할분담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계획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노하우는 KOICA 무상원조로 제공하고, 계획에 따른 환경설비투자는 EDCF 차관으로 공여하는 방식을 택하여 수원국의 원조에 대한 유인력을 높이고 정책의지를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 지속가능발전 분야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업

– 국가청정생산프로그램 개발 사업

■ 환경현안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폐기물관리계획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 도시 및 농촌 산업단지 환경관리 사업

– 도시 및 농촌지역 음용수개발 및 관리 기법 사업

– 친환경도시개발계획수립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 통합적 협력 분야

– 지하수자원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계획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계획 수립 사업

**[캄보디아]**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 및 농촌지역 수질(정수 및 하수)관리 사업

– 시엠립지역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 통합적 협력 분야

– 앙코르와트지역 문화 및 경관자원 친환경개발이용계획 수립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인도네시아]**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청정자동차보급계획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 통합적 협력 분야

– 바이오 에탄올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 산림보호기술, 산림자원조사 및 모니터링 기법,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산림의 복원 등 지원 사업

3) 기타 지역

서남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지역은 주로 각국의 우리나라와 상품교역, 투자 또는 자원개발 등 경제적 관계 및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협력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남아시아는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분야,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에너지 개발과 연계한 통합적 협력 분야,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는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분야에 관한 협력사업의 전개가 요청되고 있다.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적 거점 국가의 주요 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다.

**[파키스탄]**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기법 개발 분야

– 도시지역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청정자동차보급계획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 도시지역 수질(정수, 하수)관리기법 개발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이란]**

■ 통합적 협력 분야

– 유전지역 토양복원/수질 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기법 개발 분야

– 친환경적 관광자원개발 및 이용 분야

**[코스타리카]**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상 · 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능력 개발 사업

■ 통합적 협력 분야

–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관리 분야(과학기술부의 생물다양성 연구센타 지원과 연계)

– 친환경적 수자원 개발 및 이용 분야

**[우즈베키스탄]**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수질(상수, 하수) 관리능력 배양사업

**[카자흐스탄]**

■ 통합적 협력 분야

– 유전지역 토양복원/수질 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기법 개발 분야

– 친환경적 수자원 개발 및 이용 분야

**[이집트]**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대기총량관리를 위한 청정자동차보급 계획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 도시지역 상 · 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능력 개발 사업

**[나이지리아]**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음용수 공급 및 위생 관리 기법 사업

■ 통합적 협력 분야

–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분야

–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계획 수립 사업

**[케냐]**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수질(상수, 하수) 관리를 위한 제도 및 서비스 제고

■ 통합적 협력 분야

– 나일강 접경지역 수자원의 진환경적 개발 및 관리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의 설정 및 관리, 전략 및 action plan 개발, 연구 및 훈련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

**[탄자니아]**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수질(상수, 하수) 관리를 위한 제도 및 서비스 제고

■ 통합적 협력 분야

– 나일강 접경지역 수자원의 진환경적 개발 및 관리

– 산림 보전 및 관리

–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분야

**[페루]**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상 · 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능력 개발 사업

■ 통합적 협력 분야

–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관리 분야

## 1. 환경 분야 협력사업 수행체계

### 가. 환경 분야 협력사업 추진 기반 강화

지역별/국별 단위의 중점협력 분야 및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사업 수행 및 사업평가 등 일련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KOICA의 사업추진 기반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사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관련 부처와 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협력사업전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협력사업전문위원회(가칭)'에는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담당자, 수출입은행, 한국환경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담당자,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환경협력사업전문위원회(가칭)'를 KOICA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방향과 전략의 수립, 국별 협력프로그램의 수립, 집행 및 평가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별 협력프로그램의 수립 주체로서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별 협력팀'을 조직하고, 수원국의 환경실태, 정책의지, 협력수요 등을 조사 · 분석하여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수원국의 정부부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원국을 주체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서 협력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정책의지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수원국의 여건과 수요가 반영된 현실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협력팀'에서 수립한 계획은 우리나라와 수요국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추진하면 된다. 그런데 '국가별 협력팀'은 계획수립 후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매 계획단위가 종료될 때까지 프로그램의 수행 및 평가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나. 환경 분야 협력사업 계획 단위

국가별 맞춤형 협력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세부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획단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먼저 국별 협력계획 또는 분야별 환경계획/관리계획의 수립사업은 2~3년을 한 계획단위로 하여 2, 3년 동안 수원국의 환경 분야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수립사업은 곧바로 후속사업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소규모 시범사업을 포함한 관리능력 배양사업은 환경보전대책의 효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환경 분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어도 5년을 계획단위로 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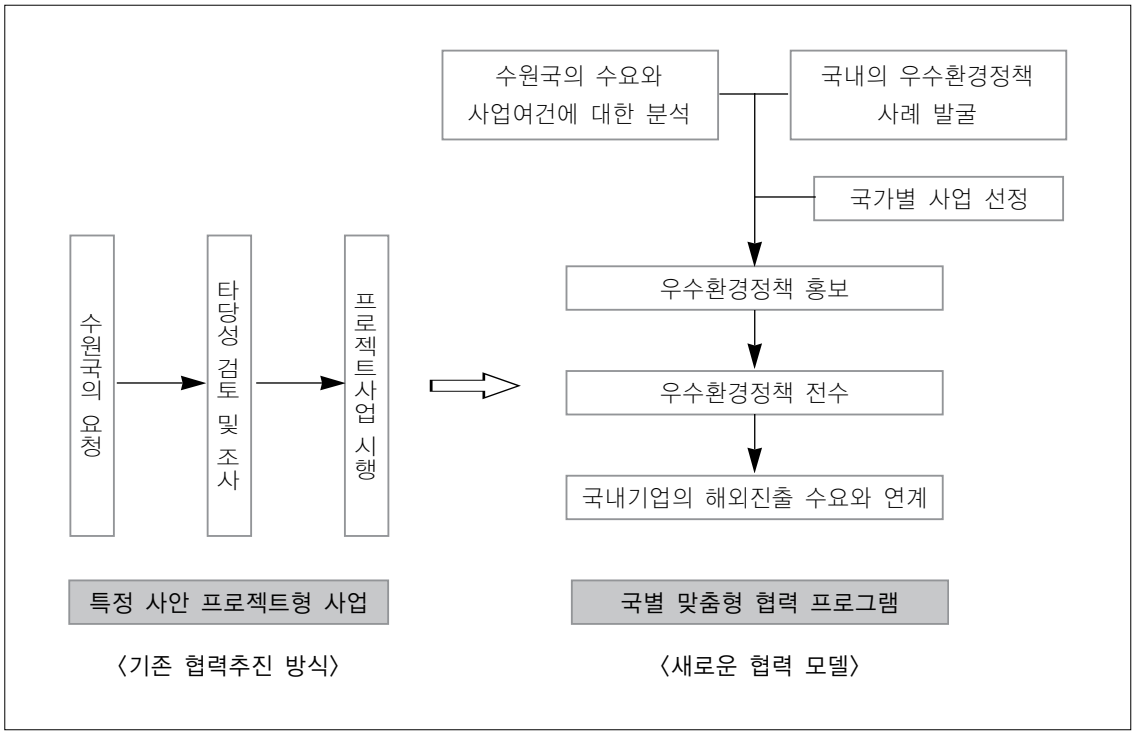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에 맞다. 그리고 국별 맞춤형 협력프로그램은 위에서 제시한 '국가별 협력팀'이 매년 연례사업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당해연도 사업을 평가하고 연도별로 수정 · 보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 4. 환경 분야 협력사업 모델

도시화 · 산업화로 인하여 다양한 환경오염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90년대 이후 새로운 환경제도들을 시행하였다. 초기단계에는 선진국의 제도를 들여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와 정책들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환경정책 사례들은 TMS(Smokestack Tele-Monitoring System, 굴뚝원격감시체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쓰레기 종량제 등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수한 환경정책을 단순히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적개발원조를 통하여 우수한 환경정책의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 및 저개발국에게 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우위를 가지는 정책들

〈그림 1〉 환경 분야 협력사업 추진체계 발전방향



을 중심으로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협력사업을 진행한다면 특정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형 사업 위주의 기존의 방식보다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KOICA를 통한 환경 분야 협력사업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수요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즉, 수원국의 환경관리제도 또는 환경시설의 건설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사업을 KOICA가 국내 관련 기관 및 기업을 통해 지원함으로서 국내기업의 수원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 Ⅱ. 개발협력 동향

## 1. 국내동향

ㅇ 국제개발협력학회 창립
ㅇ 한국의 ODA 철학 및 기본 정책문서 정책 토론회
ㅇ 한국 ODA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 2. 국제동향

### ⑴ OECD/DAC

ㅇ 원조 증액 및 배분에 관한 DAC 특별회의
ㅇ 제2차 OECD 개발원조 정책대화 개최 결과
ㅇ 개발원조위(DAC) 개발 평가 네트워크 회의 결과

### ⑵ UN

ㅇ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대화 총회 개최 결과
ㅇ UN MDGs 중간보고 대회 결과(필리핀)
ㅇ UN ESCAP과 개발협력

### ⑶ 수원국 원조동향

ㅇ 라오스 원조동향
ㅇ 스리랑카 원조동향

# “국제개발협력학회” 창립

정리 : KOICA 정책연구실

## Ⅰ. 개요

■ 일 시: 2007년 10월 19(금) 17:00 ~ 19:00
■ 장 소: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타 3층 대회의실
■ 참 석: 내외귀빈 및 학회 창립회원 등 약 120명

## Ⅱ. 진행

■ 동 학회의 창립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는 개회사, 국민의례, 경과보고, 창립발기문 낭독, 학회장 선출, 내외귀빈 축사로 진행되었고 2부에는 정관채택, 임원진구성, 사업계획보고와 함께 임현진교수(서울대학교) 신임 회장의 폐회사로 종료됨

## Ⅲ. 학회 창립 취지

■ 20세기 후반 한국은 빈곤과 저개발의 악순환 구조를 탈출하여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둘 만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한국의 고도성장은 국제사회의 경이와 찬탄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음

■ 이러한 경제성장의 발판 위에서 21세기 초입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전환기를 맞이하였음. 21세기는 우리가 아직도 가난의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타 후진국을 위해 외부로 자금을 공여하고 각종 개발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시기임

■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한국국제

협력단(KOICA)을 창설하여 국제사회의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그동안 정부차원의 공적원조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개도국 개발협력을 위한 각종 인도적 지원도 급속히 확대되어 왔음. 최근에는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개도국 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아직도 초창기에 머무르고 있음. 이제 겨우 20여년의 일천한 경험을 갖고 있고, 국민총소득 중 공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개발원조 공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2007년은 한국의 공적원조가 시행된 지 20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이제 개발협력의 성년기로 진입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새천년 문명사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21세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좌표를 정립하기 위한 진지한 학술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 인력과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담당자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협력 현장경험이 있는 실무진들을 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섭적인 학회로 창립하고자 함

■ 개발협력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학문분야를 포함하는 학제적 학회, 개발현장의 땀 냄새가 묻어나는 경험중심적 학회, 빈곤과 폭력의 아픔을 적시하는 감성이 배어나는 인도주의적 학회, 국제사회에서 바람직한 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자적 학회, 개발협력 분야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후견자적 학회를 지향하고자 학회를 창립하였음

# 한국의 ODA 철학 및 기본 정책문서 정책토론회

정리 : KOICA 정책연구실

## Ⅰ. 개요

■ 일 시: 2007. 10. 12 (금) 15:00 ~ 18:00
■ 장 소: 외교부 17층 상황실
■ 참 석: ODA 관련 학계 · 시민단체 · 연구기관 전문가 25명

## Ⅱ. 진행

■ 모두 발언: 박인국 다자외교실장
– ODA정책문서의 필요성 및 최근 개발협력 분야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설명
■ 사 회: 박강호 개발협력정책관
■ 발 제:
– 발제 1: 한국 ODA 철학 및 기본 정책문서 수립방안(전승훈 개발전략연구소장)
– 발제 2: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기본 철학(주동주 KIET박사)

## Ⅲ. 토론회 내용

### 1. 필요성 및 총론적 견해

■ 참석자 공히 ODA 철학의 정립 및 기본 정책문서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

■ 다만 ODA 철학에 대하여 시민단체 측에서는 원조의 순수성 및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을 적극 주장한 반면, 일부 전문가는 이것이 정부의 정책문서이니만큼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외원조는 외교정책의 핵심부문(integral part)이 되어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제시

## 2. ODA 철학 및 이념적 기초

■ 발제안은 한국이 ODA를 하여야 하는 이유로서 아래와 같은 이념적 근거 및 ODA의 목적을 제시

- 한민족의 개국이념인 홍익인간이 ODA의 정신
- 헌법상 기본 목적인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에 기여
- 그 이외 인도적 책무 및 외교 정책적 목적, 한국이 대외교역 및 동북아 안정에 생존기반을 두고 있는 여건에서 국가적 이익에의 기여 필요성
- 한국의 ODA는 국제사회의 핵심과제인 "빈곤완화"에 초점을 두고, 또한 한국이 개도국과의 같은 여건에서 출발하여 발전을 이룬 역사적 배경을 감안, "동반자"의 개념을 포괄

■ 동 발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참석자 의견이 제시

- "홍익인간"의 이념은 우리 민족의 이념은 될 수 있으나 글로벌 시대의 보편적 이념이 될 수 없으니 부적합
- 우리 원조이념에 국익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우리 대외원조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그러나 원조이념은 정부의 정책지침인 바,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국가이익의 개념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기저에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견해 강력히 개진
- ODA 목적으로 "빈곤"보다 보다 폭 넓은 가치가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 Right-based approach, 인권, 안전, 환경, 성차별 방지 등을 포괄

## 3. ODA 원칙

■ 발제안은 다음과 같은 7개 원칙을 제안

- 인간역량 개발의 중시, 수원국의 Owner-ship,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지원, 한국적 경험과 전문성 발휘,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 관련 정책과의 유기성 유지, 민간의 적극적 참여

■ 이에 대하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

- 정책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원칙의 단순화를 위해 원칙(Principle)은 4-5개로 축소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하나의 의견은 "한국적"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 다른 하나는 실제 개도국에서 한국의 경험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역설

* 지난 3월 ODA컨퍼런스에서 제프리삭스 교수도 한국이 한세대(一世代)에 이룬 발전경험은 유래를 찾기 어려우며 개도국에 모범적 text가 될 것임을 역설

- NGO의 역할이 우리 ODA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에서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

### 4. 정책 지침(Policy Guideline)

■ 발제안은 다음과 같은 7개 지침을 제안: 원조의 규모, 내용, 사업수행방식, 지역별 배분기준, 다자협력, 해외재난구호, 홍보와 교육

■ 정부에 정책적 융통성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기준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5. 운영 체계

■ 발제안은 실제의 운영절차 및 체계에 관한 규정으로 다음 5개 기준을 제시: 중장기 전략 수립, Country Programming 운영, 정책운영의 조화, 투명성, 평가체계

■ 정책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다소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 제시

■ 무상, 유상기관의 통합, 집행체제의 단순화, 원조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Ⅳ. 논의기조와 결어

■ 특히 ODA의 철학 및 이념적 기초에 있어서 글로벌 보편성과 원조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본 문서가 정부의 정책지침으로서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적 이익이 명시적으로는 아니라도 기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

■ ODA의 철학의 정립과 기본 정책문서를 수립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의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참석자 모두 동의

# 한국 ODA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정리 : KOICA 정책연구실

## I. 개요

■ 일 시 : 2007년 10월 5일(금) 오전 9시 30분 ~ 12시 30분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 제 목 : 한국 ODA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 주 관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후 원 :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해외원조단체협의회

## II. 토론회 내용

### 1. 지속가능발전을 ODA 법령과 제도정비에 통합

■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보전 개념 도입, 원칙과 방향 제시

- 대외원조기본법 (현재 제정 노력 중): 예) 일본 ODA 헌장
- ODA 국가 중장기계획 등에 정책적 비전과 중장기적 철학 정립

### 2. 환경 ODA 확대

■ "환경 ODA"를 주요 ODA 사업분야로 정의

- 전체 사업 중 환경사업 비중 확대

■ 범정부 차원의 환경 ODA 전략 마련 지원

■ "Clean and Green ODA" 정립을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

■ 환경 ODA사업 국가목표 설정 고려 (예: 네덜란드 GNI 0.1%를 환경 ODA로 책정)

■ 환경협력에 NGO와 기업의 참여 확대 지원
- 환경 전문인력 개발 지원 및 민간 개발NGO 전문성 제고 지원
- 민관 파트너십 구축 (Public Private Partnership)
- 비교우위의 국내 환경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 개도국 필요에 부응하는 환경산업 진출 지원
- 시민사회 개발NGO 환경사업 파이낸싱과 모니터링 실시

### 3. 민간과 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사회통합 측면에서 민 · 관의 상호보완적 역할 필요

■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정립에 기여

■ 지속가능발전의 지구적 문제 특히 환경문제 등에 대한 국제연대의식을 고취하여 ODA를 활용한 지구적 문제해결 기여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

### 4. ODA 모니터링 · 평가제도에 지속가능성 포함

■ 사전선정단계와 사업계획단계에 환경과 사회 문화적 고려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수단 확보
- DAC 회원국은 파트너국과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발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예: 스웨덴은 모든 원조사업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 해외원조로 대형건설사업 시행 시 환경 · 사회영향평가 필요

■ ODA 평가지침 수립 공론화에 참여, 검증된 평가지침수립에 기여

■ ODA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77개를 ODA 평가지표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 검토 필요

■ ODA Watch등의 시민사회 감시기능을 고려한 공개 평가제도

### 5. 정책적 일관성 유지

■ 개발원조-무역 · 투자-환경-성평등-빈곤-분쟁 등 서로 연계된 정책 분야의 범정부 차원의 정책일관성 제고

■ 자원개발과 농업개발의 연관성 및 경제 · 사회 정책 통합성 제고

# 원조 증액 및 배분에 관한 DAC 특별회의

"원조 증액 및 배분에 관한 DAC(개발원조위원회) 특별회의"가 Richard Carey 개발협력국장 주재하에 6.25-26간 세계은행 파리사무소 및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어 "원조 배분 정책에 관한 2007년 DAC 서베이"의 방법론, 원조 배분(aid allocation), 원조의 예측가능성 등을 논의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Ⅰ. 핵심요지

■ 공여국들의 개별 수원국가별(at the country level) 중장기(3-5년) 원조 배분 정책 및 향후 원조 지출 계획의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 DAC 서베이를 금년 8월-9월간 DAC 회원국 대상으로 진행키로 하였으며, 개별 국가에 대한 "계획 가능한 원조(programmable aid)"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 OECD 사무국 2006년 개발협력 통계(공여국 공약에 근거)에 따르면, 2005년 DAC 회원국들의 총 ODA 규모는 1,048억불로서 GNI 대비 ODA는 평균 0.33%이다. 2006년도는 986억불, 0.30%이고, 2010년도는 1,301억불, 0.36%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10년 DAC 회원국들의 원조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총 250억불의 원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 향후 2010년까지의 원조 증액(scaling up)이 절실한 점에 대해 공감하나, 일부 국가들의 실제 원조 증액(스페인, 이태리의 경우 각 40억불)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었다.

■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원조의 집중과 분산, 원조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향후 원조 흐름 시나리오 분석 등을 금년 12월 DAC SLM 회의의

주요 의제로 상정키로 했다.

## Ⅱ. 관찰 및 평가

■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DAC 회원국들은 원조 효과의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평균 3-5년 동안의 개별 수원국에 대한 원조 배분 계획 및 향후 원조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의 원조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우리 나라와 국민소득이 유사한 그리스도 2007-11년간 5년간 총체적인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발칸, 스리랑카,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등 주요 원조 대상국에 대한 3년간 국별 원조 배분 계획을 마련 중이다.

■ 사무국이 "원조의 분산과 집중" 보고시 북한이 DAC 회원국 중 1개국으로부터 우선 순위 지원 국가로 지정되어 원조를 제공받는 것으로 별첨 도표에 표기했다. 동건 관련 OECD 사무국 확인 결과, DAC 회원국이 사무국에 우선순위국가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회원국이 2003-2005년간 총 3천 5백만불 이상의 지원액을 특정국가에 제공하면, 사무국이 일률적으로 이들 대상 국가들을 우선순위 국가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즉 북한을 우선 순위국가로 자체적으로 명시한 국가는 없으나, 미국이 상기 지원액 이상(1.07억불)을 지원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무국이 통계 처리의 편리를 위해 북한을 미국의 우선순위 지원국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 Ⅲ. 주요 결과

### 1. 원조 배분 정책에 관한 2007년 DAC 서베이 조사 방법론

■ 공여국들의 개별 수원국가별(at the country level) 중장기(3-5년) 원조 배분 정책 및 향후 원조 지출 계획의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 DAC 서베이를 금년 8월-9월간 DAC 회원국 대상으로 진행키로 하였으며, 개별 국가에 대한 "계획 가능한 원조(programmable aid)"만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 일본은 국내 회계 년도가 1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사무국이 요청한 평균 3-4년간 중장기적 국별 원조 및 지출 계획을 제출하기 어렵고, 수원국내 자국 원조 집행사무소의 중장기 계획 잠정치를 보고할 수 있다는 입장(서면으로 입장 제출 예정)을 표명했으며 이에 회원국들과 사무국은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DAC 가입시 이와 유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한-일간의 원조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일본의 대응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계획가능한 원조"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총 ODA에서 예측불가능한 긴급구호 원조, 국경을 초월하지 않는 형태의 원조, 명목상 거래 (부채 탕감), 정부간 협력협정이 아닌 형태의 원조 제공 등은 제외키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보완하기로 했다.

- 대규모의 의료 리서치, 소규모 지식 공유(기술협력) 등은 계획가능한 원조로 포함키로 하는 등 규모가 큰 형태의 원조는 가능한 포함하기로 했으나 NGO 지원은 재 논의하기로 했다.
- 일본은 재난 방지 및 재난 대비 관련 인도적 지원은 계획가능한 원조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 2. 미래 원조 흐름 시나리오(future aid flow scenario) 분석

■ 가나, 탄자니아, 베트남 3개국에 대한 미래 원조 흐름 시나리오(공여국들의 scaling-up 예측액, 최근 동향을 고려한 ODA 제공액, 수원국 정부가 예측한 ODA 제공액 등 3개 예측에 기초)를 작성, 동 시나리오가 향후 원조 계획 수립시 유용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 동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향후 공여국들의 중장기 원조 계획에 반영하는 문제의 논의는 12월 DAC SLM 회의에서 진행키로 했다.

■ 수원국 정부가 예측한 ODA 제공액 시나리오는 수원국가의 낮은 기대치로 인해 낮게 책정되어, 결과적으로 공여국들의 scaling-up 예측액 및 최근 동향을 고려한 ODA 제공액과 갭이 발생하여 동 시나리오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들이 표명되었다.

## 3. 원조의 분산(fragmentation)과 집중(concentration)

■ DAC 회원국들의 원조 행태를 평가해 본 결과, 원조의 분산과 집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 DAC 회원국들의 원조가 전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반면, 공여국들의 우선순위 국가들은 남미의 경우 볼리비아, 아프리카의 경우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등 동부 아프리카 국가와 말리, 아시아의 경우 베트남, 방글라데시, 아프키니스탄으로 지정되어 원조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4. 원조의 예측가능성과 변동성(volatility)

### 가. 개론

■ 1998-2002년까지의 900건 이상의 ODA 흐름을 조사한 바, 평균적으로 수원국의 ODA가 매년 4% 실질 상승했다.

- 전체 건수중 43% 이상의 경우, 차기년도의

ODA는 전년도의 90%-120%사이에서 제공되었다.

■ 원조의 변동성은 거버넌스가 취약한 국가가 안정된 국가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ODA의 변동성이 평균 10-20%사이에서 측정되나, 분쟁 및 정쟁 등으로 거버넌스가 취약한 국가는 동 변동성이 50%에 달한다.

■ 공여국들이 1년 회계 년도 예산을 책정함에 따라, 수원국에 중장기적 원조 계획을 제공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같은 공여국들의 중장기적 공약의 부재는 수원국들의 중장기적 국가개발 예산 계획의 신뢰성을 훼손시킨다.

- 결국 빈곤감축 전략(PRS)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 나. 수원국 샘플링 조사

■ 가나, 탄자니아, 베트남 등 3개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 예측가능성 조사 결과, 트렌드 자체는 매우 명확했고 원조 공약과 지출계획은 동일한 패턴을 나타냈다. 사무국의 보고에 따르면 매년 변동은 상당하나, 트렌드 자체는 비교적 완만하여 국별 원조가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한다.

- 가나의 경우는 완만하게 공여국들의 공약액, 실제 지출액이 상승하며, 탄자니아의 경우는 상기 2개 지표가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었고 베트남의 경우는 9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 상기 자료는 원조 집중 대상국가들(aid darling)만이 선정되어 biased될 측면이 있는 바, 원조 고아국(aid orphans), 취약국가 등 원조 성과가 부실한 국가들에 대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

# 제2차 OECD 개발원조 정책대화 개최결과

"제2차 OECD 개발원조 정책대화"가 9.5~ 6간 서울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OECD DAC 비회원국, 중국, 브라질 등 신흥공여국, 세계은행, UNDP, ADB등 주요 국제기구 및 EC 등 총 40개 국가 · 기구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I. 핵심 요지

■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DAC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은 향후 양측간 ODA정책협의를 정례화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신흥공여국들의 개발경험 공유, 개발협력원조의 효율성 제고 방안, 공여국간의 원조 조화 및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과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구체화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 참여 대표단들은 원조효과를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공여국들이 자신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업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원조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기반 구축 및 책임의식 및 주인의식을 거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였다.

## II. 주요 결과

### 1. 제1세션(Lessons from Development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발제 1 : 박강호 외교부 개발협력정책관)** 한국의 경제발전은 인적자원개발(HRD), 산업기반시설 구축, 수출산업 육성, 대외원조의 효과적 활용 등 경제개발 전략의 효율적 시행을 통해

달성되었다고 설명한 후, 경제 · 사회발전을 위해선 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들의 주인의식 고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박 국장은 한국 정부가 중점협력국에 대한 3개년 국별지원계획(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을 금년 중 마련할 예정이며, 수원국의 필요와 한국의 비교우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국별로 단계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발제 2 : Jerzy Pomianowski 폴란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폴란드의 경우, 인권보장, 민주적 통치체제 구현,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등 정치적 안정 확보를 통해 경제개혁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화를 달성하는 데 여타 국가들로부터의 물적 · 정신적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시민사회의 참여가 주인의식의 함양에 기여했다.

■ **(멕시코)** 멕시코는 한국이나 폴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실적이 저조하나 최근 들어 거시경제, 무역 및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특히 'Tres por uno(Three for one)'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개발원조의 효과와 동기를 제고하는 한편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개발경험 공유 및 원조협력을 통해 원조효과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 **(헝가리)** OECD 및 EU 유형의 원조협력을 통해 폴란드와 유사한 개발경로를 거치고 있다. 국제공동체의 유대관계가 강화될수록 개발경험의 공유는 개발원조의 효율성 제고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스위스)** 한국과는 달리 스위스는 경제개발 초기에 치열한 국제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대외원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한 역할 및 유치산업 보호 정책의 효과에 대해 관심이 많다.

■ **(한국)**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해왔다. 경제개발 전략의 성공 여부는 정부정책의 적실성과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자세에 달려 있다. 한국정부는 한국이 경험한 개발 관련 Know-how와 지적자산을 수원국에 전수하기 위해 이를 모델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59개국에 원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원조 중 60%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원조지역의 다변화, 최빈개도국 지원정책 강화를 위해 향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의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ADB)** 신흥공여국의 경험이 선진국의 경험보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에 더 도움이 된다. 신흥공여국들의 경제발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며, 초기에는 주로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구사하다가 점차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경제개발을 위해 중요한 것은 금융개혁에 필요한 법률 및 통치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 2. 제2세션(Capacity Development)

■ **(발제 1 : Carlos Miranda 미주개발은행 브라질 및 수리남 담당 집행이사)** 능력개발의 주요 장애 요소로는 개발유인 제공 미비 및 안정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제도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도국의 경제분야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금융분야의 개혁에 필요한 제도 정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주요 원조기관들이 우선적으로 개도국의 금융분야 제도개선과 능력 개발에 주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함이 필요하다.

■ **(발제 2 : Henri Raubenheimer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교부 경제개발과장)** 능력개발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인력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개발의 혜택 및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국)** 미국정부는 테러리즘, 내란기도, 조직범죄, 마약밀매, 인신매매, 환경위해 등과 같은 위협요소들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MCA(Millenium Challenge Account)라는 전략을 수립하여 대외원조를 국가안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유지와 안보달성, 지속적 발전과 지구적 차원의 복리증진, 외교적 능력의 강화와 국제적 이익의 증진 등 4개의 목표를 대외원조의 주요미션으로 정하고, 상기 목표에 부합하며, 정부의 투명성 제고, 경제적 자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개도국을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대외원조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 **(IMF)** 제도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우며, 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핵심요소이다. 제도개혁을 달성하려면 일관된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DAC 회원국들은 DAC 비회원국들에게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전반적으로 원조정책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UNDP)** 원조효과 제고, 능력개발 등은 범주화하기 힘든 분야다. 원조의 많은 부분이 누수되고 있으므로 원조정책의 집행과 모니터링을

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 **(한국)** 현재 공여국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주로 실무인력 연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교육내용의 효과적인 응용 및 정책화를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 고위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Richard Carey 세션 의장)** 아시아, 동유럽, 남아프리카,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성공적으로 경제개발을 이룩했으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직 개발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내적 학습과정과 외적 기술원조 과정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바람직한 제도 구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초 계획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3. 제3세션(Managing Development Cooperation - How to Make it More Effective)

■ **(발제 1 : Bruce Purdue 아시아개발은행 실적관리부장)** 개발원조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 개발원조의 효과적 활용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발제 2 : Morten Jespersen 덴마크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개발원조의 효과를 제고하려면 공여국이 책임의식(commitment)을 갖고 원조에 임해야 한다. 또한 수원국으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여국과 수원국이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고 상호 협력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ADB)** 수원국 정부의 부패를 감소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하며, 필요한 제도를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도 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원조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은 불가능하다. 공여국간의 갈등은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갈등보다 조화시키기 어려우며 이런 측면에서 오늘과 같은 정책대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네덜란드)** 집행과 결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준비단계에서는 충분히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차별 철폐 등 일부 목표는 2015년까지 달성하기 어려운 MDG인 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 **(멕시코)**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에는 동의하지만 멕시코의 경우, 원조의 규모를 측

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파리선언을 준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DAC 비회원 공여국들은 공여국인 동시에 수원국 입장이므로 이들의 원조규모를 측정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4. 제4세션(Development Assistance Partnerships)

■ **(발제 1 : Koro Bessho 일본 외교부 국제협력국장)** 개발원조 분야에서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원국 실정에 적합한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책임의식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또한 DAC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공동으로 원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DAC가 원조의 기준설정에 독점적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공여국들이 기준 설정 과정에 참여토록 논의를 유도하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발제 2 : Apinan Phatarathiyanon 태국 국제개발협력기구 부국장)** 태국은 남아공과 남-남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동 협력모델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의 기초는 상호보완성과 유대관계에 있으며, 개발원조의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수혜국의 참여와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 **(뉴질랜드)** 취약국가들(fragile states)을 위한 지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다자기구들은 전문성과 경험에 근거한 원조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 신흥공여국중 일부는 통계 및 평가분야 역량 개선을 필요로 하는바, DAC국가와 신흥공여국간 공동분석 및 공동평가 작업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한국은 현재 독일과 공동 평가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 5. 결 론

■ 공여국이 모두 참여하는 ODA정책회의의 정례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원조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공여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3각협력 및 다자개발협력체제를 활용한 ODA제공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선진공여국 그룹인 DAC을 보다 유연하게 개혁하여 신흥공여국의 요구와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 빈곤 및 질병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되며 ODA뿐만 아니라 Aid for Trade를 통한 무역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 금번 정책대화 개최를 통하여 최초로 다양한 공여국이 참여하는 원조정책대화가 개최되었는 바, 향후 동 회의가 지속 개최되어 공여국간 원조조화 · 원조정책 협의의 정례화된 포럼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III. ODA 국제워크숍 개최

■ 제2차 OECD 개발원조 정책대화와 병행하여 9. 6 14:30 ~ 18:15간 ODA 국제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금번 워크숍에는 국내외 ODA 전문가 및 학계 인사 약 150명이 참석하여 한국, 일본 및 OECD DAC 회원국 국민들의 개발원조에 대한 지지확보방안 및 시민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

# 개발원조위(DAC) 개발평가 네트워크 회의 결과

OECD/DAC 산하 개발평가 네트워크(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제6차 회의가 Mr. Finbar O'Brien 의장(아일랜드) 주재로 6. 27 ~ 28간 파리에서 개최되어 원조효과 공동평가, 평가 능력 개발, 변화하는 개발원조환경과 평가와의 관계, 평가도구 및 기준 등이 협의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핵심 요지

■ 파리 선언 모니터링을 위해, 수원국 주도의 평가와 공여국 주도의 평가 등으로 추진중인 공동 평가(joint evaluation) 작업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 다만 수원국 주도의 평가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 말리, 볼리비아 등 동 대상국(자발적 참여)들이 DAC 회원국들의 주요 원조 집중국(donor darling)인 점을 감안하여, biased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점이 지적되었다.

■ 중국은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수원국 주도의 공동 평가 작업(84개 프로젝트 사업 대상)을 2004-2005년간 실시하여 금번회의에서 동 평가 작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문제로는 평가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평가결과가 중앙정부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중국은 과기부 산하 국립과학기술평가센터(NSSTE)가 총괄적으로 원조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 지난 2006년 4차 회의에서 승인된 평가의 질적 기준(Evaluation Quality Standards)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종합하여, 동 기준 개선 및 확정을 위한 워크샵을 추후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 Ⅱ.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에서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탄자니아 등이 참여한 공동 평가 작업에 대한 소개가 있는 등 파리선언 이후, 원조효과의 증진을 위한 공동의 국별 지원전략 수립 및 공동평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수원국 · 공여국간 공동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수원국의 평가 능력 개발(evaluation capacity building)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DAC 회원국의 원조효과 공동평가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DAC의 평가기준과 지침 수립 과정에 우리의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 평가기준을 우리의 평가제도 운용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특히 개발 클러스터 차원에서의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주요 원조 공여국과의 공동 평가 작업 발굴 검토 등을 통해 향후 DAC 가입 전 평가 작업에 대한 선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다자기구 차원의 원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캐나다(현재 다자원조 35%), 덴마크(현재 다자원조 40%) 등은 양자 및 다자원조 비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을 구두로 소개한 바, 우리나라도 동 회원국들의 주요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9개 회원국(프랑스 참가 예정)으로 구성된 다자기구 성과 측정 네트워크(Multilateral Organizations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MOPAN)가 다자기구간 협력관계 행태에 대한 연례 보고를 수행하고 있음을 영국, 캐나다 등이 지적했다.

## Ⅲ. 주요 논의 내용

### 1. 원조효과의 공동평가

#### 가. 파리선언 이행 공동평가 후속 논의(Joint Evaluation follow up to the Paris Declaration)

■ 수원국 주도 국별 평가(country-led country level evaluations)

–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말리, 필리핀, 세네갈, 남아공, 스리랑카, 우간다, 베트남, 잠비아 등 10개국 수원국 주도의 국별 평가(10개 공여국이 협조)는 공동의 모니터링 활동 및 기타 입수가능한 지식에 기초하여, 주로 수원국 및 공여국의 행동 변화를 평가한다.

– 발견된 사실의 비교가능성과 취합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평가체계(framework)에 따라 평가를 설계하되, 국별 특성과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 평가는 수원국내에서 관리되고, 수원국 정부 혹은 관심 있는 공여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그룹(reference group)의 지원을 받는 독립된 기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 공여국 주도 본부 평가(donor-led HQ level evaluations)
- 파리선언 이후 원조기관의 정책, 전략, 인센티브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발견된 사실의 비교가능성과 취합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평가체계(framework)에 따라 평가를 설계하되, 국별 특성과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 평가는 공여국 혹은 수원국을 포함한 이행관계자를 포괄하는 자문그룹(reference group)의 지원을 받는 독립된 기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베트남과 덴마크가 공동 의장)
- 참가국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UK, UNDP 등이다.(미국과 일본은 불참)

■ 중장기 주제별 연구 계획(medium to long-term programme of thematic studies)
- 공동의 평가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발견 사항들을 평가해야 한다.
-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파리선언 모니터링 Joint Venture와의 조정이 필요하다.

■ 종합보고(synthesis report)
- 중장기 주제별 연구 계획, 수원국 평가 및 공여국 평가 결과 발견사항 및 교훈점을 종합하여 2008년 아크라 고위급 포럼에 제출할 예정이다.

### 나. GBS 공동평가 후속점검(Follow up to the Joint Evaluation of General Budget Support)

■ GBS Report(The Joint Evaluation of General Budget Support : 1994-2004)는 24개 공여국과 7개 파트너 국가(부르키나파소, 모잠비크, 말라위, 루안다, 우간다, 니카라과, 베트남)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평가이며, 2006년 5월 발간되었다.

■ GBS 평가 후속 모니터링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은 관계 공여국 및 수원국에 배포할 설문안을 제출하였다.
- 동 설문 분석 결과는 모니터링 보고서로 제작되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다. 방글라데시 국별지원 공동 평가

■ 세계은행(WB)은 ADB, DFID, 일본(동 4개 기관 및 국가가 대방글라데시 원조 총액의 80% 차지) 등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방글라데시 국별 지원 공동평가 사업의 진전 현황을 보고하

면서, 타 회원국의 지원과 자문을 요청했다.

## 2. 평가 능력개발(Evaluation Capacity Development)

■ 평가 능력개발의 일환으로 실시된 베트남-호주 모니터링 · 평가 강화 프로젝트(VAMESP)가 소개되었다.

- 3년간 진행중인 베트남의 평가능력개발 제도 및 활동 내역, 교훈 및 향후 추진 방향 등

■ 사무국은 2006년에 실시된 회원국의 평가능력개발 현황 조사 결과를 상기시키며, 향후 평가능력개발 사업을 주도할 task force에 관심있는 국가들의 참여를 요망했다.

## 3. 변화하는 개발원조 환경과 평가 (Evaluation in a Changing Aid and Development Context)

■ 빈곤완화전략의 채택, 공동의 지원 전략 수립, 신흥 공여국의 등장, 파리선언 등, 변화된 개발원조 환경에 따라, 원조효과 평가를 위한 공동의 국별원조전략 수립 및 공동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 평가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참가국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이에 따라 향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재론키로 하였다.

## 4. 평가 기준 및 규범

### 가. 평가의 질적 기준 적용

■ 2006. 3월 제4차 개발평가네트워크 회의에서 향후 3년간 시험 적용기간을 갖기로 승인된 평가의 질적 기준(DAC Evaluation Quality Standards)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 나. 파급효과 평가(Impact Evaluation)

■ 파급효과 평가의 기본 개념과 기법 등을 정립하기 위해 구성된 task force인 파급효과 평가 네트워크(NONIE)의 워크샵이 지난 2007. 5. 24 ~ 5. 25간 헤이그에서 개최되어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2007년 10월중 워싱턴에서 WB 주재로 후속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 다.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CPPB) 평가 지침의 개발

■ 노르웨이는 DAC 개발평가네트워크와 분쟁평화개발협력(CPDC) 네트워크 합동으로 개발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활동 평가 지침 초안을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10월까지 확정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최소 1년간 시험 적용기간을 거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 라. 세계 및 지역 파트너쉽 사업(GRPPs)의 평가

■ 세계은행은 독립평가그룹(IEG)이 지난 2007년 1월 발간한 세계 및 지역 파트너쉽 사업 평가 보고서(Global and Regional Partnership Program Evaluation Sourcebook)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 마. 세계식량계획 평가 기능 동료심사 (Professional Peer Review of the Evaluation Function of the World Food Programme)

■ WFP의 요청에 따라, UNDP와 UNICEP에 이어, 세번째 다자기구 평가 작업이 추진중이다. 2007.1월 SIDA가 WFP의 평가부서 OEDE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심사 패널을 주도하기로 동의하였으며, 2007.5월 ~ 9월간 자료 수집을 거쳐, 10월중 보고서 초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 바. HIV/AIDS 평가 작업 현황 및 향후 협력 방안

■ 개발평가네트워크 의장은 세계기금(Global Fund), AIDS 구호를 위한 미대통령 긴급프로그 램 (US President's Emergency Programme for AIDS Relief), 백신 · 면역을 위한 세계연대(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거나, 실시 예정인 평가 작업을 소개했다. 아울러 개발평가네트웍 차원의 동 분야 평가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를 희망했다.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

#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대화 총회 개최 결과

10. 23 ~ 24간 뉴욕에서 개최된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대화 총회에서 MDG 달성에 대한 각국의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Ⅰ. 회의 개요

■ 명칭 :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대화(High-Level Dialogu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총회

■ 주제 : MDG 달성을 위한 몬테레이 컨센서스(Monterrey Consensus)의 이행 현황 및 향후 조치 방향 검토

■ 참가자 : Srgjan Kerim 유엔 총회 의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Danny M. Leipziger 세계은행 부총재 등 개발관련 주요 국제기구 간부 및 한국, 영국(국제개발부 장관) 등 92개국 대표

## Ⅱ. 논의 내용

### 1. 주요 내용

■ 몬테레이 컨센서스가 채택된 이후 세계 ODA 규모가 확대되고, 공여국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등 일부 최빈 국가들이 ODA의 혜택으로부터 소외(aid orphan)됨에 따라 원조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추진현황의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 개도국들이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을 안정시킴으로써 해외 자본이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선진공여국들은 이러한 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 중장기 개발재원 확보 수단으로 무역확대를 통한 개도국의 능력제고(Aid for Trade)가 필요하며, 농업보조금 철폐 및 반덤핑 등 규제조치 완화를 통해 개도국들에게 유리한 국제무역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국제개발 금융기구 및 통화 기구의 개혁을 통해 개도국들의 입장이 국제금융체제(IFI)에서 보다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주요 발언 요지

■ **Kerim 유엔 총회 의장(개회사)**

- 2002년 회의에서 설정된 개발재원 관련 목표들이 일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진행속도로는 대부분의 목표들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MDGs 목표달성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개발재원의 지역간 불균등한 분배, 자유롭고 형평한 다자무역체제를 방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등장, 국제개발금융기구 개혁의 둔화 등을 들 수 있다. 2008년 도하에서 개최되는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행 상황 점검 회의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 MDGs와 더불어 몬테레이 컨센서스는 UN과 여타 국제기구, 시민단체, 민간 부문 등 다양한 계층의 개발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반기문 UN 사무총장**

- 2002년에 개최된 UN 개발재원회의는 ODA 관련 이슈들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동 회의를 계기로 선진공여국과 개도국간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2002년 이후 세계 개발원조가 질적 · 양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원조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 하는 문제가 노정되었다.
- 개발원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ODA의 양적 증대뿐 아니라, 원조 효과 분석, 부채탕감 노력의 증대, 거시경제의 신중한 운영 및 금융시장의 안정 등 다양한 조치의 병행이 필요하다.
- 특히, 저소득 국가로는 국제자본이 유입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고 정치적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해외자본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범세계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질병, 빈곤 등 비인도적 상황을 조속히 종식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 · 공여국간 파트너십 제고가 필요하다.

■ Leipziger 세계은행 부총재

- 2002년 회의 이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면, 공여국의 부채탕감 노력 증대 및 수원국의 원조 관리 능력 제고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 ODA의 규모도 증가하였으나, 2004년 이후 증가분의 대부분은 부채탕감(debt cancelation)에 의해 이루어졌다. OECD DAC 회원국들의 2006년 ODA 규모는 실제로 5.3% 감소했다.
- 개발원조의 효과를 제고하려면 국제무역시스템을 개발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도하 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이 중요하다.

■ IMF

- 저개발 지역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일부 국가만 개발의 혜택을 받는 등 지역별로 형평한 개발이 이뤄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발혜택의 형평한 분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또한 개발원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거시경제의 안정을 통해 원조 수용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채구조를 개선하며, 다양한 개발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WTO

- 중장기 개발재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역의 경우, 농업보조금, 반덤핑조치 등 개도국에 불리한 무역규제 장치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MDG 목표 달성 실패의 대가를 감안, 지도자들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과감한 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UNCTAD

- 2006년 한 해 동안 개도국에 유입된 FDI는 3,79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개도국으로 유입된 전체 자본의 70%가 12개 국가에 집중되었으며 최빈개도국에 유입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 개도국들이 세계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개도국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외환위기에 대해 완충작용을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전제로 시행하는 사전예방조치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 Group of 77 및 중국

- G77 및 중국의 관점에서 세계경제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 일부 개도국이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 하고 있으며, 개도국 전체의 부채액도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는 선진공여국들의 ODA 규모 증액, UN 등 개발 및 금융 관련 국제기구들의 개도국 민자 유치 지원, 부채탕감 프로그램의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EU

- EU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2015년까지 회원국의 ODA 비율을 GNI 대비 0.7%로 높이는 것 외에도 중간 목표로 2006년까지 전체평균 0.39%, 2010년까지 0.56%를 제시 하였으며, 2006년 목표인 0.39%는 이미 달성했다. EU는 현재 전세계 ODA의 57%를 부담하고 있다.

■ 독일

- 독일정부는 EU의 ODA 달성 목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개발과 환경 문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두 가지 문제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영국

- 영국의 ODA 규모는 2002년 이후 30% 증가했으며, 2013년까지 GNI 대비 0.7% 수준을 달성할 계획이다.
- 2008년 회의를 계기로 ODA 확대 계획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ODA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장기 원조 계획 수립 및 공여자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정치적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 한국

- 현재 세계는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개발 목표 달성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 국제사회는 ODA 규모를 2000년 530억불에서 지난 해 1천억 불로 증액 시키는 등 빈곤과 질병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혜택이 형평하게 분배되지 못 하여 최빈개도국의 극빈을 경감시키는 데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하지만 공여국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징후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은 신흥공여국의 경우, 자신의 개발경험을 수원국에 전수함으로써 수직적 구조의 국제원조체제를 보다 더 유연하게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은 2010년에 OECD DAC에 가입할 예정이며, 몬테레이 컨센서스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ODA 규모를 2015년까지 32억불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항공권 연대기금을 도입하고 "개발재원 연대기금 지도자 그룹" 제3차 총회를 주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혁신적 개발재원 발굴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외환 축적과 인적자본 육성 그리고 장기 개발전략의 수립 · 이행을 통해 경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한국의 발전 경험은 여타 개도국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네덜란드**

- 최근의 국제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전세계 ODA 규모의 감소, 개발관련 무역 협상의 정체, 부채 탕감 제도의 불완전성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ODA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네덜란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GNI 대비 0.8%의 ODA를 유지해 왔다.
- 또한 최빈국들의 환경문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7억 유로를 추가로 공여할 계획이다.
- 무역의 경우, 최빈국들이 세계무역체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일본**

- MDG 설정 이후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에서 극빈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아 사망이 천만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 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은 미진한 상태이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이들 국가들은 2015년까지 MDG 목표들 중 단 하나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일본은 아프리카 개발 원조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 5월에 제4차 '아프리카 개발에 관한 동경 국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일본은 '05 ~ 09년간 ODA 규모 100억불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07년 말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를 2배 확대할 계획이다.

■ **인도**

-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국제 금융 및 통화 기구의 개혁을 통해 개도국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 또한 민간 자본의 유치를 통해서는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이 어려우므로 개도국들의 개발을 위해서는 선진공여국들의 ODA 확대 노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ODA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0년까지 선진 공여국들의 ODA는 GNI 대비 0.36%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도하 라운드를 진행시켜 개도국들에게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경우 2007년말까지 최빈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 **중국**

- G77의 입장을 지지한다.
- MDG를 포함한 국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 존재한다.
  - 자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빈국으로의 민자 유입 부진
  - 전년대비 2006년도 ODA 규모의 감소
  - 개도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새로운 무역규제들의 등장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먼저 개도국들의 능력 배양을 지원해야 하며, ODA 규모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무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또한 국제자본의 흐름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한편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을 통해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브라질**

- G77의 입장을 지지한다. 브라질은 개별 국가들이 자신의 발전에 책임을 지고, 국제개발협력은 개별 국가의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취지에 동의한다.
- 브라질은 거시경제적 안정 및 성장을 소득 분배와 조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MDG 목표가 설정된 이후 4천만명의 브라질 국민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다.
- 개도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제정책의 시행, 개발을 염두에 둔 무역체제 형성, 남-남 협력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 Ⅲ.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는 World Bank, IMF 등의 개발 관련 주요 국제기구 대표 및 92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2002년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한편, 다양한 계층의 지지와 참여를 촉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인류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위해서는 빈곤 및 질병의 퇴치가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 개발원조를 단순한 시혜 조치로 보기보다는 인

류의 미래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이슈 및 문제점들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노력에 방향과 지침을 제시해 줄 것으로 전망되며, 2008년 도하 개최 정상회의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주국제연합대표부]

# UN MDGs 중간보고 대회 개최결과 (필리핀)

필리핀의 2007년 UN MDGs 중간 보고 대회가 2007. 10. 10 개최되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Ⅰ. 행사 개요

■ 일 시 : 2007.10.10(수) 오전 9:30 ~ 12:00

■ 장 소 : 마닐라 호텔

■ 참석자 : 아로요 대통령, Jose De Venecia 하원의장, Santos 경제개발청 장관대행, Cabral 사회복지개발부장관, UNDP, World Bank 등 국제기구, USAID, JICA 등 원조기관, 필리핀 정부기관, NGO 등 약 300여명 참석

## Ⅱ. 필리핀 MDGs 달성 중간보고 주요내용

### 1. 총 괄

■ MDGs 달성 목표연도인 2015년의 중간지점에 달한 현재, 필리핀은 빈곤감소, 영양, 양성평등, 아동 사망률, HIV/AIDS, 말라리아 등 전염병 퇴치, 위생식수 및 화장실 보급 분야에서는 개선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보편적 초등교육기회 확대, 산모 사망률 및 산하보건 서비스 보급에서는 아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2. 달성목표별 개선 현황

■ Goal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 절대빈곤 인구발생률이 1991년 24.3%에서 2003년 13.5%로 감소했다. 동 감소률이 지속될 경우 2015년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Goal 2 (보편적 초등교육기회 확대)
– 초등학교 진학률이 2000년 기준 96.8%에서 2005년 84.4%로 후퇴되었다.

■ Goal 3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 향상)
– 초등학교의 여학생 취학률이 2005년 기준 85.4%로 동년 남학생 취학률(83.6%)보다 우위를 나타냈고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여학생 63.5%, 남학생 53.7%로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이 향상되었다.

■ Goal 4 (아동 사망률 감소)
– 인구 천명당 유아사망률이 1990년 57명에서 2006년 24명으로 감소하였다.

■ Goal 5 (산모보건 향상)
– 산모 사망인구 감소률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출산인구 10만명당 1993년 209명 사망에서 2006년 162명 사망) 2015년 목표인 52명 산모사망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 산하보건 서비스 보급률은 2001년 49%에서 2006년 50.6%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해 2015년 목표인 8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Goal 6 (HIV/AIDS, 말라리아 등 전염병 퇴치)
– 인구의 1%이하 HIV/AIDS 발병률의 유지목표 달성하고 있다.

■ Goal 7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
– 정부가 지정한 환경보호구역 개수가 2000년 83개에서 2006년 103개로 확대되었다.

■ Goal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및 지역 규약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부응하고 있다.

* 상세자료는 www.undp.org.ph/downloads/mdg_2007.zip에 게시

## Ⅲ. 아로요대통령 연설 주요내용

■ 아로요대통령은 MDGs 15개의 달성지표 중 10개 지표에 있어 진전 성과를 달성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2004년 취임이후 재정적자폭 및 탈세율 감소, 페소화 강세, 주식시장의 활성화, 고용률 상승 등의 성과와 더불어 현 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 향후 빈곤퇴치, 교육보급 확대, 보건환경 개선 등의 MDGs 주요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투자유치 조성을 통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이 절실함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소

모전을 지양하고 범국민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청했다.

## Ⅳ. 관찰 및 평가

■ 필리핀 정부는 2004-2010년 중기 경제개발계획(MTPDP)상에 MDGs 과제 달성목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의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5%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2007년 경우 6.5% 성장 전망) MDGs 달성을 위한 여건과 기반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현재까지 부진한 일부 MDGs 지표에 대한 각별한 개선 노력과 함께 민다나오 등 분쟁지역의 평화정착 문제,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 문제, 부패 문제 등의 해소 등 사회 통합을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주필리핀대사관]

# UN ESCAP과 개발협력

박 수 영 / ESCAP NRL 전문가

## I. ESCAP 설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는 1946년 6월 21일 결의(2/6)를 통해 '유럽을 위한 실무그룹'과 '아시아 · 극동을 위한 실무그룹'으로 구성된 임시 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46년 12월 11일 United Nations(UN) 총회 (General Assembly: GA)는 동 임시 소위원회의 예비보고서에 기초하여, ECOSOC산하에 유럽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ECE)와 아시아 · 극동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ECAFE)의 설립을 권고하고, ECOSOC은 1947년 3월 28일 결의(E/405)에 의거 ESCAP의 전신인 아시아 · 극동경제위원회, 즉 ECAFE를 중국 상하이에 설립하였다.

설립 초기는 활동이 미약하였으나, 이후 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개도국이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지역범위가 확대되고, 관련분야도 경제개발에서 경제, 사회 개발로 사회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74년 명칭을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으로 변경하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 및 사회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구로 오늘에 이르게 된다. 현재 ESCAP은 뉴욕에 있는 UN 본부의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속하는 5개 지역위원회(Regional Commissions)중 세계전체의 약 62%에 해당하는 38억의 인구를 차지하는 가장 큰 지역위원회이다. 경제면에서도 ESCAP지역 내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2005년 7.6%, 2006년 7.9%로 전 세계 평균경제성장율(4%이하) 또는 다른 지역의 성장률보다 높아 ESCAP이 담당하는 지역은 가장 역동적인 세계경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 Ⅱ. ESCAP 업무범위

ECOSOC이 결의한 ESCAP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아시아 · 극동의 경제재건과 개발을 위한 공동 노력을 촉진하고, 동 지역의 경제 활동수준을 향상시키며, 지역 내 · 외 국가 간 경제관계를 유지 ·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한다.

- 아시아 · 극동 지역 내 경제적 · 기술적 문제와 개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실시 또는 지원한다.

- 경제 · 기술 · 통계 정보의 수집 · 평가 · 확산이 필요시, 이를 실시 또는 지원한다.

- 사무국의 가용한 자원 범위 내에서 지역 국가들이 희망하는 자문기능(advisory services)을 수행한다. 단, 이러한 기능이 유엔 전문기구 또는 유엔 기술원조청(UNTAA)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ECOSOC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 내에서 기술지원 문제를 포함하여 경제 문제관련 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2005년 이후 ESCAP은 3개의 Thematic area를 설정하고 상기 분야별 위원회를 개최하며, 사무국 내 실무국 활동을 상기 3개 분야 중 하나에 속하도록 통합하였다.

-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 아 · 태지역내 빈곤감소를 위한 우수사례 수집과 전파를 촉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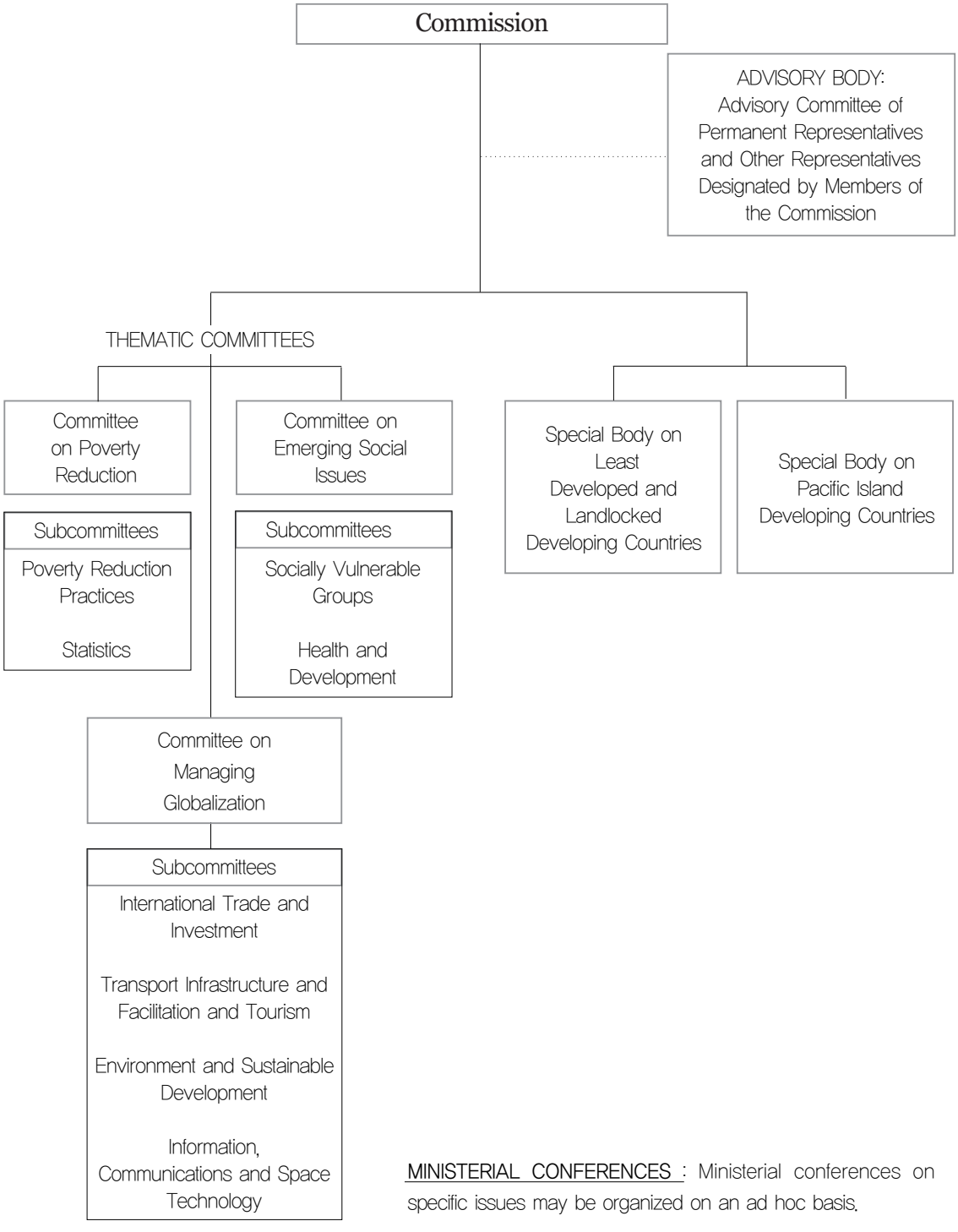
- 세계화 관리(Managing Globalization): 회원국 및 준회원이 세계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 및 환경 분야의 협상기술 향상에 주력한다.

- 신사회이슈에 대한 대응(Tackling Emerging Social Issues): 지역 내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장애인 지원, 보건 및 남녀평등과 관련한 사업을 강화한다.

## Ⅲ. ESCAP의 구조 및 운영

ESCAP은 ECOSOC산하의 지역이사회 중 하나로서, 최고협의체인 총회, ESCAP이 추진하는 3개 주제별 위원회, 상기 총회와 위원회의 결의사항 및 ACPR의 논의사항들을 실제 수행하는 ESCAP사무국, 그리고 사무국과 회원국사이의 의견교환 채널인 ACPR로 크게 구성된다. 각 조직별 업무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ESCAP의 구조 및 운영(2007년 10월 현재)




MINISTERIAL CONFERENCES : Ministerial conferences on specific issues may be organized on an ad hoc basis.

## 1. 의사결정기구

### 가. 총회 (Commission)

■ ESCAP의 주협의기구인 총회(Commission)는 매년 장관급 회의로 개최되며, 모든 회원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 사회이슈를 토론하고 지역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동 회의 결과는 매년 ECOSOC에 보고되며, ESCAP이 향후 사업계획, 추진방향 등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추진결과를 보고하는 장이 된다.

### 나. 상주대표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and other Representatives Designated by Members of the Commission: ACPR)

■ 상주대표 자문위원회는 1974년 설치되었고,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ACPR"로 불리며, 거의 매달 개최되어 ESCAP의 활동에 관해 총장 및 사무국과 회원국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2. 주제별 위원회 (Thematic Committee)

■ 총회의 산하에는 ESCAP의 3개 Thematic Area에 따라 3개 주제별 위원회와 2개의 special body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무국의 각 부서는 3개 주제별 위원회 중 하나의 주제에 속한다.

## 3. 특별기구

■ 최근 개발논의에서 최빈개도국 및 내륙개도국, 도서개도국이 경제 · 사회 개발에 있어서 갖는 특별한 문제점과 제약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에스캅은 "최빈국 및 내륙개도국에 관한 특별기구(Special Body on Least Developed and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와 태평양도서개도국에 관한 특별기구 (Special Body on Pacific Island Developing Countries)를 두어 현재 진행 중인 지역 내 통합과정에서 상기 국가들의 취약성 및 특수성을 대응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이 2개의 특별기구는 ESCAP 총회와 연계하여 2일간 교대로 격년 개최된다.

## 4. 사무국

■ 사무국은 크게 실무국과 사업지원국으로 구성된다. 실무국으로는 빈곤 · 개발국(Poverty and Development Division), 통계국(Statistics Division), 무역 · 투자국 (Trade and Investment Division), 교통 · 관광국 (Transport and Tourism Division), 환경 ·

지속개발국(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ivision), 정보 · 통신 · 우주기술국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pace Technology Division), 신사회이슈국(Emerging Social Issues Division)이 있으며, 사업지원국으로는 뉴욕본부와의 업무보고, 사업기획, 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업관리국(Programme Management Division)과 인사, 재무, 총무를 담당하는 행정서비스국(Administrative Service Division)이 있다.

## Ⅳ. ESCAP의 주요 활동내용

ESCAP은 UN 본부의 mandate내에서 아 · 태 지역 내 UN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 · 해결 · 집행해 나가는 UN 지역본부로서 경제, 사회, 금융 등 포괄적 분야에 걸쳐 업무 수행해나가는 각료급 의사결정기구로, 현재 ESCAP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ECOSOC의 지역이사회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 및 경제 문제에 대해 총회 및 분야별 회의 개최를 통해 토론과 정보교환의 장 역할, 두 번째는 관할 지역 내의 사회 및 경제개발 문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동향 분석 등을 통한 규범 및 분석적 역할(normative and analytical work), 세 번째는 실질적인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수행이다. 다음에서 국제협력단과 많은 관계를 갖는 기술협력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다.

## Ⅴ. ESCAP의 기술협력사업

### 1. 개요

ESCAP은 설립 당시 연구 · 자문기구로서 주로 간주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장의 개발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1974년 800만불 규모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총 1,450만불이 되었다. 예산의 47.2%는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이며, 유엔 정규예산(Section 22) 16%, UN Development Account 15.7%, UNDP 7.8%, UN Population Fund 2.6%, 기타 정부간 · 비정부간 기구 기여 10.7%이다. 2006년 회원국이 제공한 자발적 기여금 총액은 685만불이며, 주요 기여국은 일본(213.4만불), 한국 (188.6만불), 중국(80.7만불), 스웨덴(80만불), 인도(38만불), 독일(26.6만불) 등이다. 정부간 · 비정부간 기구의 기여 총액은 155만불이며, 주요 기여기관은 아시아개발은행(ADB: 75만불), 국제개발연구센터(IDRC: 23만불), 세계무역기구(WTO: 16만불), 유럽공동체(EC: 11.9만불) 등이다. 현물 기여로서 연 148개월(work-months)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Non Reimbursable Loan Expert)가 제공되었으며, 이중 81%는 한국정부로부터 제공되었다. 2006년 ESCAP 사무국의 기술협력 집행실적은 약 1,350만불이며, 이중 회원국 또는 기타 기관의 자발적 기여금이 1,070만불이다. 유엔 기술협력 정규사업(section 22)하에서 실시되는 기술협력은 178만불이며, 이중 70%이상은 최빈국, 내륙개도국, 태평

양 개도국, 경제체제전환국 등 43개국에 대한 59개 자문단 파견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30%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기술협력을 포함하여 지역훈련활동 및 fellowships을 이행하는데 사용되었다.

## 2. 추진절차

ESCAP의 기술협력사업 추진 절차는 전체적으로는 다른 개발협력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실제 수행과정상에서 UN기관 또는 지역이사회라는 기관 자체의 특수성에 기인한 실무적인 차이점이 많이 있다.

### 가. 사업형성 및 심사

■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는 공여기관 또는 공여국이 예산 지원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된다. ESCAP과 공여기관이 구두 협의를 통해 사업예산, 분야 등에 대해 초안을 협의하면, ESCAP의 실무국은 협의사항에 따라 Project Profile이라고 불리우는 사업개요서를 작성하여 내부심사 과정을 거쳐 공여국에 제출된다.

### 나. 사업계획

■ 공여국이 결정된 Project Profile은 다시 실무국으로 넘겨져 사업기획 단계로 넘어간다. Project Profile은 확정된 예산 및 수원국 등에 따라 Project Document로 심화, 발전되게 되어 총장의 승인을 받게되면, 공여국에 제출되고, 이를 기초로 공여국과 ESCAP간 사업추진을 공식화 하는 Agreement를 체결하게 된다. Agreement가 체결되고 나면, ESCAP은 공여국에 사업예산을 신청하고, 동 예산은 뉴욕UN본부를 거쳐 방콕으로 전달된다. 실무국은 지원된 예산에 대한 예산배분요청서(Allotment Request)를 PMD에 보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계좌(Project Account)를 배정받는다. 예산 사용이 가능해지면, 실무국은 사전조사 등을 통해 수원국과 사업을 협의한 뒤, Letter of Agreement(LoA)를 체결하여, 수원국과 ESCAP간 사업추진을 공식화 한다.

### 다. 사업실행 및 종료

■ LoA체결로 사업추진이 공식화되면, ESCAP은 추가 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Action Plan(사업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동 계획서에 따라, 수원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ESCAP 실무국은 Agreement에 따라, 반기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PMD를 통해 공여국에 제출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시에는 역시 PMD를 통해 Amendment를 통해 LoA와 Agreement를 수정한다. 사업이 종료되면 ESCAP은 종료 6개월 이내에 종료보고서를 공여국에 제출한다.

**기술협력사업 추진관련 주요 문서**

1. Project Profile: 사업심사를 위해 사업형성 단계에서 작성하는 간략한 사업개요서
2. Project Document: Project Profile을 심화한 사업계획서
3. Trust Fund Agreement: 공여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서
4. Letter of Agreement: 수원기관과 체결하는 사업추진 협의서
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계약기관과 체결하는 약정서
6. Progress Report: 공여기관에 반기별로 제출하는 중간보고서
7. Terminal Report: 공여기관에 사업종료시 제출하는 종료보고서

## Ⅵ. UN개혁과 ESCAP

2006년 UN은 개발분야에 대한 유엔 개혁 기획 보고서인 "Delivering as One"을 발표하고, 유엔시스템내의 유엔기구, 펀드 및 프로그램의 수원국내의 중첩되며 상이한 활동을 지양하고 UNDP 중심의 체계화된 개발협력 노력 강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몽골이 그 첫 번째 시범대상국으로 선정되어 단일 채널을 통한 협력방안을 시험 중이다. ESCAP도 이러한 UN시스템내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이미 두차례 외부 평가를 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 다양한 개혁안을 작성하여 회원국과 협의 중이다.

## Ⅶ. 한국과 ESCAP간의 협력

우리나라는 ESCAP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켜왔으며, 개발관련 대표적인 사례는 KECF (Korea ESCAP Cooperation Fund)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9월 ESCAP과 협력기금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987년 이후 2006년까지 912만불의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하였다. KECF 협력사업은 상설 신탁기금(KECF)에 매년 기여금을 예치한 후 이 신탁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며, 사업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탁기금에 재적립 된다. 상기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매년 40만불 내외의 기금을 제공하고, 양측간 연례회의(통상적으로 12월 개최)에서 신규사업을 검토, 승인하고 기존사업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 Ⅷ. KOICA-ESCAP 향후 협력 방안

ESCAP은 유엔사무국 산하의 아 · 태 지역 이사회로서 동 지역의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연구, 지역별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국 정부 대표들을 통한 의견교환을 고유의 주된 업무로 한다. 따라서, KOICA는 향후 ESCAP과의 협력방안을 고려시 이러한 ESCAP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ESCAP의 총회나 위원회는 아 · 태 지역의 개발이슈에 관한 최신 협력동향을 알 수 있는 토론의 장인 바,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여 개발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타 공여국이나 수원국과의 협력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KOICA가 국제적 개발흐름에 맞춰 이슈를 선정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라오스 원조동향

## Ⅰ. 일본의 대라오스 지원

■ 일본은 2003 ~ 2004년도 주재국에 84백만불을 지원하여 최대 공여국으로 일본 NGO 또는 국제 NGO,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대라오스 주요 지원분야는 인적자원개발(단·장기연수, 장학사업), 인프라구축(도로망확충, 교랑건설 등) 보건분야 등이다.

■ 금년도 4월까지의 일본의 주요 원조동향은 아래와 같다.

### 1. 산업인프라 분야

■ 힌업지역 교량 건설

– JICA는 13번 도로(왓타이공항 → 외곽지역)가 연결되는 교통난이 심한 힌업지역에 새 교량을 건설할 계획이며, 통신교통체신건설부와 교량 건축을 위한 조사를 위한 협정식을 갖고 JICA 전문가가들을 파견, 8월부터 교량 건축을 위한 조사 및 설계에 착수하여 2007년 말 완공 예정이다.

■ 캄무안주에 Community center건립

– 캄무안주 인본군 송홍마을에 일본에서 진출한 민간기업 Oji Lao Forest Plantation에서 30만불의 예산으로 5개의 게스트 하우스, 휴식공간, 미팅 및 교육실, 박물관, 양호실이 있는 회관을 건립하였으며 박물관에는 라오와 일본 출판물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동 센터에서는 어린이들의 미술활동, 일본어, 영어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동 센터는 마을주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스트 하우스는 일본이나 라오 정부관리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동 회사는 이 지역에 도로건설, 전기보

급을 하였으며 향후 마을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운영기금을 조성하여 빈곤퇴치를 위한 마을 경제 발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 2. 교육훈련 분야

■ 학교교복 지원

– 일본은행(도쿄미스비시)은 비엔티엔에 6,000벌의 여학생 교복을 지원하며 동 지원은 국가재활센터에 기증되어 사이타니, 박음과 상통지역의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각 복지시설 및 농촌 마을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금번 지원은 동 재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재난구호협회 주선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3. 공공행정 분야

■ 법제정비 지원

– 일본과 라오스가 법제정비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합동 최종회의는 법무부, 대법원, 검찰 및 일본측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정부는 JICA를 통하여 주재국 법무부와 1998년부터 법제개선 분야를 지원하여 왔다. 동 평가회는 그간 실시한 프로젝트의 적정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성의 5개 카테고리에 대한 결과와 수행방법, 관련기관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OECD의 DAC 원칙에 의거하여 JICA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시행된다.

## 4. 의료보건 분야

■ 의료물류센터 건립

– 일본은 라오스 북부 및 남부지역에 의료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함. 우돔사이지역에는 81천불, 참파삭에 78천불을 투입하였다. 민간분야 차원 생명보호 프로젝트 무상원조의 일환으로 5개월간에 걸쳐 건립되었다.동 프로젝트는 약품과 의료장비를 알맞는 조건에서 보관하므로써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의약품 및 의료설비의 효과적인 관리 능력 배양이 목적이며 동 의료물류센터는 두 지역 뿐만아니라 인근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일본은 라오스 전역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센터, 병원, 보건소 건립을 지원한 바 있다.

■ 병원개보수 지원

– 일본은 10개의 지역병원과 비엔티엔시내의 수도공급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10개 지역병원의 개보수와 수도의 수도공급시스템 개선 지원이 포함된다. 첫 번째 단계로 현재 카오레오와 치나이모지역의 수도시설을 비엔티엔 중심까지 연장 3.6억불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10개 지역병원의 의료기구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13억불을 지원 예정이다.

### 4. 기타

■ 홍수피해 농민들에게 미곡 지원

– 일본정부, 노동복지부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300백만엔 상당의 쌀7,900톤을 기증하였다. 2004년 시작된 KR1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홍수 수해를 입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비엔티엔시를 비롯하여 17개지역에 지원되며 1994년 이후 일본은 118,000톤(3,776백만엔)의 식량을 원조했다.

■ 일본 민간기업 국립재활센터에 휠체어 지원

– 일본 민간기업인 니치카카우회사(At-home nursing company)가 국제 NGO인 Asian Development with disabled People(ADDP) 요청으로 20만불 상당의 200개 휠체어를 국립재활센터에 기증했다.이는 노약자, 장애인들의 재활 및 독립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역으로 보내져 장애인들에게 직접 배포될 예정이다.

■ 민중 보호 프로젝트

– 일본은 민중 보호프로젝트로 49천불상당의 의수족을 지원했고 동 지원은 국립재활센터를 통해 전쟁상해, 소아마비,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루앙프라방에 86,100불을 지원하여 4700명 각성제 중독자를 위한 재활센터를 내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은 3개월 과정으로 1회에 50명 중독자를 대상으로 재활교육이 가능할 것이며 동시에 농업 등의 직업 재활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루앙프라방에는 6,200명의 마약 중독자가 있고 해마다 HIV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1년 라오 정부는 135명의 마약소지, 인신매매등 마약사범을 사형시킨 바 있으며 2006년에는 146명으로 늘어났다. 라오스 정부의 마약근절 노력은 아세안과 중국과 협약을 맺어 2015년까지 완전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본 세계은행을 통하여 라오스 지원

– 일본은 세계은행을 통하여 28.4백만불을 4개 빈곤퇴치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이다. 동 지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튼 II(수력발전소 건립)프로젝트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씌여질 계획으로 이중 15백만불은 캄보디아 전기수출을 위한 사라완지역에 전기공급 송전탑 설치에 투입되고, 3백만불은 정부 예산집행, 감사, 보고 개선에 쓰여질 것이다. 기타 10백만불은 정부의 예산집행관련 능력함양을 위하여 집행되어질 것이며 46.9천불은 빈곤퇴치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에 사용되어질 것이다.

## Ⅱ. 스웨덴의 대라오스 지원

■ 스웨덴은 기존 지원국을 70개에서 33개국으

로 축소하기로 하였으며 대 라오스 원조도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 스웨덴 정부는 ODA 지원 범주를 빈곤퇴치, 효과적인 원조, 수원국의 인권보호를 통한 민주화 및 선정 지원, 기타 스웨덴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스웨덴은 지난 30년간 라오스 원조를 실시하여 왔으나 라오스 빈곤의 주요 원인이 정치와 인권 보호 수준이 낮은데 기인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2-4년간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할 계획이다.

■ 2008년까지 스웨덴의 대라오스 지원 주요 분야로는 라오스 재정부 연수실시, 국가 통계청 지원, 교육분야 지원, 라오 국립대 지원이 있다.

## Ⅲ. 중국의 대라오스 지원

■ 중국정부는 최근 경제발전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ODA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양자 채널을 통하여 무조건으로 공적 지원을 실시해왔다. 지원 분야로는 기자재 지원, 인적자원 개발, 기술지원, 무이자 차관, 저이자 차관 등이 있다.

■ 대 라오스 지원은 국가 사회경제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주재국 자립 능력 개발 지원 분야와 투자 무역협력에 중점을 두어 왔다.

■ 중국은 그간 문화, 보건, 인적자원개발 뿐만 아니라 국립문화홀 건립, 파뚝사이 공원건립, 루앙프라방 주립병원 건립, 남고 수력발전소 건립, 방비엥 시멘트 공장 건립 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무상으로 60만불을 마약재활센터에 지원하기도 했다.

■ 중국의 대라오스 지원의 경우, 무상원조와 경제투자의 경계가 모호한 실정이다.

## Ⅳ. 프랑스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훈련센터 지원

■ 프랑스는 2.7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훈련센터를 건립한다. 동 프로젝트는 라오스 정부가 프랑스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개발관리 및 안전한 식수보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라오스 전역의 생활용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이며 현재 20명의 강사가 배정되어 있다.

## Ⅴ. 미국 보건부 산하 미타팝병원 지원

■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REI(US-based Resource Exchange International)는 보건부 산하 미타팝에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동 프로그램에는 소아과 종사자 능력개발 및 의학관련 영어교육, 소아환자 다루는 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관계자들을 미국 현지로 보내어 연수를 시킬 계획이다.

## Ⅵ. EU 북쪽지역에 35개학교 지원

■ 유럽연합은 북쪽지역 퐁살리, 루앙프라방, 루앙남타 3개주에 35개의 초등학교 건립하여 기초 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동 프로젝트는 북쪽지역에 기초 교육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0개 초등학교 건립사업의 일부이다. 동 프로젝트의 예산은 라오정부가 40만유로, 유럽연합이 6백만 유로를 부담하여 2004-201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 동 초등학교는 상기 3개주(퐁살리주, 루앙프라방주, 루앙남타주) 9개군(남타군, 비엥포카군, 롱군, 촘펫군, 비엥캄군, 크후아군, 삼판군, 마이군, 옷투군)에 건립될 예정이다. 동 군의 취학율 및 교육환경은 열악한 수준이고 교실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서 2007-2008년까지 95개 교실을 더 확장할 계획이다. 소수종족 430개 마을 6,000명의 어린이가 수혜 대상이고 교사 1,200명의 훈련도 포함된다. 또한 성인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 교육과정 지원도 포함된다.

■ 마을단위로 각 35만유로를 지원하여 주민들이 설계에서 시공까지 참여하여 보다 적극적인 협력체계 유도와 동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 Ⅶ. 독일 우돔사이주 학교 중퇴자 지원

■ 경제적인 문제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우돔사이주 500명 학교 중퇴자를 위해 독일 GTZ에서 1.5백만불 예산으로 직업훈련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기존에 있는 직업훈련학교의 교육환경은 열악할 뿐만 아니라 1200명 학교 중퇴자 중 60명만이 가축사육, 농업, 기술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새로 건립될 직업훈련 학교의 규모는 10개동에 각 교실 6-7개규모로 한 교실에 4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동안 독일은 라오스에 지속적으로 직업훈련분야를 지원하여 왔다.

## Ⅷ. UN Habitat 루앙프라방에 급수시설 지원

■ UN Habitat는 루앙프라방주 씨엥눈, 빡칸, 팍배드, 팍또마을에 식생활수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설치하여 6,400 여명이 농업용수, 가축사육,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등 수혜를 얻었다. 급수시설은 용천수를 활용 중력으로이용하였으며 예산은 UN Habitat 25만불, 해당군에서 10만불, 식수공급 기관에서 15만불이 투입되었다. 물공급은 국가경제와 빈곤퇴치를 위한 4대 우선과제 중 하나이다. 주재국내 급수시설 지원은 ADB에서 총 300백만불을 투입하고 있고(50만불–능력함양, 250만불– 남중부지역 물공급 시설 지원) 캐나다 등이 모니터링 및 사업 수행에 참여하고 있다.

[자료: 주라오스대사관]

# 스리랑카 원조동향

## Ⅰ. 일본

■ 일본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재국 동북주 지역 신규 난민(newly displaced people) 구제를 위하여 3,175톤 상당의 쌀을 지원키로 했다.

- 총 3,175톤의 쌀(총 180백만루피/약 1.7백만불 규모로 추정) 중 1차분 422톤이 콜롬보항에 도착하여 4.27 기증식을 개최하였으며, 잔여분 3,175톤은 '07.5월중 콜롬보항 도착 예정이며, 배분작업은 WFP(World Food Programme)에서 담당하게 된다.

- 내전으로 인한 동북부 지역 난민구제 및 생계복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일본은 지난 2006.12월 UNHCR을 통해 1만 여명의 난민에 대한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침구용 매트 1만장, 개인용 수통 1만개, 천막 4천장 등)

## Ⅱ. 호주

■ 호주는 DAP(Direct Aid Programme : 소규모 자금을 대사관 주관으로 수원 기관에 직접 지원)의 일환으로 암파라, 캔디 등 5개 지방지역에 4만불을 지원했다.

- 개발에서 소외된 지방 오지의 생활수준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금번 자금은 암파라의 화장실 및 우물시설 지원, 캔디의 장애인을 위한 인공 수족 지원, 아누라다푸라의 여성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한 우물시설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 Ⅲ. SARRC 정상회담 개요

■ 일 자 : 2007. 4. 3 ~ 4

■ 장 소 : 인도 뉴델리

■ 참 석

- SARRC 회원국 대표 :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 SAARC 옵저버 : 한국, 일본, 중국, EU, 미국

■ 주요 안건 : Terrorim, Trade, Transit

### 1 주요 내용

■ 주요 결의

- 인도는 SAARC 회원국들의 교사, 학생, 교수, 언론인 및 환자들에 대해서 비자면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남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에 대하여 관세 면제 조치를 취함

- 방글라데시는 합판, 생사, 3천cc 이하 자동차, 샴푸, 유가공품 등 4천 여개 품목에 대하여 SAARC 회원국들에게는 관세의 5%를 감하기로 함

- 뉴델리에 남아시아대학을 설립하자는 중의가 모아졌으나,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는 국별 캠퍼스 유치 필요성을 강조

- 자연재해 등 발생시 식량위기에 대비한 SAARC 차원의 식량은행(food bank)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각 회원국이 별도로 운영하는 식량은행의 재고 소진시 동 지역대표 식량은행으로부터 보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

- 국경간 무역촉진을 위한 SAARC 중재위원회의 설립

- 평화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업의 증대

- 2008년을 "SAARC 굿거버넌스의 해"로 지정

- SAARC 개발기금(Development Fund)의 조성, 인도는 지역내 빈곤퇴치를 위하여 동 SDF 기금에 100백만불 지원 공약

- 모든 SAARC 회원국들은 테러리즘 근절에 적극 협력키로 하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포괄적 협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함

■ 옵저버 참석국들은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남이 지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주요 경제강국인 옵저버 참석국들에게 SAARC 회원국들은 새로운 투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동 지역내에서 SAARC와 같은 지역협력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옵저버 참석국들은 SAARC 회원국들에게 지역내 협력강화를 위한 무역증대, 에너지부족 해소, 국가간 연계강화, 투자증대 및 평화와 안전 촉진을 강조했다.

## Ⅳ. 원조공여국 월간회의 개요

■ 일 자 : 2007. 4. 19

■ 참 석 : 네덜란드대사관, 스웨덴대사관, 프랑스대사관, ADB, AusAID, CIDA, EU/EC, ECHO, Hellenic Aid, IOM, JICA, JBIC, KfW, KOICA, SDC, UNHCR, USAID 등 31개 기관

### ❷ 주요내용

■ 북동부 교전지역 인도적구호 현황

- 새롭게 난민대열에 합류한 신규편입 난민수가 305,000여명에 이르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400,0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북동북 교전지역 난민구호에 총 66백만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35백만불 상당 자금이 확보되어 UNDP, UNICEF, WFP, ICRC 등을 통해 식량공급, 난민촌 설치, 식수공급 등 구호 사업 추진중

■ 스리랑카 정부의 10개년 개발계획(안) 확정 예정

- 2007. 1월말 개최된 "개발포럼"에서 공개된 스리랑카 정부의 10개년 개발 계획(10 Year Horizon Development Framework) 관련, 그간 기존 공개된 초안을 바탕으로 스리랑카 내의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계 및 원조공여국 대표 등을 통한 검토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6월 말경 최종안 확정 예정

- 6월 말 확정될 최종안에는 우선지원분야의 선정과 집중 차원에서 economics, financial realities, macro-economic forecast and scenarios, the lagging region, Gama-Neguma(rural development), support to SME 등 분야에 대한 집중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공여국 대표격인 Steering Committee는 내전중인 정치적 상황, 인권 및 인도적 관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고 있음

■ 주재국 인도적, 개발원조 시행 원칙

- 주재국 원조공여국 모임은 원조공여국(기관)의 사업수행에서의 책임 및 중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인도적, 개발원조 시행원칙(Guiding Principles for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ssistance)"에 대한 공

동서명 작업을 추진중에 있음

- 주재국 정부 – LTTE간 평화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일부 지역 및 계층에 편중되고 있다는 공여국 내부의 자각 등에 따라 EU 등 공동의장국을 중심으로 대주재국 원조시행상의 질적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대주재국 원조공여국간 원조 사업 수행에 있어 지역적, 민족적 편중(콜롬보 중심의 서남부 지역 및 싱할라족 위주의 지원)을 해소하고, 개발소외 지역에 대한 공평한 지원, 공여국간 원조조화 및 인권배려 등 사업수행 원칙에 있어 공동서명 필요성이 대두됨

- 인도적, 개발원조의 목적 재확인, 원조의 비차별성/투명성/책임성/지속 가능성 및 인권존중 등 강조, 원조공여국(기관)간 원조조화, 주재국측에 원조기구 직원(Aid Worker)들의 사업현장 접근성 및 안전성 제고 요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 원칙 공동서명에는 네덜란드, 독일, 미국, 스위스,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서방 원조공여국과 일본이 참여 예정, 5월 중순으로 예정된 동 서명에는 우리나라도 참여 예정

[자료: 주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대사관]

# Ⅲ. ODA관련 국제회의

1. 제3차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 총회

ㅇ 개요

ㅇ 연설문

반기문 / UN 사무총장

송민순 / 외교통상부장관

ㅇ 발표자료

- Major Achievements and Reflections on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2. 제2차 OECD 개발원조 정책대화

ㅇ 개요

ㅇ Issues Paper

3. ODA 국제 워크숍

ㅇ 개요

ㅇ 발표자료

- Strategies on Raising Public Awareness in South Korea: How to build public and political support for development assistance

# 제 3차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 총회

정리 : KOICA 정책연구실

## I. 개요

■ 일 시 : 2007년 9월 3일(월) ~ 4일(화)

■ 장 소 : 소공동 롯데호텔

■ 주요 일정

– 외교통상부장관 환영사 및 유엔사무총장 축하영상메세지

– 전체회의(Plenary Session) 및 라운드테이블 토의 진행

– 차기 의장국 선출

■ 참 석 : 35개국 정부대표 70여명을 비롯, UN 등 국제기구와 NGO관계자 등 총 120여명

## II. 주요 결과

■ 항공권연대기여금의 도입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를 통한 기여금운용 등 혁신적 개발재원 분야에서 국제사회가 이룩한 성과 확인

– 국제금융백신기구(IFFIm), 선시장공약(AMCs) 등 최근에 출범한 혁신적 개발재원 메커니즘의 의의와 개발재원 확대에 미치는 효과 확인

– '개발을 위한 외환거래세', '조세피난과 자본유출경감', ' 이민자 송금 '등 새로운 재원도입 가능성 논의

■ 2008년 하반기에 예정된 '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행점검을 위한 도하 개발재원회의 ' 와 연계하여 향후 리딩그룹의 발전방안 논의

■ 세네갈을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하고 제 4차 총회를 2008.3월 다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반기문 UN사무총장 축하영상메세지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Distinguished participants and ladies and gentlemen,
I am happy to address this 3rd plenary meeting of the Leading Group on Solidarity Levies to Fund Development even if I do so long distance.

This meeting is held in my native country. During my tenure a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Republic of Korea decided to join the leading group. Today 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 continue to strongly support the exploration of innovative mechanisms for financing for developmen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Leading Group in 2006, several creative projects in the area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have already been launched, the air-ticket solidarity levy, the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zation, the advanced market committment pilot program. The meeting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take start of the progress made to date in these and other initiatives. It also allows you to exchange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as we move forward in achieving the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As you know this year marks the mid-point in our global pursuit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by 2015. Yet the funding gap we are facing reminds us all of the crucial needs for additional flows of development finance. Closing this gap is essential if we are to alleviate extreme poverty, fight diseases, and achieve the other development targets.

It is vital that the momentum be maintained and that new funding initiatives be encouraged. This is all the more important as we prepare for the follow-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o be held in Doha in 2008.

The United Nations system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the area of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The UN is a catalyst for new ideas, it is a forum for

consensus building and it is an engine for implementation. In that spirit I wish to reiterate the firm support of the United Nations to the Leading Group. I thank every one of you for your committment and wish you a most productive meeting.

Thank you.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환 영 사

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would like to start by extending a warm welcome to all of you to the Third Plenary Meeting of the Leading Group on Solidarity Levies to Fund Development. It is indeed a great pleasure to welcome such an impressive array of participants, including representatives Member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I look forward to this meeting building upon the valuable work done at the previous Plenary Meetings held in Brasilia and Oslo. I am confident that this Meeting will also serve as a valuable occasion to review the achievements of the discussions so far on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I hope that we can also gain a renewed sense of their importance in our common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and combat diseases, a noble aim that unites us. Furthermore, this Meeting will undoubtedly help rally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issue of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Let me touch on poverty and terrorism with a few words. One of the threatening challenges that are ubiquitous todayis terrorism. Nobody is safe from the threat. While introducing political security and safety measures to prevent and subdue coward act of terrorism including kidnappingand killing innocent people, what we have to do is focus on the root causes of these persistent evil. I think that the answer lies in the international concert to eradicate poverty and encourage sustainable development.

Distinguished Gues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ites in recognition that the eradication of pover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keyin our efforts to achieve peac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Namelyit is an imperative element in our pursuit of the common ideals of humanity. More than at any other time in the history of humankind, the present generation has given profound thought to this issue and has been striving to find the best way to rise to the challenge.

Securing the resources for developmentis, more than any other factor, the starting point for overcoming poverty and underdevelopment. In this regard, through the Monterrey Consensus in 2002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me to an agreement to substantially increa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Nevertheless, both the quantity and the quality of resources for development are still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t is this recognition that has yielded the idea of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Despite its short history, the idea of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is emerging as a major issue on the agenda of the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through the Declaration on Innovative Sources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2005,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nfirmed that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is indeed an essential tool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 and has made clear its commitment to work further to this end.

Moreover, I am very pleased to note the visible and valuable achievements reached by such new mechanisms including the air-ticket solidarity contribution,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zation (IFFIm) and Advanced Market Commitments (AMCs).

Ladies and Gentlemen,

As an emerging donor, Korea is now making utmost efforts to secure more and better aid. In addition, the Government of Korea has also actively taken part in the discussions on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this regard, Korea assumed the Presidency of the Leading Group in March 2007, and is also a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of UNITAID,

representing the Asian countries.

In particular, th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alaw to formally introduce the international air-ticket solidarity contribution. This measure, which will take effect from September 30, will impose a charge of one thousand Korean won, equivalent to one dollar, on each departing international air-ticket to be used as resources for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make use of the resources in particular to combat poverty and diseases mainly in the African region.

The Leading Group on Solidarity Levies to Fund Development has played a key role in making great progress in the discussions on new mechanisms of financing. This Meeting of the Leading Group has now emerged as the most significant forum in the field of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with participants from 53 countries in Europe, Africa, South America and Asia,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This Third Plenary Meeting holds special meaning in that it provides an invaluable opportunity to examine the achievements made so far. I look forward to us all reflecting on how far we have come and so pooling our wisdom to set the future direction for our discussions.

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Absolute poverty is not only a humanitarian calamity but a real threat to peace, human rights and the dignity of humankind. I believe that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is emerging as a powerful too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ir fight against poverty.

Once again, I wish to extend a heartfelt welcome to you all. In Korea, Autumn starts with September. I hope that in this season of harvest you will take home with you many fruitful results from this meeting.

Thank you.

# 제 3차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 총회

## 발표자료 : Major Achievements and Reflections on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 GENERAL REMARKS ON MAJOR ACHIEVEMENTS

by Mari Skåre / Senior Adviser,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ank you Mr. Chairman,

The Leading Group on Solidarity Levies to Fund Development is now in its second year. It is still a very young initiative, but the issue at hand is not new how to meet the challenges of financing development. The Leading Group's advantage compared to many other international fora is that it provides an arena for bringing new ideas to the table and to have frank and focused discussions on selected topics. As was highlighted by the chair of the conference in Oslo in February the Group's mission lies in moving issues forward and increase their prominence on political agendas.

Some of the ongoing processes, and in particularly the innovative financing mechanisms related to the health sector, have matured and are now becoming operative, and I would add – successfully so. The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zation (IFFIm) raises funds in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nd has during its first year of operation mobilised more than 800 million dollars to GAVI funded vaccine programme and activities. This equals the

sum disbursed by ordinary GAVI allocations since the start of GAVI in 2000.

Even more directly a spin-off of this group is the International Drug Purchase facility UNITAID, that was launched in September 2006, during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Essentially financed by solidarity levies on airline tickets, it benefits greatly from the prospects of stable and sustainable resources in leveraging reduced price and access to life saving drugs for the poorest countries. France has here been able to demonstrate to its citizens the direct link between small, individual solidarity contributions and the rapid achievement of remarkable results.

The UNITAID initiative has in may ways overcome the divides between "donors" and "recipients", with a high buy-in from countries on all continents. When the stakeholders assemble, the dialogue is deeper, more equal and more result oriented than in many of the more traditional intergovernmental fora. In addition, civil society engage at all levels of governance and bring their impatience, creativity and challenges, contributing greatly to taking the agenda forward. While still in its early stages, UNITAID is so far possibly the most convincing product of solidarity levies in terms of making the case to the public.

One of the panel debates in Oslo in February was on a pilot Advance Market Commitments (AMC)for a pneumoccal vaccine. The innovative aspect of AMC is clearly that of providing industry with an incentive to develop a vaccine without funding it and that most likely would not have been prioritised by industry. A prerequisite is that the vaccines to be approved have to betargeted specifically to developing countries. Norway is currentlychairing the donor committee setting up the initiative which is scheduled to be operative by the end of this year.

The international debate on migrants' remittances has also been moving forward and was discussed at the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Brussels in July this year. Many countries are now focussing on the issues on remittances on both an international and a national level, and,for instance in Norway, we are working on improving conditions for migrants to remit money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and have

initiated a pilot project to direct fund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s.

At the Oslo conference in February there were two thematic issues for which the call for active follow-up was particularly vocal; this was the issue of currency transaction levy andthe issue of tax havens and their role in facilitating capital flight from developing countries. The idea of establishing task forces for the two issues under the Leading Group was put forward.

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Norway is willing to take a lead in a task force addressing the role of the so called 'tax havens' and capital flight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consultation with interested partners we will draw up objectives, work methods and a time frame for this work. France, Spain and Chile have already indicated their interest, but needless to say, we hope more countries will join.

One objective should be to get more data on the table. We need to have bett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financial structuresand what role they play in money laundering and hiding stolen assets. The cross-border flow of the proceeds from criminal activity, corruption, and tax evasion is estimated to be between 1 and 1.6 trillion dollars every year. A large chunk of this comes from developing countries. We need to know more about these flows and the mechanisms and financial structures that support them.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understanding the role of tax havens in hiding stolen assets deriving from resource extraction and the role of these structures in what is referred to as 'the paradox of plenty'. We are of course open for suggestions from partners on other focus areas.

Partners in this Group have already provided valuable information and analysis. We are currently in dialogue with the World Bank on the need for developing a better knowledge base on the flows of illicit capital and the mechanisms and structures set up to hide stolen assents. The 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 (STAR) is being launched jointly by the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and the World Bank Group 17 September. We welcome this initiative. Prevention of theft and recovery of stolen assets from developing countries is a daunting challenge and focus should be on retention of capital – as well as

on recovery.

The review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will take place in Doha, tentatively in December 2008. We wish to bring the issue of capital flight, and in particular illicit flows of capital out of developing countries, higher on the international agenda and discussed also in the United Nations.

In the Monterrey Consensus it is stated that a critical challenge is to ensure the necessary internal conditions for mobilizing domestic savings, and that an enabling domestic environment is vital also for reducing capital flight. Another side of the equation are the financial centres – often located in developed countries – setup to hide stolen assets. These mechanisms need to be better understood and we hope that a task force under the Leading Group can contribute to the Finance for Development Process by raising awareness and identifying key areas for action.

Our intention is to invite the task force to Oslo towards the end of this year and report back to the next plenary meeting of the Leading Group. We envisage another 2 ~ 3 meetings leading up to the conference in Doha and invite all interested partners to participate in this process.

Mr. Chairman,

As I said initially; the mission of the Leading Group lies in bringing issues forward. The work of this Group has already produced some good results. In the run up to the Doha conference, partners should consider these results and the relevance of bringing these discussions into the broader financing for development discussion in the UN. Many of the issues we are discussing – currency transaction levies, tax havens and capital flight, or remittances are complex issues and we probably will need to have a long-term perspective on this work. We also need to collaborate closely with other partners outside this Group.

I am a new participant in this group and allow me on a personal note to say how pleasedI am to be here. I a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cooperate with this fine group of knowledgeable people and learn from you how we, in the spirit of solidarity, can work together to fight hunger and poverty and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I wish to thank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hosting this meeting, I am confident that this Group will continue to take the lead on designing innovative financing mechanisms. We will do this by engaging the best knowledge available, by inclu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other participants from civil society and engaging in frank and open discussions on the way forward.

## Reflections on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by Alexander Trepelkov / Deputy Director,
Financing for Development Offic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Distiguished Participan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great honour and pleasure to address the Third Plenary Meeting of the Leading Group on Solidarity Levies to Fund Development, hosted by its incumbent Presidency,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apital city of Seoul. This meeting provides a unique forum for participating member and observer countrie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to exchange views on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n the area of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On behalf of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I wish to extend our warm greetings and appreciation to the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this important international event.

### The setting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continues to play a crucial role in financing the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includ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s a result of the 2002 Monterrey Consensu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he declining trend of ODA was reversed. ODA rose from $52.4 billion in 2001 to $106.5 billion in 2005, or from 0.21 per cent to 0.33 per cent of the gross national income (GNI) of developed countries. However, a large part of the increase was due to debt relief, emergency aid and technical cooperation.

Hence, with the reduction of debt relief in 2006, ODA dipped to 0.30 per cent of GNI.

Despite the recent advances and new commitments, the current and projected levels of ODA for the period 2006 ~ 2010 still fall far short of targets. It has been estimated that at least $150 billion a year would be needed to reach the MDGs by 2015. The collective ratio of ODA to GNI is projected at 0.36 per cent by 2010, well below the historical peak of 0.5 per cent in the 1960s and the United Nations target of 0.7 per cent. Indeed, the funding gap at the mid-point of the global pursuit to achieve the MDGs by 2015 confirms the need for additional flows of development finance, including through new and innovative mechanisms. Looking beyond 2015, additional resources would still be required to finance longer term development objectives and a range of "global public goods".

## The proposals

Over the years, there have been a large number of proposals for innovative financing mechanisms. With a few exceptions of recent vintage, most of the proposals are not entirely new. Currently, international attention is being focused on a few key proposals. They fall into three major categories grouped by source of funding: (1) alternative means of mobilizing public resources (or financial engineering); (2) global taxation; and (3) private contributions.

The overarching objective of all proposed mechanisms is to mobilize new and additional resources for development, on a stable and predictable basis. In evaluating them, main criteria include: (1) their revenue potential; (2) speed of availability or implementation; (3) political feasibility; and (4) level of participation required for success.

## Alternative means of mobilizing public resources

Among alternative means of mobilizing public resources, the United Kingdom's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IFF) seems to show the greatest potential.This proposal involves borrowing against future ODA commitments. Its particular feature is that it enables front-loading aid flows through a bond mechanism guaranteed by participating governments, thus allowing aid commitments to be used before they are budgeted. In its

original design, it would increase ODA disbursements up to $50billion in 2010–2015 but could reduce them thereafter down to zero by 2020, partly as a result of repayment of the bonds used to accelerate aid disbursements. It therefore needs to be accompanied by refinancing mechanisms that will ensure that adequate financial flows will be available to meet development needs beyond 2015. To be effective, IFF requires sufficient donor countries to sign up and continue to make commitments. A pilot project for a small-scale facility,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zation(IFFIm), of $4 billion over 10 years was launched by a public-private partnership,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AVI), with the support of seven donor countries, to test this mechanism experimentally.

Another proposal of this group, Special Drawing Rights (SDRs) for Development Purposes, in particular the MDGs, was put forward in 2002 by George Soros. The proposal would involve the allocation by developed countries of SDRs to a dedicated trust fund, either by gift or through a redistribution of quotas, which would require amending the IMF Articles of Agreement. It has the potential of generating some $25 billion, depending on periodicity of allocations to developing countries. Beneficiaries would receive long-term loans at low interest rates. The 1997 amendment for a special and unique allocation to double cumulated allocations to SDR 43 billion ($65 billion) has yet to be ratified by 100 IMF members with 85 per cent of voting power. Several developed countries have opposedthe idea on the grounds that it would be inflationary (an argument which can be overcome if the amount issued does not exceed the demand for international reserves) and that it confuses the role for which SDRs were created. Another obstacle is lost interest income to SDR providers.

## Global taxation

Proposals for global taxation in support of development have a long history and are often criticized on grounds of feasibility. Thus, these taxes need to be designed as financing tools that are nationally applied and internationally coordinated and that entail limited management costs. While universal participation is not indispensable, it would serve the interest of development, as more

resources would be raised. In the short term, however, progress can be made with the participation of a small group of countries.

One type of tax that has been commonly suggested is aCurrency Transaction Development Levy (CTDL). Its estimated revenues would range from $30.6 billion to $35.4 billion per annum if it was equivalent to two basis points of market currency transactions, and from $16.8 billion to $19.2 billion if it was equivalent to one basis point. It is also seen as playing a dual role ("double dividend") in that it should reduce volatility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provide substantial 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ment. However attractive the tax might be in terms of revenue potential, its implementation is constrained by several obstacles. The tax base will have to be defined so as to exclude transactions by market-makers and special treatment for derivatives to avoid double taxation. It will also have to be protected from erosion, for even if all major financial centers participate, there is a risk that smaller centers will attract an increasing volume of activity from those wishing to evade the tax. Besides, strong opposition by major stakeholders (who account for the majority of the transactions to be taxed) must be overcome.

Another type, Global environmental taxes, are also seen as yielding a "double dividend" in that they should benefit the environment while also raising significant resources for development. A front-runner among several proposals is the carbon tax which would be applied to carbon emissions. On the basis of a figureof $21 per ton (5 cents per gallon) of gasoline, revenues would reach $130 billion per annum and $61 billion per annum if the tax was restricted to high-income countries. However, several challenges arise: the need to consider "free-riding" risks by countries not applying the tax; the need to coordinate the tax with the current practice of negotiable emission permits established by the Kyoto Protocol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redistributive effects that might require and international agreement on compensation.

Most recently, Solidarity Levy on Airline Tickets, proposed by France, has come to the centre of international attention.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axing air transport makes economic sense. The level of taxation onair transport is lower than on other means of

transport, since aviation fuel is tax-exempt. Aircraft engine emissions play a major role in global warming; however, they are not covered by the Kyoto Protocol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Several options seem to be technically feasible. Taxing aviation fuel would have a positive environmental effect. A tax on airline tickets could easily be implemented and would present no legal obstacles. A positive public perception could be achieved by allocating such contribution to a fund dedicated to a precise development objective. In view of the small size of this levy, it would produce a minimal impact on airline activity. A 5 per cent rate applied to first-class and business-class tickets would yield $8 billion per annum, while a $1 contribution on each ticket issued would yield about $3 billion per annum. Another alternative would involve the indirect taxation of air flight corridors: revenues could reach $10 billion per annum. An indirect tax on passenger transportation could reach $20 billion per annum.

Arms trade taxcould yield between $2.5 billion and $8 billion per annum. It is also advocated as having a "double dividend". However, if its full potential is to be realized,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tax is passed through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so that the cost of acquiring arms is effectively increased. Also, if the mechanism is to be efficient, it would be crucial to form a large coalition, including all major arms producers and exporters.

## Private contributions

Among various means of mobilizing private resources for development, Migrants' remittances have recently attracted special attention. Remittances are neither new nor innovative, but they have boomed in recent years and are now larger than ODA flows. Various measures are already being taken by various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agencies to facilitate such flows. Remittances remain within the private sector and are largely used for consumption by the migrants' family. Thus, their contribution to societal development goals is unclear, but some innovative ideas are being designed (e.g., co-financing by governments of funds sent by migrants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y, incentives to attract migrants' savings to their country of origin, etc.).
Incentives to private donationsfrom industrial

countries to programmes for the poor in developing countries may be provided in various ways. Donations can be encouraged through tax deductions, credit card payments or utility bills. Mechanisms linked to voluntary contributions benefit from but do not require international coordination.

Other proposals in this category include Global lottery and Global development bond.

##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United Nations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international efforts to explore innovative sources and mechanisms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Basically,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is three-fold. First,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acts as a catalyst for policy analysis and new ideas. Second, the United Nations intergovernmental machinery provides a forum for consensus-building. Third, United Nations agencies serve as agent for implementation.

## Acting as a catalyst for policy analysis

In the area of policy analysis, UN-DESA commissioned the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of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WIDER) to examine existing proposals, focusing on their design and policy implications. The project resulted in a comprehensive study, entitled "New Sources of Development Finance", which was published in 2004. The policy-focused summary of the study was submitted to the UN General Assembly. In addition, an analytical review of innovative sources of finance was included in the UN-DESA flagship publication,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2005: Financing for Development.

## Providing a forum for consensus building

Over the recent years, the issue of innovative finance, once considered politically contentious andtechnically arguable, has been mainstreamed into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It now features prominently in the intergovernmental deliberations on economic and social matter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United Nations system.

In September 2004, the United Nations hosted a Meeting of World Leaders for Action

against Hunger and Poverty, which launched multilateral discussions on innovative financing mechanisms at the highest level, led by the leaders of Brazil, France, Chile and Spain. The Meetingconsidered a report by the Technical Group on Innovative Financing Mechanisms, which provided a menu of viable options for implementation in the short, medium and long terms. As a result, more than 110 countries subscribed to the New York Declaration calling for special attention to innovative financing mechanisms – public and private, compulsory and voluntary, of universal and limited membership – to provide additional and stable funding for development.

In April 2005, the joint Development Committee ofthe World Bank and IMF reviewed proposals to complement increased aid flows with innovative mechanisms, such as IFF, global taxes and voluntary contributions, and welcomed further work on innovative sources of development financing. Accordingly, the issue of innovative sources of finance featured prominently on the agendas of the 2005 and 2007 spring high-level meetings of ECOSOC with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WTO and UNCTAD.

At the September 2005 World Summit, the world leaders recognized the value of developing innovative sources of financing and took note with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efforts, contributions and discussions in that regard. Moreover, 79 countries endorsed the Declaration on innovative sources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initiated by Algeria, Brazil, Chile, France, Germany and Spain.

At the end of last year, the UN General Assembly decided that the Follow-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errey Consensus will be held in Doha, Qatar in the second half of 2008. It was agreed that the Review Conference should assess progress made, reaffirm goals and commitments, share best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It should also identify obstacles and constraints encountered and actions and initiatives to overcome them, as well new challenges and emerging issues. The issue of innovative sources of development finance is precisely the case in point.

The upcoming third High-level Dialogu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New York, 22-23

October 2007) is expected to serve as an important building block for the substantive preparation of the Doha Review Conference.

## Serving as an agent for implement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Leading Group in March 2006, several innovativeprojects have been launched and some have already reached implementation phase. To date, 28 countries have committed themselves to introducing the Air Ticket Solidarity Levy and have agreed to use the proceeds to scale up access to treatments against HIV/AIDS, TB and malaria, through the International Drug Purchase Facility, UNITAID. The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zation, launched by seven countries in November 2006, has successfully priced its bonds on the capital market and is expected tochannel predictable funding flows through the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AVI). Similarly, the Advance Market Commitments pilot programme, launched by five countries and the Gates Foundation in February 2007, combines market-based financing tools with public intervention to provide long-term funding for the development of vaccines.

The United Nations is committed to the active engagement of UN agenc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innovative financing mechanisms, as already demonstrated, for example by UNAIDS, UNICEF and WHO in UNITAID, and by UNICEF, WHO and the World Bank in GAVI.

## Conclusions and the way ahead

While the scale of funds raised through innovative mechanisms has been rather small, their major achievement has been to seek new and additional resources for development, on a more stable and predictable basis. It is important that the momentum of these efforts be maintained and that new initiatives be encouraged,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preparation of the Follow-up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o be held in Doha, Qatar in the second half of 2008. Overall, the key challenge is to keep building consensus around pilot projects and t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area.

In order to mobilize wider support for new funding mechanisms, priority should be given to realistic projects with tangible results.

Such projects may be further prioritized by the volume of financial flows they can leverage and the impact on development they can produce. It is essential that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national implementation of projects be observed.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more actively engage,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designing innovative projects and monitoring the use of resources. As much as possible, the funds collected should be pooled and disbursed through exist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with proven track records in achieving development results.

In concluding, I wish to commend the work of the Leading Group in moving forward the agenda of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I am indeed confident that the Seoul Meeting will contribute to making concrete advances in that regard.

Thank you

# 제 2차 OECD 개발원조 정책대화

## I. 개요

■ 일　시 : 2007년 9월 5일(수) ~6일(목)

■ 장　소 : 소공동 롯데호텔

■ 주요 일정

- 제 1세션 : Lessons form Development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제 2세션 : Capacity Development
- 제 3세션 : Managing Development Cooperation – How to make it more effective
- 제 4세션 : Development Assistance Patnerships

■ 참　석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OECD DAC 비회원국, 중국, 브라질 등 신흥공여국, 세계은행(James Adams 부총재), UNDP, ADB (Jin Quin 부총재) 등 주요 국제기구 및 EC 등 총 40개 국가·기구단 대표

# 제 2차 OECD 개발원조 정책대화
# Issues Paper

## Session 1: Lessons from Development for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Session Objective:** Emerging economies and 'new' donors have become a new force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effort in recent years. This session aims to offer an opportunity for these countries to share with a broad donor community the vision upon which their assistance is based, what is their strategy and how it is put into operation.

### Background

This paper identifies significant development factors that have been detected in emerging donor economies. While not all of the factors may apply to all, these factors have played critical roles in many emerging donors. Moreover, they have steered the direction of emerging donors' own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ces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These factors, therefore, need to be contemplated appropriately in our discussion on development co-operation.

### The Fundamental Concept for Development

When discussing the topic of ownership, one promptly envisages the ownership of government. Nevertheless, the development experience of many emerging donors suggests that a country requires the ownership of three pillars to pursue an effective development process. First, the

ownership of policymakers with strong political will can produce sound development policies. In emerging economies, ownership by the government has been manifested as a strong leadership and political will which acted as the fundamental driving forc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Second, the ownership of the public can generate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and also acutely assess them as a watchdog. Third, the ownership of corporations wit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ill result in sound business environment where development policies can be adequately implemented. Thus, only when this triangular ownership is fulfilled and well permeated into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arts of a country, can holistic ownership maneuver development, with the following elements, in the most effective way.

## Political Elements of Development

Policies of different sectors of a government need to share common objectives, thereby maximizing the potential of the policies. Therefore, the country should be equipped with a sound institutional framework where the institutions comprehend and adhere to the central policy and development goals. Furthermore, the existence of a well functioning network, where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constantly interact with each other to ensure vertical implementation of the development policy, has enabled many emerging donors to utilize the country's budget as well as foreign aid more efficiently. The counterpart to this domestic side is a conscious and strategic approach at the international level: Emerging economies were and are still vigilant to create a national image as a global player by joining and gradually increasing their voice and influenc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gimes; hence, pursuing a global strategy. Furthermore, reflecting on their past experiences, emerging donors are promoting their view of partner countries on an equal footing when discussing development co-operation. Together with well devised and implemented domestic policies, these steps towards global strategy taken by emerging donors have boosted their national ownership, even further contributing to their economic development.

## Economic Elements of Development

Trade, aid and investments have been some of the most widely recognized vehicles for accelerating a country's growth and integration into the global economy. Policies of trade, investment and aid were devised to converge so as to accomplish developmental goals. Each emerging donor is exemplary in having taken the initiative to form an eclectic policy mix in their best interests. These countries have formed sound strategic policies with their own vision and shaped their developmental strategies. Instead of blindly emulating others, developing countries can assess and filter the components which constitute the success of the emerging donors. Trade liberalization has been a prominent determinant of a country's development and how emerging donors made decisions in this regard can provide useful knowledge. But trade liberalization in itself does not possess inherent elements which guarantee success. How emerging donors have tailored and deployed trade liberalization to facilitate progress towards development analysis in their respective contexts holds powerful lessons and experience that can be drawn upon and shared through their development co-opera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s another resource which, when strategically used, allows developing countries to integrate into the world economy and provide an efficient medium for achieving their goals. Although the effects of FDI on development are not unequivocal, some emerging donors have discovered and used the mutually benign nexus between trade and investment where FDI can stimulate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distribute domestic resources efficiently. The complicated aid architecture makes aid and its direct impact elusive. An investigation on the causal link between aid input and outcome can provide a simplified yet practical assessment of the impact. Furthermore, it can be useful in understanding how the emerging economies' perception as aid recipients has influenced the country's aid policy. Developing countries should drive, not be driven by, the process to reap potential gains of aid.

## Social Elements of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ntinuously emphasized the global consensus that social development should not be overshadowed by economic development. Following this trend, emerging donors have

striven to enhance the development atmosphere by incorporating and promoting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the development process. This mentality of involving the public has been translated into measures towards education system reform, illiteracy elimination, poverty eradication and sound labor market which brought positive impact on the overall development process. However, many social challenges still remain problematic in several countries. Persistent efforts to decrease the negative influence of those challenges are essential as only the public can provide the second pillar of the triangular ownership and become a contributor to the country's development.

## Towards Successful Development

As we have observed in many of emerging donors, accurate assessment of the national situation will lay a path to success in development. Furthermore, through critical analysis and assessment of both donors' and partner countries' situations, they need to identify mutual goals to create a win-win situation in development cooperation. As more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has entered a new stage with more players and new issues. For all international players, their capacity to adapt in this new environment will determine who will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tinue to be an active global player and who will not. Together with lessons from development of DAC members, lessons from development of emerging donors need to be explored to produce knowledge for all participan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future emerging donors.

## Issues for Discussion

As the scope, impact and capacities of these countries' assistance continue to increase, little is still known about the ideas and concepts of development that shape their thinking and approach to co-operation – on questions such as ownership, capacity development, or management for development results. Sharing this "practical vis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ll allow others to understand better and appreciate their efforts. At the same time, it enhances potential impact by fulfilling the basic condition for mutual learning, revealing synergies and complementarities with other development actors.

- How does an emerging donor's own

experience of development affect its development policies?

- How is this development vision reflected in the implementation and delivery of assistance?
- What has been the experience of its application in practice?
- What can other donors learn, and how can they adapt these approaches to their own programmes and practices?

## Session 2: Capacity Development

**Session objective:** Emerging and transition economies can draw on a wealth of experience on how strategic approaches to capacity building have been a factor in their recent development. By sharing key findings, and by bringing to bear their perspectives and experience, this session aims to produce new insights on the role development co-operation can play in capacity development, including through joining-up of donor contributions, building on comparative advantages.

### Background

Without capacity, any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ter alia through development assistance, would lack a sustainable basis, be weak and likely to be reversed. Thus, capacity is at the core of what development co-operation aims to achieve and the key to development success. There is a growing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in order to accelerate economic growth and reduce poverty, a country needs capacity to: a) plan and manage organisational changes and service improvements, and b) handle critical policy and management aspects of, for exampl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or trade negotiations. Country ownership is a key principle underpinning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Yet country ownership of policies and programmes assumes the capacity to exercise it. Hence, achieving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depends on countries having sufficient capacity to manage, and donors have a responsibility for, and an interest in, contributing to developing this capacity.

### Capacity development versus technical co-operation (TC)

How capacity is best developed is subject to

continuous debate and study in the DAC. Traditionally, the terms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city development" have been used interchangeably in development co-operation[1] (e.g. in the Paris Declaration indicators) which led to a blurring of two quite distinct concepts:

- Technical co-operation is 'the provision of know-how in the form of personnel, training, research and associated costs' (DAC definition). Examples are study assistance through scholarships and traineeships; the supply of personnel, such as experts, teachers and volunteers; research on the problems of developing countries. These categories overlap, however, and the boundaries are sometimes vague.[2]

- Capacity development is defined by the DAC as 'the process whereby people, organisations and society as a whole manage their affairs'. It is about retaining, unleashing, strengthening, adapting and maintaining capacity over time. Moreover, capacity is not just a concern of the public sector. The processes and institutions for voice,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also imply a capable civil society.

Fundamentally, technical co-operation is an input, whereas capacity developed is an outcome. In the past, donors have broadly assumed that they promote capacity development, but reality has proved much more complex. Technical co-operation in itself is not a sufficient input to achieve capacity; sometimes it merely fills gaps temporarily, e.g. experts substituting in a recipients' civil or social service. Capacity is developed as a consequence of efforts in various areas, e.g. in national education systems, and the support of various actors, such as the private sector.

## Some lessons learnt - the example of international consultants and experts

About a quarter of DAC donors' ODA – about $20 billion per year – is spent on technical

1) DAC data on TC spending provide the best available measure of donor inputs aimed at capacity development. Indeed, the 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takes TC as a proxy for measuring progress towards more co-ordinated support for capacity development. This is logical as DAC statistics only specifically record TC aimed at capacity development, known as "free standing" TC. "Investment related" TC, the supply of skills to support a physical project, is subsumed under project aid. DAC members' internal definitions of TC may vary from this coverage, although they make efforts to adhere to this definition in their DAC reporting.

2) E.g. Technical help is often an important component of infrastructure projects, which are not classified as TC in DAC statistics.

co-operation. Much of this goes to foreign consultants, experts, and advisers. Over time,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s have come under repeated criticism for being too costly, inappropriate to recipients' needs, or fostering dependence.

As foreign personnel often operate in multiple roles – 'getting the job done', advising, mentoring or supporting capacity development in other ways – it is difficult to assess their actual impact. Research shows that there are very strong incentives for consultants to concentrate on short term results (e.g. meeting revenue targets for a tax service) rather than working to build capacity (e.g. training local tax officials) where the impact may only be measured after a period of years.

There is little data based analysis of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deployment of personnel as an aid instrument. However, four decades of experience point to the inadequacy of ad hoc, piece-meal approaches to capacity development in which donors' short-term project goals displace longer-term incremental changes, and where imported, fragmented, and often costly assistance drives out endogenous capacity development. The way in which consultants and other experts have been managed by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s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ownership and, in turn, on capacity development. Experts are often provided off-budget; not procured or recruited by Government; and there is also often a lack of transparency over costs, fees and associated benefits.

Donors have treated capacity development mainly as a challenge of the transfer of technical skills and expertise from North to South, while insufficient attention has been paid to context, politics and governance. The provision of experts has often been supply-driven. International consultants are often offered when south-south cooperation, local consultants or the use of expatriate nationals offer better solutions for partner countries.

## Southern donors, provision of expertise, and capacity development

There is a long tradition of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emerging economies has equipped them with both resources and expertise. They are now becoming active

donors with significant technical assistance operations and forming important south-south partnerships.

The experience of institutional reforms in emerging and transition economies adds a new dynamic to the market for technical expertise and capacity development in the poorest countries. The track record of middle income countries may be more relevant and may be perceived to be more legitimate (and politically acceptable) than the OECD countries' experience. These countries will be important suppliers of appropriately qualified personnel.

Recipients confirm that there are still many areas in which technical expertise cannot be found in the South, however, and that given the choice, recipients would tend to choose a Northern expert over one from the South, as this might trigger additional donor support/resources from the expert's country. A conscious effort towards greater complementarities between Southern and Northern co-operation would allow making more effective use of the respective comparative advantages.

At the same time, the experience – both good and bad – that DAC donors have accumulated in this important area of development co-operation offers lessons that are clearly relevant also for non-DAC donors.

## Towards more strategic support for capacity development…

Simply put, donors need to take a deliberate strategic approach to supporting capacity development in partner countries. Many of the issues and approaches are set out in the DAC's paper The Challenge of Capacity Development: Working towards Good Practice.

This paper starts with recognising that capacity development is necessarily an endogenous process and that strong local engagement is key. Moreover, it is not sufficient to support capacity development at the level of individuals, if there is no organisational framework or enabling environment. When designing support programmes for capacity development, donors need to consider three interrelated levels: individual, organisational and enabling environment.

Donors should use country-led, demand-

driven strategies for capacity development as they emerge – local context needs to be the starting point, and retaining and unleashing existing capacities is a priority. Finally, capacity development is a long-term proces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support of it needs to adopt and act within long time frames.

### … and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co-operation per se is neither good nor bad-it is a tool, the value of which depends on how it is used.

To bring technical co-operation under more direct control of the recipient and thus to make it more responsive to recipients' real needs, donors need to be clear how they focus on ownership and avoid supply-driven technical co-operation. This implies a challenge, as partner countries need to articulate capacity needs at a strategic level providing a clear framework with which technical co-operation inputs can align and harmonise.

Linked to this is the question of how to make technical co-operation more market-based and how to pool donor funding for experts to ensure greater coherence and co-ordination.[3)]

Finally, the provision of external experts to 'get the job done' can help deliver critical government services but needs to be balanced with longer term objectives for capacity strengthening.

### Issues for discussion

- "Capacity for what?"? How do donors assess this question in a given country context, and how do they focus on the specific capacities needed to accomplish clearly defined goals?
- What is the scope, and what are mechanisms for donors to support the endogenous process of capacity development?

- How can the experience of emerging and transition countries be applied to foster effective capacity development? How can this experience be brought to bear in the

contex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 capacity development programmes?

- What is the experience of emerging and transition countries with technical co-operation as a tool for capacity development? What about other co-operation tools or modalities? How is this reflected in their co-operation?

## Session 3: Managing Development Co-operation ? How to make it more effective?

Session objective: This session will focus on how donors can best organise and provide their assistance in order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processes led by the partner country. All stakeholders endorse major principles such as ownership, alignment and sustainability of results, but the approaches they choose to pursue them differ. The aim is to create an understanding of the approaches taken, the challenges or advantages they may imply, and to make better collective use of the experience and lessons learnt by all sides.

### A basic understanding

The yardstick for effective aid management lies fundamentally in whether the assistance provided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wo key implications follow from this. Firstly, partner countries need to assume responsibility and leadership for achieving development results and take ownership of the development processes that external assistance aims to foster and support. Secondly, donors play a key role through the way they manage their assistance and engage with partner countries.

### Key lessons from the past

In the past, donors got used to managing co-operation by relying on their own implementation systems and channeling aid to where they felt it was most needed. Recipient countries had to follow the procedures defined by the donors. By-passing recipient countries. "weak national systems allowed donors to ensure control over their assistance while conforming to their own administrative standards. This flawed

3) See, for example, H. Baser and P. Morgan (2001), " The Pooling of Technical Assistance: An Overview Based on Field Experience in Six African Countries", 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ECDPM) Synthesis Paper, ECDPM, Maastricht.

approach had a major unintended effect: Today, more than 50 000 aid projects are underway, many which are "stand-alone," uncoordinated, and with different funding and reporting arrangements. This significantly strains partner countries". administrative capacities and seriously undermines the development of endogenous capacities of country systems. By delivering development externally, donors". parallel implementation structures and processes have substituted the very capacities donors are aiming to help develop.

### Working from the partners' perspective …

Experience has clearly shown that ownership by partner countries is a fundamental condition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True ownership is only possible when donors align their contributions with local priorities. Beyond alignment with policy priorities, donors have to recognise the need to adjust the management and delivery of assistance to the respective partner country. Effective aid management means working with partner countries in a way that allows them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ir systems and make use of assistance resour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ir development policies and services.

### … and in a joined-up fashion with other development partners

Adjustment to partner countries goes beyond bilateral relations between donors and recipients. Donors and partner countries need to be joined up to achieve desired development results. Partner countries need to take the driver" seat in leading and coordinating different actors to achieve the best possible development impact. The donor community needs to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by fostering partner country leadership, agreeing on common and simplified procedures, information sharing, and an effective division of labour. Commitment by donors to consultative processes and better coordination and harmonisation are called for.

### Towards results

Donors have tended to focus on what they could control and account for – such as the volume of aid and the number of projects – resulting in the dispersion of aid and curtailing partner country leadership. The

real objective of achieving development results was often lost. Results-based approaches to development have gained wider recognition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provide a global reference which partner countries can use to identify results objectives, typically in thei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Partner countries and donors need to gear all action towards achieving results, from goal setting and resource allocation to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 The Paris Declaration as a management tool / roadmap for enhanced aid effectiveness

Based on the five mutually-reinforcing principles of ownership, alignment, harmonisation, managing for results and mutual accountability,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is essentially a management guide for donors and partner countries. Whilst not prescribing a uniform approach, the Paris principles enshrine the 56 commitments for action, reform and behaviour change in how aid is managed by donors and partner countries. Successful examples of how the Paris agenda is applied in Cambodia, Viet Nam, Tanzania and Zambia, built on strong country leadership, serve as a model and inspiration.

## Some challenges

It is encouraging to see that many non-DAC donors have signed up to the Paris Declaration. However, few have been involved in its preparation. Nonetheless, less familiarity with the aid effectiveness agenda should not belie the fact that it is ambitious for all.

Still, in some respects, it may imply greater challenges for non-DAC donors. A first issue relates to the choice of aid modalities. The assistance programmes of many non-DAC donors are still based largely on free-standing projects. Partly, this is conditioned by the fact that bilateral programmes have only recently been scaled up, and are still based on models of smaller interventions. High fixed costs of creating and sustaining effective aid delivery mechanisms need to remain proportional with the amount of assistance delivered. The opportunity cost of engaging actively in local co-ordination processes will have to be weighed against the

benefits this brings in terms of enhanced co-ordination and alignment.

Options to respond to these challenges include stronger decentralisation of decision making to the field. It is assumed that stronger field presence helps in implementing the aid effectiveness agenda, and increasing concentration and focus of donors on fewer partner countries. Moreover, as ODA volumes of many non-DAC donors increase substantially, the benefits of programme-based approaches may become more compelling.

Among the biggest challenges is the question of control versus relying on country systems. The risk that aid may be misused is a key concern for donors. Administrative constraints regarding the use of partner country systems tend to be stronger for non-DAC donors. Bypassing partner country systems undermines the very effort to build their capacity, creating a vicious circle that perpetuates recipients lack of ownership and accountability.

A key issue in approaching this complex situation is not to confuse control with accountability. Partner country ownership implies a progressive loosening of donor control, not of accountability. Ownership is not a blank cheque, and the Paris Declaration explicitly intended to strengthen capacity and accountability of partners and donors alike. Managing for results, systematic monitoring and evaluation are key tools to safeguard the process.

Visibility, or 'showing the flag' is important to all donors to get credit for their efforts and helps sustain domestic public and political support. A more joined-up and collective effort of donors with partner countries may make tracing individual contributions practically impossible. One way to overcome this is not to showcase individual outputs, but to focus on results. All donors should be able to lay claim to having contributed to the overall development progress they collectively support - and to the effectiveness of this contribution on the basis of a clear, results-based and accountable process.

## What comes next?

The Government of Ghana will host the thi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on 2-4 September 2008 in Accra. A second round of

monitoring of the Paris Declaration will start in January 2008; the first monitoring survey in 2006 covered 34 partner countries. Since the Paris High Level Forum in 2005, the aid effectiveness agenda gained substantial international momentum. Appropriate reflection of the views, perspectives, and experience of donors outside the DAC is considered a priority by all stakeholders, and their active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to the High Level Forum in Accra will be sought. The DAC-hosted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mandated to advance the aid effectiveness agenda, is planning to invite non-DAC donors to a dedicated consultation on 27 November 2007.

### Issues for discussion

- How can donors strengthen partner country ownership, and what lessons have emerging economies drawn from their own experience? What are the best options in countries where capacity to exert ownership is weak?

- What has been the experience with harmonising donor procedures and practices and with division of labour? What is the perspective of non-DAC donors on harmonisation?

- How are donors organising themselves for results-based management at the field level? What are critical factors on the side of partner countries? What can donors do to help overcome constraints?

- How do emerging economies see the Paris Declaration, both as recipients and in relation to the assistance they provide? What are the main challenges or problems for them, and why?

- What are options for donors outside the DAC to apply the aid effectiveness principles given current limitations regarding their choice of aid modalities and instruments?

- What are the best ways for donors outside the DAC to actively join the international work on the aid effectiveness agenda?

## Session 4: Development Assistance Partnerships

**Session Objective:** This session aims, in

the light of a changing aid environment, at fuelling the partnership between all DAC and non-DAC development partners in support of country development strategies. Avenues for increased cooperation will be explored, building on experience from actual partnerships at the country level and drawing on partners' comparative advantages. The session will identify: practical options and opportunities for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partnerships among all donors at country level; suitable mechanisms to facilitate this; and a specific perspective on how to take forward this dialogue.

The growth in the number of official donors, especially in response to humanitarian crises[4] and in technical assistance, presen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significant opportunities. The engagement of a wider range of donors also presents significant challenges to the way in which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is financed, managed and coordinated. Important donors, such as China, India, Brazil, South Africa, Russia, Saudi Arabia and other countries such as Turkey, new EU member states, South Korea, Thailand and Malaysia, that are not members of the DAC, are significant providers of aid and technic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The global commitments made at the Monterrey Consensu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2002) and the 2005 World Summit have given new impetus to effort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id for development consistent with the achievement of the internationally-agreed development targets, includ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Complementing the scaling-up process,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 emphasised the need for critical changes to the ways aid is currently delivered and managed. Both Monterrey and Paris have s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are espoused also by developing countries themselves, especially the G-77 and the non-aligned movement.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and promote dialogue to find effective ways to support it, a new mechanism was launched in Geneva in July 2007, the Development

4) 92 countries responded with pledges of support to the tsunami crisis.

Cooperation Forum (DCF), a biennial high-level event bringing together all relevant actors to discuss issues relating to effectiveness and coherence.[5)]

This new political and global partnership has yet to deliver o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aid demanding a more rigorous review of the existing development assistance environment, across geographical and economic typologies, to enhance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outcomes. While recognising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players and resource flows, the objective is to create a more level playing field, built on partnership and focused on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hould imply the development of a dialogue and a culture of transparency in policy and practice between all partners to sustain and deepen development impact.

In order to achieve the internationally-agreed development objectives, it will be crucial to strengthen dialogue and cooperation among the enlarged donor community. The decisive question in the end is whether the collective inputs result in development outcomes – this is what all recipient countries and donors will be judged on. While partner countries have to be at the centre of the partnership for development, donors need to organise themselves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so as to ensure their effective operation in country based approaches.

Aid harmonisation is already a complicated matter and results are not yet satisfactory. The hope associated with all donors, and members of the UN, is that their participation in harmonisation and alignment efforts will lead to "renewed, more realistic and efficient ODA policies and aid practices".[6)]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non-DAC donors and their practitioners in international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efforts will be advantageous for achieving development aid objectives and ensuring future donor coordination at country level and leveraging initiatives for South-South cooperation and scaling up on the basis of results achieved.

South-South cooperation as well as East-

5) Participants included representatives from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bilateral development agencies, UN system organizations, World Bank, IMF, OECD, regional development banks as well as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6) Issue Note, Jean-Luc Maurer, http://www.inwent.org/ef/events/governance/08265/index.en.shtml.

East cooperation and triangular cooperation have become a major tool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plementing the efforts of DAC donors. Triangular cooperation entailing collaboration between "Southern" countries supported by a "Northern" partner or partners has become both important and increasingly diversified.[7] The accumulated experience holds ample lessons on the design and situations in which triangular cooperation yields the best results. A systematic stocktaking should offer valuable insights for the benefit both for development partners who have used triangular cooperation, and those who are considering whether and how they may pursue this.

There is often a preference for bilateral aid over multilateral routes, particularly government-to-government, as well as through national operational agencies. This preference for bilateral routes reflects a view that aid is part of a deeper, mutually-beneficial partnership. It also stems from a desire for visibility, and for aid to be delivered in a timely manner. Non-DAC donors have in many cases not seen multilateral contributions as offering these advantages.

Experience has shown that development assistance can only be effective when managed and implemented in a way that focuses on the desired results and provides for sufficient feedback loops and accountability – to the intended beneficiaries as well as the implementers. At country level this can be achieved by ensuring participation of all donors in partner country coordination mechanisms, such as Joint Assistance Strategies (JAS), Consultative Groups/-Roundtables (CGs/RTs) and results and resource meetings and in ensuring transparency of data on aid flows and their allocation through partner country aid management systems (AMS).

Finally, recipient partner countries have to be at the centre of the partnership for development. Donors need to organise themselves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so as to ensure their effective operation in country based approaches. Partnerships among donors can help with this by such means as a) facilitating a better mutual understanding of

7) For example, many Southern countries are associated with Japan in sponsoring third country training programmes. There are similar programmes involving Australia and South Pacific countries. CIDA also pursues triangular cooperation for technical exchanges.

the challeng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ow to address them; b) consciously exploiting different comparative advantages, and pooling resources in joint approaches; and c) using existing experience to build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capacity to deliver assistance effectively. In order to achieve this it will be essential for donors to work together to achieve a shared vision on how their collective efforts can best contribute to poverty reduction. Opportunities for this exist e.g. in the form of joint analytical work by donors; arrangements for institutional exchange and joint training; or in the form of co-operation in the field, including through triangular co-operation.

## Issues for discussion

- How can all donors enhance their cooperation at country level to meet the commitments made both in Paris and more broadly in Monterrey? Is donor collective input, based on donor comparative advantages and a rational division of roles, resulting in the desired development outcomes?
- How can donors, DAC and non-DAC, work together at the country level to enhance national ownership and national capacity to manage aid? Can they profit from joint analytical work?
- What are our collective incentives to ensure policy coherence and complementarity in the provision and use of development assistance at country level, e.g. through a mix of aid modalities? How can we strengthen the incentives for staff within every donor agency at country as well as HQ level to ensure that endorsement of the Paris Declaration is reflected in carrying out dialogue, in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co-operation programmes and projects?
- What are good formats to further pursue and build this dialogue (global/regional/sub-regional)? What are effective mechanisms for engaging and staying connected between dialogue meetings and in their preparation?

# ODA 국제 워크숍

## Ⅰ. 개요 및 일정

■ 일 시 : 2007년 9월 6일(목) 14:30 ~ 18:15

■ 장 소 : 소공동 롯데호텔

■ 주요 일정

- 제 1세션 : What's happening in OECD DAC Member Countries
- 제 2세션 : Case Studies of Korea and Japan
- 제 3세션 : Civil Society's Role

■ 참 석 : 국내외 ODA 전문가 및 학계 인사등 약 150여명

## Ⅱ. 논의 내용

■ OECD DAC 회원국 국민들의 개발원조에 대한 여론과 MDGs에 대한 이해도 현황

■ 한국과 일본국민들의 개발원조에 대한 지지확보방안 및 시민단체의 역할 논의

■ 영국정부의 우수사례, 교훈과 문제점 : 개발에 대한 논의와 개발교육을 제고함에 있어서 시민단체를 영입한 사례

# ODA 국제 워크숍

## 발표자료 : Strategies on Raising Public Awareness in South Korea: How to build public and political support for development assistance

by **Dr. Hyun-sik Chang**
Managing Director of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This paper shall be presented during the second session entitled "Case studies of Korea and Japan: communication and public awareness" at the Workshop on Public Awareness and Support for ODA to be held on 5-6 September, 2007,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 Ⅰ. Introduction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1990. In 2005, Korea's ODA volume reached approximately $752 million, which accounted for 0.1% of Gross National Income (GNI). This was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Korea's ODA that the ODA volume reached 0.1% of GNI. As an emerging donor that has experienced acute poverty, Korea is endeavoring to more actively addr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realiz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form Strategy" and tried to strategize how to increase the volume of ODA effectively at the government level. Notably, the Korean government expressed a strong commitment to increase ODA to 0.1% of GNI by 2009 and 0.25% by 2015 respectively.

Moreover, on March 2005, President Rho announced "Korea's Initiative for African Development", during his visit to Nigeria, including a pledge to triple Korea's ODA to

Africa by 2008. As a way to further finance expanding ODA commitments,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promote innovative financing for poverty reduction by initiating an Air Ticket Levy Fund, which will charge ₩1,000 ($1.00) for every air ticket issued.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IDCC) to improve effectiveness in development assistance and coordinate major ODA policies at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Last but not least, we have expressed our sincere desire to joi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by 2010.

While there is an increasing level of interest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most people find it challenging to arrive at a refined opinion about the development efforts of their government. Furthermore, studies indicate that where development issues are concerned, public opinion can influence government decision making, but the degree of this influence has not been clearly discovered.

Accordingly, more efforts and better collaboration in development information disclosure and development education should be delivered.[1] Providing development co-operation is regarded as a hidden function of government and may be seen by the general public as only charity-helping other developing countries. From this standpoint, development co-operation is precariously caught between public opinion and the political system.[2]

With regard to Korea, recent surveys confirm the belief that improving the standard of living in developing countries should be an important policy goal. In addition, despite of short history of ODA in Korea, Korea's public awareness and political support building is well-shaped by strategic planning and highlighted international events recently in a partnership with civil society.

The following sections will illustrate the Korean case concerning public awareness and

1) Public Attitud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an Smille and Henny Helmich, OECD and Council of Europe, 1998

2) A comparison of Management System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OECD/DAC members, Hyun-sik Chang, Arthur M. Fell et Michael Laird avec l'assistance de Julie Seif, OECD DCD(99)6, 1999

development education and demonstrate how this emerging donor has developed a communication and awareness raising strategy to build public support for development assistance. The second section will introduce the concept and significance of public awareness and development education. The third section will provide the current state of public opinion and suppor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in Korea. Meanwhile, to facilitat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ase, the fourth section will explore Korea's strategies to raise the public awareness, support for development assistance in Korea and w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done to reach out the Korean public. Lastly, the fifth section will present further recommendations being discussed.

## Ⅱ. The Public and ODA

A study shows support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wareness do indeed correlate. Those convinced of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co-operation display a strong or very strong interes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issues and show a good or very good knowledge of problems occurring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feel that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is important or very important.[3)]

Furthermore,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etter awareness and higher expenditure on global education and information activities: in general higher spenders have higher ODA/GNI ratios, and show signs of slightly better awareness. Likewise, opinion poll results suggest that, starting from a very low base, any additional information does make a substantial difference in people's assessment of the issues.[4)]

The Korean government perceives that public awareness and political support is crucial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because (1) public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and political support for public policies regarding development assistance are

3) Public Opinion Research, Global Educ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Reform: In search of a virtuous circle, Ida McDonnell, Henri-Bernard Solignac Lecomte, and Liam Wegimont, OECD, 2003

4) Public Opinion Research, Global Educ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Reform: In search of a virtuous circle, Ida McDonnell, Henri-Bernard Solignac Lecomte, and Liam Wegimont, OECD, 2003

desirable[5] per se in Korea (2) information on development issues and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can improve both the legitimacy and efficiency of public policie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6] and (3) Korea will be able to mobilize new resources and effectively pursue more consistent policies for global poverty reduc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by convincing the Korean public.

## The public as a stake holder[7] and public accountability[8] in development

The general public is perceived as both "clients" and "shareholder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clients, the public is better off with actions which fight environmental,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problems that may ultimately respect no borders. At the same time, they are shareholders in the sense that it is their taxes which fund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s.

As both clients and shareholders, the general public is accountable for sensing and being interested in public policies and government activities concerning development assistance. Building effective systems and processes for public accountability is a long-term undertaking, requiring political commitment, leadership, and domestic political consensus. Public accountability in development is attributed to civil society - mostly NGOs and academia, the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Government, which is elected by the public, is especially responsible for its development assistance policies and implementations.

Educating the public with regard to development co-operation may require more effort than education regarding other government functions because it is harder for the public to stay abreast and appreciate the range of issues involved. In order to rectify this, the Korean government shares the responsibility not only for making efforts to inform the Korean public about its development assistance and how it is

5) Mobilizing Public Opinion against Global Poverty, Jude Fransmand and Henri-Bernard Solignac Lecomte, OECD, 2004

6) Mobilizing Public Opinion against Global Poverty, Jude Fransmand and Henri-Bernard Solignac Lecomte, OECD, 2004

7) A comparison of Management System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OECD/DAC members, Hyun-sik Chang, Arthur M. Fell et Michael Laird avec l'assistance de Julie Seif, OECD DCD(99)6, 1999

8) Innovative Approaches to Public Accountability, Asian Development Bank, Geert H.P.B. van der Linden, 2006

managed, but also encouraging the public to become more proactive with regard to development assistance issues.

## Rights to inform

A study defines right to inform as (1) the right of citizens to request access to information from public bodies, (2)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provide its citizens with the requested information, unless defined exemptions apply, and (3)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actively disclose information that is of general public interest without the need of citizens to request it.[9)]

Korea is endeavoring to inform its citizens by releasing information and data about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news, annual reports, conferences, statements, statistics, information on major recipients, and relevant policies through the media and internet. To step forward,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look for what would be of general public interest and to provide the information constantly and consistently.

## Monitoring public opinion

Keeping abreast of public opinion is a function mos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do in fact. While other sections of government do this too, for aid managers it is a particularly important activity. Some OECD/DAC member countries carry out regular public opinion polls regarding development assistance. Other donors conduct surveys less frequently but which tend to be large, enabling an in-depth investigation of people's knowledge and motivations for the answers they give.[10)]

The Korean government carried out public opinion surveys about development assistance which provide an indication of fluctuations in the level of public support over time-the semi-regular public surveys in 1999, 2003, and 2005. Besides, the Korean Government is attempting better and more comparable data in order to gain a consistent data and a deeper insight into public attitude towards development assistance and to monitor its trends.

9) Promoting public accountability in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harnessing the right to information, Charmaine Rodrigues, Commonwealth Human Rights Initiative, 2006

10) A comparison of Management System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OECD/DAC members, Hyun-sik Chang, Arthur M. Fell et Michael Laird avec l' assistance de Julie Seif, OECD DCD(99)6, 1999

## Development education

Development education has a crucial role to play in enlarging public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issues. It seeks to challenge attitudes which perpetuate poverty and injustice and, through education, to empower people to act to bring about better development. An effective development education system stimulates greater public interest in these issues and contributes to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causes of poverty and underdevelopment. A spin-off from this process could be greater public awareness of, and support for, official aid programs.[11]

Many development agencies find it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and educate the public beyond annual reports and official statements.[12] There is limited officially-led public discussion about ODA levels, and in most countries NGOs tend to be more effective than governments at promoting awareness of development issues. National expenditures on development education and information remain extremely low. As a result, the official anti-poverty consensus has not effectively trickled down toward national public debates.[13]

Development education has a relatively short history in Korea, beginning in the late 1980s with voluntary sector and civil society involvement. A higher level of public awareness regarding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ssues in Korea began in the 1990s. Today, in Korea, a wide range of organizations and groups within the voluntary and the education sectors educate the public in development formally and non-formally. The Korean government strives to strategize how to educate the public about development issues and how to implement it. As a matter of fact, allocating more secure and adequate resources to development education has been getting serious attentions lately, evidenced by the fact that raising public awareness through education was the main topic of the IDCC's first meeting.

11) Report of the Ireland Aid Review Committee - A review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of Ireland, Development Cooperation Ireland, 2002
12) Mobilizing Public Opinion against Global Poverty, Jude Fransmand and Henri-Bernard Solignac Lecomte, OECD, 2004
13) Mobilizing Public Opinion against Global Poverty, Jude Fransmand and Henri-Bernard Solignac Lecomte, OECD, 2004

## Ⅲ. Public Awareness on and Support for Development Assistance in Korea

As stated above, the surveys on public support and awareness on development assistance were conducted in 1999, 2003, and 2005.[14] This section will attempt to synthesize the data collected from the abovementioned three surveys. However, questions were posed in different ways and multiple terms regar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ere used across the surveys. For example, awar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foreign aid was asked in 1999 survey, grand aid in 2003, and ODA in 2005 respectively. Although those concepts are more or less analogous, the public perceived somewhat differently. Hence, in this section, the questions asked will be demonstrated with separate descriptions.

### Recent trends in public awareness

Respecting awareness on development assistance, 80% of the public were aware of foreign aid but 50.3% of them heard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1999. More than 80% of the respondents assessed development assistance to Korea from developed countries in the past was positively helpful for Korea's economic growth. At the same time, 79.9%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ey were informed that their government had been assisting developing countries.

On the contrary, in the 2003 survey, 42.5% of respondents said they were aware of grant aid. In the 2005 survey, 37.1% of respondents were aware of ODA and another 39.3% responded that they heard of ODA but didn't know what it was exactly. The percentage of public awareness varies in each survey mainly because the three surveys used different terms – foreign aid, development co-operation, grant aid, and ODA.

While only 16.8% of the public were aware of ODA in 1999, that percentage increased to 37.1% in 2005 (76.4% if total number of people who knew and heard of ODA is included). This demonstrates that public awareness of ODA increased 2.2 times between 1999 and 2005. Nevertheless, the

14) The 1999 survey was asked to 1,000 individuals via face-to-face interview, the 2003 survey 1,551 individuals via phone interview, and the 2005 survey 1,000 individuals via phone interview respectively.

Korean public is not well informed about more details and sophisticated matters regarding development assistance.

## Recent trends in public support

Current trends as addressed by the recent three surveys confirm that the Korean public understands the importance and moral oblig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and the necessity of foreign aid. In the 1999 survey, 93.1% of respondents agreed that developed countries should contribute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lso,92.9% of respondents shared the idea that Korea needs to co-operate not only with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with developing countries. More importantly, 96.1% of respondents indicated positive opinion concerning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co-operation.

Six years later, in the 2005 survey, 62.3% of individuals were in favor of development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and 34.2% of individuals were in opposition to development assistance. Among the respondents who support development assistance, the three major reasons were (1) development assistance contributes to a better world overall (28.9%) (2) Korea also in the past received assista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which contributed to Korea's economic growth (27.7%) (3) development assistance uplifts Korea's national brand and image (23.6%).

On the other hand, within the small segment of respondents who do not support development assistance, the main argument put forward was "we are not wealthy enough to assist other countries'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76.1%), followed by suspicion that development assistance doesn't work for the national interests and that aid does not lead to poverty reduction or go to the neediest.

## Public opinion on Korea's ODA volume

Regarding Korea's level of ODA, 47% of those surveyed in 1999 responded "just right". 30.6% responded "low", and 22.3% responded "high". During the same year, 34.6% of the Korean public was willing to pay additional tax for development assistance, and 65.3% were not. To the similar question asked in 2003, 33.8% of the Korean population was willing to pay additional tax to increase ODA,

and 58% were against it. Also, 52.6% of those surveyed responded that Korea's ODA should be decreased or suspended in a national economic crisis.

In 2005, 47.6% of the respondents agreed to expand Korea's ODA volume and 35.8% answered the current ODA level is "just right". In addition, 68.2% of the respondents agreed to expand our ODA volume to 0.1% of GNI within five years. Even though the questions asked in 2005 (expanding ODA) were conducted in a different manner than in 1999 and 2003 (additional tax for ODA),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recent public support for development assistance is more promising.

## Other public opinions regarding development assistance

In response to the question *what do you think are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when we assist developing countries?* the top three responses in 2003 were:

- Humanitarian approach (28%)
- Ensuring our nation's economic and cultural expansion in developing countries (25.9%)
- National image and national brand (22.3%)

To the same question asked in 2005, when multiple choices allowed, the top three responses were:

- Humanitarian approach (49%)
- End of poverty and diseases (47.3%)
- National image and national brand (23.6%)

In response to the question *what do you think are the most important sectors when we assist developing countries?* the top three responses in 1999 were:

- Emergency relief (31.7%)
- Public health (25.6%)
- Education (15%)

To the same question asked in 2005, when multiple choices allowed, the top three responses were:

- Child · human rights · environment protection (26.4%)
- Emergency relief (23.3%)
- Public health (23.1%)

The above comparisons of results show that recent interest in development assistance

stems from humanitarianism and anti-poverty more than national interests. At the same time, it is found that the Korean public put high value on assisting basic human needs in developing countries.

Meanwhile, although responses to the question *what regions do you think have priority when Korea assists developing countries?* were diverse, Asia and Africa remained the most important regions. In 1999, 49.9% selected Africa and 42.6% selected Asia. In 2003, 39% of respondents selected Africa, 36.9% Asia, and 5.3% the Middle East. In 2005, 44.5% of the Korean public answered Africa has the priority while 24.4% chose Asia and 11% selected Central Asia.

Lastly, it is found that there is a contradictory-criticism regarding effectiveness in Korea's ODA. The Korean public perceives Korea's ODA not contributable enough mainly because Korea's ODA is not effective (41.9%), and in part because Korea's ODA pursues its own national interests (18.9%), and contrarily because Korea's ODA doesn't help Korean companies' expanding business to overseas (17.6%).

## Ⅳ. Korea's Strategies and Efforts to Raise the Public Awareness

With rapid changes to Korea's internal and external policy direction and growing public interes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Korean government shared the importance of public awareness and development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have become vital in line with this environment. However, there are challenges the Korean government faced.

The media, predominantly TV followed by print, has been the primary self-identified source of information (95.8%) for its population in Korea.[15] Moreover spotlighting "disaster" and "famine" scenes tends to overshadow other development related issues thus positive reporting and picturing has been encouraged. In addition, more information from the media does 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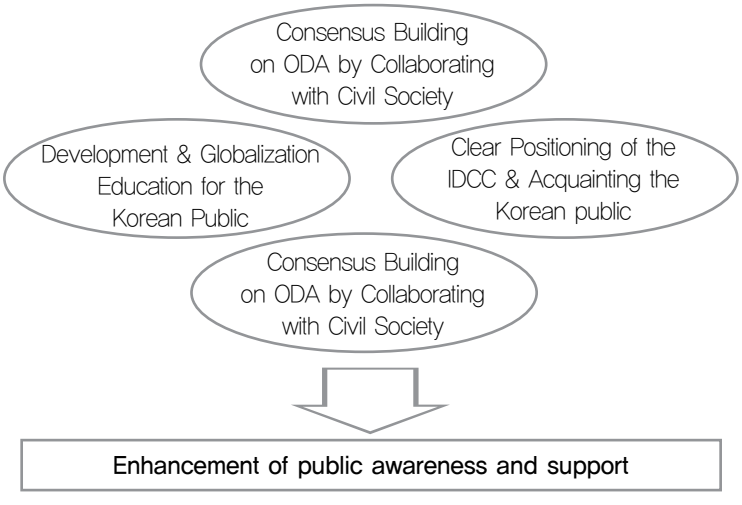
15) Survey: Public awareness on development assistance, 1999

translate directly into better awareness and knowledge.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visualized the necessity of appropriate global education in order to build integral awareness about development issues.

Overcoming these challenges of public awareness-raising mentioned above, the Korean government has strategized how to raise the public awareness and get political support effectively. Three major strategies are (1) Enhance development education and promote the global citizenship by emphasizing responsibility as in the world s 12th largest economy (2) Build a consensus on ODA among the Korean people by collaborating with civil society (3) Position the IDCC clearly and have the public aware of its role actively (4) Shape the participatory environment for development assistance.

This section will describe each strategy and how actively the Korean government and other stakeholders enhanced public awareness of their activities and encouraged the public's participation through public relations initiatives.

[Strategies on public awareness-raising on development co-operation]



### Strategy 1: Educating the Korean public about development and promoting global citizenship

Development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ave very significant roles in raising public awareness. It is important to promote global citizenship concurrently with development education. Even th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may appear in multicultural education, international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forms, in common those educations advance Korea's responsibility to act with awareness of the world as a global community, by recognizing and fulfilling its global obligations and the rights of global citizens.

The Korean government committed to expand its ODA volume and enhance aid efficiency. However, despite of the world's 12th largest economy, Korea has moderate-low level of political support for expanding ODA from its own public. In order to get its own citizens' agreement on development assistance in general,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endeavoring to transform the Korean public's perception of Korea as a developed economy thus Korea's expanded role in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it is crucial that the Korean public regard their nation as a global leader in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at they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cooperating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eventually support for expanding ODA.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shaping the linkage of Korea's ODA and its positive perception in international community ergo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able to help the Korean public change the perception of themselves and their own nation.

The Korean government aims at integrating a development education perspective in relevant education policies, at supporting the delivery of development education in selected areas in the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al sectors, and at promoting more effective use of communications to increase public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issues.

Also, the Korean government finds cross cutting issues are important in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addresses those issues in an appropriate and collaborative manner,

such as capacity building, research, links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development education from a global and justice perspective, and better education resources.

### Strategy 2: Building consensus on the importance of ODA by collaborating with civil society

For the Korean government, building consensus on the importance ODA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mong the Korean public and gaining political support for expanding ODA has priority the most. The government promotes the percep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as technical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community and knowledge-based capital movement not just funding the developing countries.

To build a consensus on the importance of ODA among the Korean public, the Korean government is working closely with education sector and other potential partners to ensure that they can take advantage of the proposed changes and thereby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ir work. Subsequently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able to create and spread the public's supportive attitudes towar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ikewise,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that many of the achievement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education are the result of a partnership approach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ncluding agencies and civil society such as academia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aims of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getting political support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working in partnership with a wide range of organizations, both statutory and non-statutory. The Korean government will seek to build on existing partnerships but will also continue to development new partnerships where appropriate.

For this strategy, the Korean government is particularly trying to differentiate awareness-raising and development education from publicity or fundraising types of awareness-raising activities done so far by most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Korean government is setting the sectoral priorities and the target audience and planning the PR strategies for each sector and target audience.

[Korea's spending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2001-2005]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Amounts (in US$ million) | 0.7 | 0.72 | 1.15 | 1.67 | 2.27 |
| % of Korea's total | 0.26% | 0.26% | 0.31% | 0.4% | 0.3% |

Also the Korean government proactively outreaches opinion leaders in Korea such as students, academia, the media, and foreign companies and entities based in Korea.

Furthermore concerning the funding for development awareness and education, the Korean government is investing more in public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DA at the beginning, and then it will seek effectiveness of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with "more with less" strateg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ing its budget for promoting development awareness since 2001 and expanded to $2.27 million in 2005, which is more than triple of $0.7 million in 2001.

### Strategy 3: Positioning the IDCC clearly and acquainting the Korean public appropriately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IDCC in 2006 to coordinate ODA policies and planning. The IDCC includes all ministries, development agencies,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respected civil leaders with the prime minister as the head of the committee. The committee provides ODA policy recommendations as well as mid- and long-term planning on ODA. The IDCC also incorporates development issues and programs across the related government agencies thus it aims at synergy effect. Using the momentum of foundation of the IDCC, the Korean government is giving an impetus to the development-friendly atmosphere by focusing on promoting ODA recognition.

The IDCC helps to gather all information and inform the Korean public and deals with evaluations and aid effectiveness. The IDCC plans public awareness-raising and development education yearly, surveys on ODA, and evaluates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effect. Additionally, it cooperates

with civil society such as academia and NGOs who work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field by forming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working group in flexible time and issue bases.

### Strategy 4: Shaping the participatory-environment for development assistance in general

Finally, the Korean government also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haping the participatory-environment and is leading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development assistance by introducing open-to-public programs and improving communications with the public. The Korean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outreach the public not only through media but also participatory programs such as Korean Overseas Volunteers (KOV) programs and development assistance related events, including KOV evaluation forum, Partnership with NGO enhancement forum, and others.

Besides, the Korean government is strengthening networks with respected civic local leaders thus they will actually be able to diffuse development related information to the general public effectively. It is encouraged because in that way the Korean government aims at a spread-effect to access local communities effectively with limited resources.

###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done-specific case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ersevering with its efforts to promote public interest in ODA by gaining support from opinion leaders, ensuring the public acknowledged and educated, co-operating with the media, and increasing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Due to the importance of print and broadcast media on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reach out the general public primarily through the media. Development co-operation issues have been covered by the media[16] including TV and newspapers more than 800 times a year and the coverage by the media, especially

16) Inclu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dia

featured stories and articles, has been increasing since 2003. As part of these endeavors, KOICA and the Yonhap News Agency made an agreement that development co-operation issues be covered on a regular basis. Most recently, information regarding volunteers, overseas filed offices, programs, and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featured.

At the same time, attributable to Korea's sophisticated internet culture, the Korean government made a considerable amount of information regarding ODA and development issues available online. In addition, interactive communication tools such as "policy recommendation" board[17]or "consulting" board[18] has been implemented on the websites of many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KOICA,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By ensuring effective use of the internet, the Korean government is reaching out to each demographic especially the young generation and to inform the public in a timely manner.

Additionally, the Korean government has published public relations magazines and brochures categorized by development sector, and it is working on establishing a more detailed and sophisticated online catalogue to consolidate various public relations multimedia materials and information published by a number of development agencies, organizations, and like-minded groups.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s been promoting development education in formal and informal settings. It holds ODA forums and ODA seminars which encourage more committed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field. In addition, Korea successfully updated elementary, middle-, and high-school textbooks so that development issues are taught in formal education systems. Moreover, 15,000 students (more than 200 schools) a year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development education sessions and opportunities are given to students at every level of education

17) The public can suggest policies on ODA and development issues through internet board
18) The public can get consulting on ODA and development issues through internet board

who win development issue writing contests to visit overseas project sites and filed offices.

## Other sources of information (other stakeholders)

Started by NGOs in the early 1970s and subsequently promoted and supported by many governments, development education is not a new phenomenon, although its fortunes and its impact have been somewhat uneven over the years. NGOs and community-based "learner centers" dedicated exclusively to development education sprang up all over the world. Also, there is a limit to what NGOs can do with limited resources.[19)]

In Korea, the number of NGOs fighting global poverty has been increasing over the years. The number of NGOs fighting global poverty grew from 31 in 2000 to 48 in 2006.[20)] In addition, memberships of the organizations and donation amounts from those individuals have been increasing. Most international development NGOs in Korea focus on featuring projects and campaigning for public interest on developing countries and global poverty by urging the public.

Considering relatively short history of civil society in Korea, the role of NGOs in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assistance is encouraging. Three major non profit organizations addressing development issues-ODA watch, Korean NGOs' Network against Global Poverty, and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Cooperation-have been spearheading attempts to raise the public awareness on ODA and development assistanc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 civil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moting justice and human rights, is also engaging the public. Nevertheless, more NGOs are encouraged to strive for public education and financial resources are to be allocated appropriately.

Another source of information is the media. The media should accept a major share of the responsibility as it is their job to report on what goes on inside and outside of Korea. While people are generous and concerned, they are distant from where the poorest of the poor live. People more and more depend

19) Public Attitud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an Smille and Henny Helmich, OECD and Council of Europe, 1998

20) Study of raising public support for Korea's ODA, Ji-uen Yoon, The thir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ssay writing contest of KOICA, 2007

on the media and the public perception is that if the media does not report it, it must not be happening. In Korea, it is encouraging that coverage dealing with ODA by the media has been increasing.

Last but not the least, the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development aid is getting bigger globally. Of OECD/DAC member countries, the private sector is already a major stakeholde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issues. In fact, many private corporations establish private foundations and contribute to global development issues. In the United States, private foundations have influenced the public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rough strong political powers. They have campaigned for public education and raised awareness on glob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ssistance issues.

In Korea, more and more private companies are diver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from domestic causes toward international ones. Today, CSR is beyond charity or good works. CSR, in the past, was primarily directed at the local community through good will and voluntary work. However, today in Korea, the private sector is looking to become full partners in their communities. Indeed, CSR allows corporation to take into account their full impact on all stakeholders and demonstrates to the public that profit is not their only goal.

## Ⅴ. Conclusions and Further Recommendations

In conclusion, the overall Korea's efforts on public awareness-raising are still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raise the public awareness on development assistance by ensuring the public that development co-operation is not any more a necessity but a must. Concurrently with inter-agency coordination, the Korean government did strategize development issue-oriented public relations, special development assistance featuring broadcast, and development education depending on public relations targets.

Importantly, the Korean government allocated significant amount of budget to promote development awareness. Also, the IDCC is working closely with all government

departments, agencies, and civil society for a better communication to achieve public awareness-raising.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other development communities clearly needs better and more comparable data in order to gain a deeper insight into public attitude towards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o monitor its trends.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is encouraged to develop a better logic against the skepticism of development assistance existing among the Korean public.

For a step-forward,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currently being discussed at the government level in coordination with other stakeholders.

- Creating ODA Archive, Charter, and White Paper is being suggested. The Korean government will discuss further how to plan to inform the Korean public of the objectives, policies and operational implications of ODA effectively.

- Developing a Korean model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dvancing Korea's standpoint clearly on ODA principles is suggested so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able to educate the public in a more persuasive way.

- New public relations tools are being discussed such as internet public relations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ternet PR advertisement, and public-friendly TV/film exposure on development co-operation aiming at *Product Placement* effect.

- Providing sufficient support to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eds more attention. It is in the discussion of establishing more effective tools for supporting civil societies especially aiming of support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desire to educate and create a greater understanding of ODA and overall development issues among the Korean public.

- Surveys on public opinions about development issues will be carried out periodically and the changes will be phased in over the period of the plan. The Korean government will pay more

attention to analyses of survey results and further research.

- Strengthening existing networks to disseminate best practice in public opinion polling for the development issues is encouraged. Best practices in global development education and citizen advocacy related to development assist will provide better picture of future strategies.

# Ⅳ. KOICA 업데이트

1. 2007년 세계빈곤퇴치를 위한 "1017 화이트밴드 콘서트"
   - ㅇ 개 요
   - ㅇ 연설문

     신장범 / KOICA 총재

2. KOICA – 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 모의국제연합 제31차 총회

   :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향한 공적개발원조(ODA)

# 2007년 세계빈곤퇴치를 위한 “1017 화이트밴드 콘서트”

## Ⅰ. 개요

- 일 시 : 2007년 10월 17일(수) 19:00 ~ 22:00
- 장 소 : 여의도 공원
- 주 최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KBS
- 후 원 : KOICA

## Ⅱ. 행사 내용

10월 17일은 1992년 UN이 지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로서 전 세계인들이 빈곤퇴치의 필요성에 대해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120여 개국의 NGO들이 MDGs 달성을 위해 세계적 연대기구인 GCAP(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를 결성했고, 한국에서는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가 대표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KOICA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자리바꿈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되살려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국민들의 지지가 중요함을 언급했다.

## 2007 세계빈곤퇴치를 위한 “1017 화이트밴드 콘서트”
## – 10. 17(수) 19 : 00, 여의도공원 –

# KOICA 총재 빈곤퇴치 메시지

10월 17일 오늘은 1992년 유엔이 “세계빈곤퇴치의 날”로 제정한 뜻 깊은 날입니다.

21세기 우리 인류는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전 세계 인구 여섯 명 중 한명은 하루 1불 미만의 절대적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0년 세계 절대빈곤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천년개발목표(MDGs)를 채택하였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천년개발목표는 세계 빈곤퇴치를 위한 인류 최초의 국제적 약속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의 성공 뒤에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절대적 빈곤을 탈피하여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전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국제사회에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일어나 외치자 ! 지구촌 빈곤퇴치 !"의 슬로건하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는 절대 빈곤의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지구촌 가족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심어주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나눔”은 보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신 장 범

# KOICA –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 제31차 총회 공동개최

## :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향한 공적개발원조(ODA)

정리 : **조 혜 승** / KOICA 홍보실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공동으로 모의국제연합 제31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천년개발목표(MDGs)를 향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의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는 3월 사무국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8월 25일 총회 본회의까지 총 6개월에 걸쳐 국별대표선발, 기금마련, 워크숍 등으로 구성되었다. KOICA는 젊은 인재들의 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에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술지원 및 총회 심사를 비롯해 장소와 통역기기를 지원하였으며, ODA에 대한 참신하고 우수한 내용을 발언한 대표에게 KOICA 총재상을 시상하였다.

## Ⅰ. 모의국제연합

### 1. 역사 및 의제

모의국제연합은 1958년 제 1차 총회(의제 : UN 군축(The Armament Reduction of UN)) 개최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31개의 주요 국제 이슈를 의제로 다루었다. 체코 분쟁(7차)과 중동문제(9차), 국제테러(11차) 등 세계 분쟁문제는 물론 21세기 UN의 역할과 평화 기능(17차), 21세기 시민사회건설을 위한 NGO의 위상과 역할(23차) 등 국제기구, NGO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2. 정부부처 및 기관의 지원

전국 대학생들의 학술토론의 장이 되어온 모의국제연합은 작년(2006)부터 정부부처와 공동주최를 시작했다. '기후변화협약과 국제사회의 책임'을 의제로 개최된 작년 제31차 총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당시 환경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지원과 장소 제공 등을 협조하였다.

〈표 1〉 최근 5년 모의국제연합 의제

| 회 차 | 연 도 | 의 제 |
|---|---|---|
| 31차 | 2007 | 2007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향한 공적개발원조(ODA)<br>- ODA for achieving MDGs |
| 30차 | 2006 | 기후변화협약과 국제사회의 책임<br>-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f climate change and responsbility of international society |
| 29차 | 2005 |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노력<br>- The role and effort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peace in the Middle East |
| 28차 | 2004 | 무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br>-Promot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rade liberalization |
| 27차 | 2003 | 난민에 관한 국제 사회의 협력증진<br>- The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society' s cooperation on refugees |

## 3. 제31차 총회 (KOICA 공동주최)

KOICA는 천년개발목표(MDGs)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청년들의 ODA에 관한 논의를 적극 후원하기 위해 이번 제31차 총회를 공동주최하였다.

■ 워크숍 및 세미나, 총회 심사 등 학술지원

– KOICA는 모의국제연합 워크숍 및 세미나에 참석해 각국 대표들에게 빈곤퇴치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과 한국의 ODA 역사, 선진공여국의 원조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 및 민간과의 협력 등을 강의하였다. 또한 총회 당일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각국대표의 기조연설 및 토론을 심사했으며, ODA에 대한 참신하고 우수한 내용으로 발표한 폴란드 대표에게 KOICA 총재상을 시상하였다.

■ 국제개발협력 사진전 및 홍보

– KOICA는 총회 당일 COEX 그랜드 컨퍼런스 룸에 국제개발협력 사진전을 개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실상과 우리나라의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 국별 · 분야별 사업내용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모의국제연합 총회와 더불어 천년개발목표, 우리나라의 ODA에 관한 내용을 언론에 적극 홍보해 국민들의 ODA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 장소, 통역장비 임대

– 모의국제연합 총회의 규모가 해마다 증대됨에 따라 KOICA는 이번 총회를 위해 COEX 그랜드 컨퍼런스 룸과 세미나실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임대하였으며, 보조좌석을 배치해 전국에서 참가한 약 1,000명을 수용하였다. 또한 참가자 개인에게 통역장비를 임대해 실제 국제회의와 같은 형태의 회의 진행

을 경험하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왔다.

## Ⅱ. 각국대표 주요 발언내용

### 1. OECD 국가 대표

■ 개발협력과 천년개발목표는 전 세계가 개입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일부 몇몇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공여국과 공여국, 수원국과 공여국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추구할 때 우리의 원조는 보다 값진 것이 될 수 있다. (프랑스 대표/성인혜)

■ 독일은 2007년 EU와 G8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양질의 거버넌스에 역점을 두는 '개발을 위한 뉴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질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에 입각한 수원국의 주도적인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여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독일 대표/임미경)

■ 일본은 지난 수년간 세계 최대의 ODA 공여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원조는 다자간 협력과 노력이 요구되는 문제이니만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본 대표/전주연)

■ 미국은 절망이 만연한 희망의 불모지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와 함께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외교지원을 대표적으로 늘리는 한편, 빈국들의 자발적인 갱생을 위해 전례 없는 무역장벽 철폐 및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대표/김성태)

### 2. 개발도상국 대표

■ 뉴 파트너십은 선진국의 인도주의와 개도국의 주인의식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집트는 2001년에 성립된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촉구한다. 이는 대 아프리카 원조의 사용을 일괄적으로 평가、감시하는 기구의 운영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투명한 원조의 운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집트 대표/김종성)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페르타이트로부터 벗어나고부터 민주주의 공고화, 흑인기업 강화 정책, 성장 분배 촉진 이니셔티브 등 정책에 오너십(ownership)을 발휘해 원조 수원국 명단에서의 졸업을 앞두며, 아프리카 대륙을 대변하여 말하고자 한다. OECD DAC 회원국과 여러 선진국이 공언한 GNI 대비 0.7% 규모의 원조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노성자)

■ 주요 공여국의 원조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에 힘입어 현재 베트남은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성장에 바탕이 된 것은 베트남의 효율적인 ODA 자금 운용이다. 지금까지 ODA 자금은 경제성장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 직접, 간접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본국은 ODA 자금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확신한다. (베트남 대표/이은영)

### 3. 폴란드 대표(KOICA 총재상 수상)

■ 1980년대 말,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 세계는 빠른 속도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폴란드는 공산주의 체제 이전과 이후, 경제적、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으며, 2004년 5월 EU 가입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변국의 도움과 지원이 없었더라면 폴란드는 공산주의의 폐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일 것이다.

■ 해외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다. 세계화가 촉진되는 21세기에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들의 개발원조는 국가간 빈부격차 문제 해결을 통한 지구촌 후생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원조는 더 이상 국제원조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국가발전 의지와 노력 또한 필요하다. 폴란드가 공산주의의 체제에서 벗어나 지금의 경제발전 수준까지 오는 데에는 주변국의 원조와 더불어 자국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요구되는 지침 중 하나가 바로 New Partnership이다. (폴란드 대표/정혜미)

**국제개발협력** 2007년 제3호

| | |
|---|---|
| 발 행 | 2007년 11월 |
| 발 행 인 | 신 장 범 |
| 발 행 처 | 한국국제협력단 |
| 편 집 인 | 정책연구실, 홍보위원회 |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71 ㉾110-782 |
| 전 화 | (02)740-5656 |
| 팩 스 | (02)740-5682 |
| 홈 페 이 지 | www.koica.go.kr |
| 인 쇄 | 산하기획인쇄 TEL.(02)2272-5002(代) |